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ULSAN METROPOLITAN CITY ILJU-GUN COUNCIL

# 울주군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최종 보고서

울주인구정책연구회





##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울주군의회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3월

## 제 윤 의 정

이 보고서는 제윤의정이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울주군의회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제1장 연구 개요

1. 과업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	1
2. 과업 배경 및 목적 .....	1
3. 과업 내용 .....	1
제2장 인구정책 추진 현황 분석 .....	8

## 제1절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

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9
2.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2
3.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15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1~' 25) .....	19

## 제2절 지역별 인구정책 관련 제도 .....

1. 인구정책 관련 조직 .....	24
2.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 .....	25

## 제3절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1. 서울특별시 .....	26
2. 부산광역시 .....	30
3. 대구광역시 .....	33
4. 인천광역시 .....	37
5. 광주광역시 .....	38

6. 대전광역시	40
7. 세종특별자치시	42
8. 울산광역시	44
9. 울주군	45
10. 강원도	47
11. 충청북도	50
12. 충청남도	52
13. 전라북도	54
14. 전라남도	56
15. 경상북도	58
16. 경상남도	61
17. 제주특별자치도	63
18. 종합	66

### 제3장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인구 현황

#### 제1절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및 연령별 인구 및 세대 현황 ...70

1.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거주자 현황	70
2.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	71

#### 제2절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 .....73

1.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	73
2.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인구증감	75
3.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2023년 10월 기준)	76

4.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 .....	83
5.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고령 인구 현황 .....	85

## 제4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환경·안전 현황

### 제1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 현황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형태(2022년 기준) .....	87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혼 및 자녀 계획(2022년 기준) .....	88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 기피 사유(2022년 기준) .....	90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삶 및 생활 만족도(2022년 기준) .....	92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요 복지정책 인식(2022년 기준) .....	93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2022년 기준) .....	94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2022년 기준) .....	95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 복지 향상 중점 분야(2022년 기준) .....	95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 개선 시 중요사항(2022년 기준) .....	96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복지 우선 사항(2022년 기준) .....	97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복지정책 (2022년 기준) .....	97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정책 (2022년 기준) .....	98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지환경 만족도(2022년 기준) .....	98

### 제2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 현황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 불안 요인 .....	10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	100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교통 안전 .....	101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 안전 .....	101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안전 .....	102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 위험 인식 .....	102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반적인 사회 안전 인식 .....	103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업(이직) 및 창업 인식 .....	104
<b>제3절 2022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관련 정책 .....</b>	<b>106</b>
1.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주 군립병원 설립 .....	106
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107
3. 복합문화공간 울주문화원사 건립 .....	107
4. 거점형 체육공원 및 실내체육센터 건립 .....	108
5. 울주복지재단 설립 .....	109
6. 행복 누림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	110
7. 맞춤형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 .....	111
8.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 .....	111
9.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112
10. 아동친화도시 조성 .....	113
11. 가족센터 운영 및 건립 .....	114
12. 우리 아이들의 무지갯빛 미래, 영유아 복지 .....	115
13. 안심 보육환경 조성 .....	115
14. 당당한 청소년! 성장 친화정책 .....	116
15. 아동 행복돌봄 프로젝트 .....	117
16. 보호아동의 최상이익을 위한 서비스 지원 .....	118

17. 드림스타트 .....	119
18. 지역아동센터 .....	120
19. 다함께돌봄센터 .....	121
20.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122
21.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 .....	123
22. 울주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운영 .....	123
23. 청년이 든든한 청년일자리 지원 .....	124

## 제5장 국내 및 해외 인구정책 사례

### 제1절 국내 인구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청년 일자리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2년) .....	126
2.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행정안전부, 2023년) .....	134

### 제2절 국외 인구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헝가리 인구정책 .....	138
2. 프랑스 정주성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	144

## 제6장 결 론

### 제1절 울주군 인구 및 사회·환경 특징 .....

1. 전국 인구가동 특징 요약 .....	148
2. 울주군 인구 및 사회·안전 환경 특징 .....	151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요약 및 시사점 .....	154

제2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및 제안 .....160

1. 인구 관련 정책 지원체계 구축 조례 개정 .....160
2. 지역 여건 및 울주군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인구정책 추진 .....162
3. 인구 정착 기반 확충 마련 .....169
4. 울주군 유희·공간시설 종합자산관리 및 혁신적 활용 .....169

[참고문헌]

- [부록1] 전라남도 화순군 벤치마킹 .....171
- [부록2] 행안부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사업 .....184
- [부록3]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사업 .....185
- [부록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가구 지원 조례(안) 및 사업(안) .....187

# 표 목차

[표 1] 세부 과업 및 연구내용표 .....	6
[표 2]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	9
[표 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	11
[표 4]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	13
[표 5]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	16
[표 6] 제3차 기본계획(수정)의 주요 사업 .....	17
[표 7]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	21
[표 8] 정책유형별 중앙부처의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 .....	22
[표 9]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정책 예산	23
[표 10] 지역별 인구정책담당 행정조직 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	24
[표 11] 지역별 인구정책관련 자치법규 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	25
[표 12]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추진 방향 .....	27
[표 13]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 .....	33
[표 14] 대구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12대 중점과제 .....	36
[표 15] 광주광역시의 인구정책 .....	40
[표 16] 충청북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현황 분석 .....	51
[표 17] 전라남도 인구정책 주요 내용 .....	57
[표 18]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	61
[표 1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 추진 과제 .....	62
[표 20] 2020년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 주요 세부 사업 .....	62
[표 21] 울산 울주군 총 인구수 현황표(2023년 11월 기준) .....	71
[표 22] 울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연령별 인구 현황표(2023년 11월 기준) .....	72

[표 23]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 연령(2023년 11월 기준) .....	73
[표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평균 연령 .....	74
[표 25]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2023년 11월 기준) .....	77
[표 26] 울산광역시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현황(2023년 10월 기준) .....	83
[표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분포 ..	84
[표 28] 울산광역시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표(2023. 11월 기준) .....	85
[표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부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	86
[표 30] 울산광역시 지역별 거주형태 형태 .....	87
[표 31] 울산광역시 지역별 거주형태 만족도 .....	88
[표 32] 주택 점유 형태(단위: %) .....	88
[표 33] 결혼 계획 .....	89
[표 34] 전국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에 대한 견해 .....	89
[표 35] 전국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89
[표 36] 자녀 의향(남성) .....	90
[표 37] 출산 기피 사유(남성) .....	91
[표 38] 출산 기피 사유(여성) .....	91
[표 39] 최근 자신의 삶 만족도 .....	92
[표 40] 최근 생활 만족도 .....	92
[표 41] 필요 복지정책 인식(남성) .....	93
[표 42] 필요 복지정책 인식(여성) .....	94
[표 43]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	94
[표 44]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	95
[표 45] 여성복지 향상 중점분야(남성, 중복응답) .....	95

[표 46] 여성복지 향상 중점분야(여성, 중복응답) .....	96
[표 47] 보육환경 개선 시 중요사항 .....	96
[표 48] 장애인복지 우선 사업(중복응답) .....	97
[표 49]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	97
[표 5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 서비스 .....	98
[표 51] 녹지 환경 체감도 .....	98
[표 52] 환경문제 우선 개선사항 .....	99
[표 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 불안 요인 .....	100
[표 54]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 .....	101
[표 55] 교통사고 안전 인식 .....	101
[표 56] 화재 안전 인식 .....	102
[표 57] 떡거리 안전 인식 .....	102
[표 58] 범죄 위험 인식 .....	103
[표 59] 전반적인 사회 안전 .....	103
[표 60] 취업 및 창업 의사(남성) .....	104
[표 61] 취업 및 창업 의사(여성) .....	104
[표 62] 창업 희망 분야(남성) .....	105
[표 63] 창업 희망 분야(여성) .....	105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흐름도 .....	7
[그림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10
[그림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2
[그림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15
[그림 5] 제4차 기본계획 .....	19
[그림 6]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키워드 .....	28
[그림 7]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방향 .....	30
[그림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31
[그림 9]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34
[그림 10]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35
[그림 1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37
[그림 12] 광주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38
[그림 1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39
[그림 14]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41
[그림 15]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43
[그림 16]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키워드 .....	43
[그림 17] 울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45
[그림 18]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	45
[그림 19] 울주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47
[그림 20] 울주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	47
[그림 21]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49
[그림 22]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	49

[그림 23]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	50
[그림 24]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전 전략	50
[그림 25] 충청북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51
[그림 26]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53
[그림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53
[그림 28]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55
[그림 29] 전라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55
[그림 30] 전라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57
[그림 31] 경상북도 인구정책 방향(저출산 대책)	58
[그림 32] 경상북도 인구정책 방향(고령사회 정책)	59
[그림 33] 경상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60
[그림 34] 경상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63
[그림 35] 제주 인구정책의 방향	64
[그림 3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65
[그림 3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키워드	66
[그림 3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거주가 현황(2023. 11월 기준)	70
[그림 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3년 1월 ~ 11월)	71
[그림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3년 1월 ~ 11월)	72
[그림 41]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	73
[그림 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	74
[그림 43] 울산광역시 인구증감(2018~2022년)	75
[그림 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감(2018~2022년)	75
[그림 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감(2018~2022년)	76

[그림 46]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 .....	76
[그림 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대별 세대 수 .....	77
[그림 48]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1인 세대 .....	78
[그림 49]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2인 세대 .....	78
[그림 50]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3인 세대 .....	79
[그림 51]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4인 세대 .....	79
[그림 52]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5인 세대 .....	80
[그림 53]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6인 세대 .....	80
[그림 54]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7인 세대 .....	81
[그림 55]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8인 세대 .....	81
[그림 56]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9인 세대 .....	82
[그림 57]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10인 세대 .....	82
[그림 58] 울산광역시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현황(2023. 11기준) ....	83
[그림 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현황 .....	84
[그림 60] 울산광역시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	85
[그림 61]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	86
[그림 62] 인문청년 기술인재 전환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129
[그림 63] 인천테크노파크 정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131
[그림 64] 광주지역 뉴딜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	131
[그림 65]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체계 .....	132
[그림 66]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내용 중 개인별 1:1 맞춤 프로그램 프로세스 .....	134
[그림 67] 수원시 500인 원탁토론회 개최결과 예시 .....	162
[그림 68] 김해시 희망일자리버스 리플렛 .....	165



## 제1장 연구 개요

### 1. 과업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가 정책 개발 연구

### 2. 과업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울주군 인구정책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행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방안 모색을 통해 울주군에 적합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울주군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인구 유입 및 인구 증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분야별 구분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발굴

### 3. 과업 내용

- 인구통계 데이터 분석
  - 인구구조 분석
    - 총인구수, 연령대별, 성별, 출생률, 사망률 등을 분석하여 인구구조를 파악함
    - 인구구조 분석을 통해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거나 출산율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인구이동 분석
    - 인구 유입 및 유출의 원인과 경로를 분석함
    - 인구이동 분석은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결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는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 인구의 지역적 특성 분석

- 인구 밀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인구 분포, 행정 구역별 인구 등을 분석함
- 인구의 지역적 특성 분석은 지역 간 생활 인프라 투자나 복지, 의료 서비스 배치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 미래 인구 예측

- 인구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미래의 인구 동향을 예측함
- 미래인구 예측은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 정보임

□ 자치법규 분석

○ 자치법규의 내용 파악

- 울주군 자치법규와 정책을 분석하여 그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파악함

○ 자치법규의 영향 분석

- 법규나 정책이 인구 동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며, 이를 통해 특정 자치법규가 출산율, 고령화 등 인구 동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자치법규 비교분석

- 울주군과 유사한 자치단체나 국가의 법규와 비교하여, 울주군의 자치법규가 인구정책 관점에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

○ 인구정책 제안

- 자치법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울주군의 인구정책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

치법규나 정책의 제안을 준비함

□ 정책조사 분석

○ 울주군 출산 지원 정책분석

-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 보육원 비용 보조, 보육시설 확충, 일자리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책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육아 휴직 제도를 보완하거나 확장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위한 정책

○ 울주군 고령화 대응 정책

-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 운영, 건강검진 서비스 등 관련 정책
- 노인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동 및 영양 교육 등 관련 정책
- 고령화 사회에 맞는 주택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센터의 설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 관련 정책

○ 울주군 인구 유입 지원 정책

- 신규 거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이나 주택 구입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신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 등)
-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를 둔 가족들의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
-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주민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 지역의 매력과 장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 울주군 귀농·귀촌 지원 정책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어업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고, 농·어업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
- 농·어업 사업을 시작하거나 농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 귀농·귀촌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울주군 소수자 지원 정책

- 고려인에게 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등이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 탈북자들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책
- 외국인들에게는 언어 교육, 문화교육, 근로자 권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정책
- 다문화 가정에 교육 지원, 경제적 지원, 문화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제

공하여 지역사회가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

□ 설문조사

○ 인구학적 정보

-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학력, 가족 구성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함
-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맥락적 인사이트를 제공함

○ 전입/전출 정보

- 전입 또는 전출한 시기, 이전 거주지(전출자에게) 또는 새로운 거주지(전입자에게) 등의 정보를 수집함

○ 전입/전출 이유

- 전입 또는 전출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며, 일자리, 학교, 가족, 주거환경, 생활 비용,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임
- 예를 들어, “왜 이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나요?” 또는 “왜 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음

○ 지역 만족도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며, 주거환경, 학교, 공공 서비스, 안전성,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함

○ 지역 정책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며, 어떤 정책이 전입 또는 전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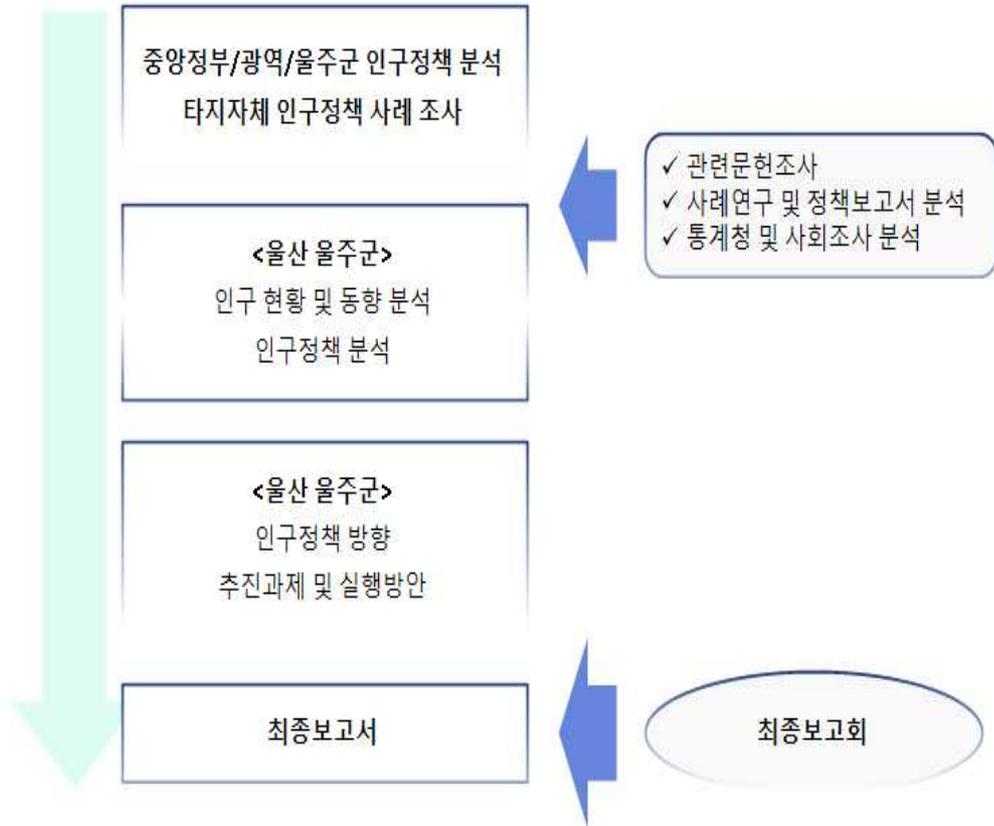
○ 개선사항 제안

- 거주지역을 개선하거나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표 1] 세부 과업 및 연구내용표

세부과업	연구내용	연구 방법
인구변동 추이 분석	연도별 인구변동 추이 분석(총인구, 출생 및 사망, 전입 및 전출) 읍면동별 인구변동 추이 분석(총인구, 출생 및 사망, 전입 및 전출)	인구통계 데이터 분석
자연 출생 인구 증가	연도별 출생률 현황(전국, 울주군, 울산광역시 등) 출산정책 분석(전국, 울주군, 울산광역시 등)	인구통계 데이터 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분석
고령화 해결	연도별 고령인구 및 고령화 추이 분석 읍면동별 고령인구 및 고령화 추이 분석 울주군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도 산정 고령화 해결을 위한 방안 연구	인구통계 데이터 분석 선행연구 조사
인구유입	울주군 전입 및 전출 요인 분석 유사 지자체 전입 지원 정책 및 조례 분석 - 신혼부부 유입 방안 제시 등	설문조사 (논의 후 결정) 자치법규 및 정책분석
소수자 정책	울주군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선행연구 검토 울주군 고려인 및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울주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실태조사 (논의 후 결정) 선행연구 조사
인구증가 정책방향	인구 유입을 위한 타 지자체 정책 비교 산업 부문, 주거 부문, 문화교육 부문 조례연구	정책분석 자치법규 분석

[그림 1] 연구 흐름도



## 제2장 인구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제1절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 인구정책(population policy)은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삼식, 2014)
  
-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이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을 조절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행동계획 및 원칙(김태현, 2006)
  
- 실질적인 인구정책은 인구조정 정책을 의미하며 인구성장·억제 정책, 인구 분산정책, 인구자질향상 정책이 포함(김인춘·최정원, 200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4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저출산 기본법 제21조 시행령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표 2] 저출산 및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정책
인구정책(제7조) 인구교육(제7조의2)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제8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제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고령과 소득보장(제11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제15조) 노후설계(제15조의2) 취약계층노인 등(제16조)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제17조) 경제와 산업 등(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정부는 2006년 8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출산율 하락 추세를 전환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이라는 4대 추진 분야에서 230개 세부 과제를 설정

- 이후 2008년 12월에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도입된 정책과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보완판을 수립하여 237개 세부 과제를 추진

[그림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p.38.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저출산 대책)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목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년 12월),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15~30시간) 도입 등
- (고령사회 대책) 노후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시행('08년),

국가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8년 7월) 시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06년 12월),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표 3]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분야	세부 분야	주요 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li> <li>•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li> <li>• 육아지원 시설 확충</li> <li>•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li> </ul>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li> <li>•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li> <li>•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사회 교육 강화</li> </ul>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 아동 보호체계 구축</li> <li>•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보호 강화</li> <li>• 빈곤아동의 자활·자립 지원</li> </ul>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li> <li>• 퇴직연금제도 확대, 개인연금 활성화</li> </ul>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li> <li>•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li> <li>•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li> </ul>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li> <li>•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li> </ul>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li> <li>•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li> <li>•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li> </ul>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li> <li>•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li> <li>•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li> </ul>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li> <li>•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li> </ul>
	고령친화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 제품 기술개발 촉진</li> <li>• 역모기지제도 및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li> </ul>

자료: 제1차 기본계획(보완편) 재구성

- 제1차 기본계획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Agenda)로 설정하여 각종 법령·제도의 정비를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으나, 정책 대상 집단이 주로 저소득층에 한정되었고 특정 영역(보육 지원 등)에 지원이 편중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

## 2.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정부는 2010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이라는 3대 추진 분야에서 231개 세부 과제를 추진

[그림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20.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반영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와 중산층 이

상 노인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

[표 4]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과 과제

분야	세부 분야	주요 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li> <li>•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등 제도개선</li> <li>•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li> <li>•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li> </ul>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li> <li>•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li> <li>•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li> <li>•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li> </ul>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li> <li>•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li> <li>•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li> </ul>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li> <li>•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li> <li>•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li> <li>• 노후설계 기반조성</li> </ul>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li> <li>•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li> <li>• 노년기 주요 질환 관리체계 구축</li> <li>•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li> </ul>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li> <li>•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li> </ul>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li> <li>•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외국인력 유치</li> <li>•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li> </ul>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li> <li>• 중·장기 주택계획 수립 및 장기 금융시장 활성화</li> <li>•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li> </ul>
	고령친화사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 제품 기술개발 촉진</li> <li>•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li> <li>•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li> </ul>

자료: 제2차 기본계획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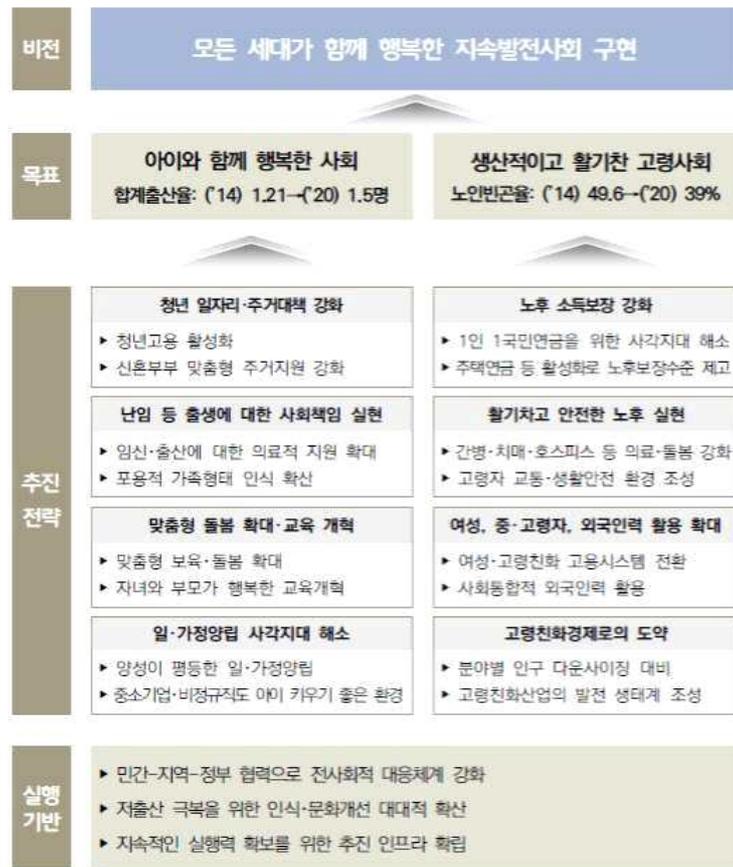
- 제2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국가책임의 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만혼 심화 등으로 인해 합계출산율이 반등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

- 또한,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연금·장기 요양보험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됨

### 3.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2015년 12월 수립된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수립

[그림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41.

-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5년간 197.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총 13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정책 목표와 관련이 낮은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됨

[표 5]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분야	세부 분야	주요 과제
저출산 대책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li> <li>•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li> <li>• 신혼부부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li> </ul>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li> <li>•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다문화 가정 맞춤형 서비스 확대</li> </ul>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돌봄 사각지대 해소</li> <li>•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li> <li>• 공교육의 역량 강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li> </ul>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확산</li> <l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li> </ul>
고령사회 대책	노후소득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li> <li>•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li> </ul>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li> <li>•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li> <li>•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li> </ul>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li> <li>• 중·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li> <li>• 해외우수인재 유치기반 강화</li> </ul>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 관광산업 및 식품산업 육성</li> <li>•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 인구다문화사우징 대비 강화</li> </ul>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민간·지역·정부 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각 부문별 저출산 극복 운동 추진</li> <li>• 국민 참여 통로 다각화</li> </ul>
	홍보·인식개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li> <li>•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li> </ul>
	중앙·지방의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li> <li>• 저출산위 기능 강화</li> </ul>

자료: 제3차 기본계획 재구성

[표 6] 제3차 기본계획(수정)의 주요 사업

분야	세부 분야	주요 과제
저출산 대책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지급, 안전한 출산</li> <li>다자녀 지원 확대,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li> </ul>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참여 확대</li> <li>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육아휴직 제도 개편</li> </ul>
	튼튼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의 공공성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li> <li>온종일 돌봄, 가정 내 돌봄 지원, 지역 협력체계 강화</li> </ul>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아동 대상 차별없는 보호 여건 마련</li> <li>포용적 가족문화 조성</li> </ul>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된 일자리, 차별 없는 일자리 조성</li> <li>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교육혁신</li> </ul>
고령사회 대책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층적 노후보장소득체계 내실화, 공적연금 역할 강화</li> <li>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강화</li> </ul>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li> <li>활기찬 노후를 준비하는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li> </ul>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지원</li> <li>고령자 대상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li> </ul>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건강 관리, 돌봄·요양 및 주거·환경 조성</li> </ul>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li>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li> </ul>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사회시스템 및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구조 변화 대응 핵심분야 대책 마련</li> <li>지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인구 대응 사업 활성화</li> </ul>
	인구 변화 대응 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li> <li>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li> </ul>

자료: 제3차 기본계획(수정), 2019~2020년 시행계획 재구성

-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진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응 정책 시행
- 주요 정책 부문에 걸쳐 비용지원 확대를 주축으로 복지 차원의 정책 기본체계 정립, 인프라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인식의 저변과 제도 기반 마련에는 기여하였으나 보편적 복지의 수준 높은 단계에는 여전히 미달
-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인구의 질’ 향상의 바탕이 되는 여러 핵심정

책 아이디어들과 세부 정책과제들이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 및 구현  
-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5개년 단위로 분절적, 단속적으로 정책 모듬에 진퇴를 반복하는 사업 과제들이 적지 않았음

- 인구정책의 장기적 속성, 정책효과의 긴 호흡 등을 감안할 때, 정책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조급했고 정책 규모와 성숙도의 최고 수준도 보장되지 않은 사례들이 적지 않음

○ 적시되는 성과의 대부분은 단순한 복지 수준 제고와 사회안전망 저변 확대로 귀결, 즉 복지정책 차원의 성과에 국한

- 임신·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다자녀 가정지원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차별화 부족

####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1~' 25)

- 2020년 12월 15일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구현을 위해 3대 기본방향(성평등, 삶의 질, 미래 준비), 4대 전략과 21대 중과제 제시

[그림 5] 제4차 기본계획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43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2021년 시행계획 마련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총사업비 7조 2,693억원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47%(2,927억원),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20%(1,241억원),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 21%(1,320억 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 12%(729억 원)
-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 방향은 양육·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 투자를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영역 확장

[표 7]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분야	세부 분야	주요 과제
저출산 대책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li> <li>·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li> </ul>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성차별 피해구제·예방 강화</li> <li>· 여성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li> </ul>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li> <li>·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li> </ul>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li> <li>·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 및 아동 보호안전망 강화</li> </ul>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li> <li>· 생애 전반 생식건강 및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보장</li> </ul>
고령사회 대책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소득공백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li> <li>· 공·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li> <li>·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li> </ul>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li> <li>·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li> <li>·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지원</li> </ul>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li> <li>·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li> </ul>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li> <li>·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li> </ul>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li> <li>·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li> </ul>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공공성 강화·격차완화</li> <li>·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li> <li>· 취창업 지원 등 전문인재로서 성장경로 구축</li> </ul>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 생애경력개발</li> <li>· 평생교육·직업훈련 다양화 확대</li> <li>·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된 삶의 여건을 위한 일자리 및 주거 안정 지원</li> <li>·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li> </ul>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유지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li> <li>·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li> </ul>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퇴직 후 전문성 활용 기회 및 신중년 사회참여 확산</li> </ul>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아동양육 지원</li> <li>·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li> </ul>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li> <li>·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li> </ul>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노동 포용 사회안전망</li> <li>· 개인단위 소득보장 및 다양한 노동 보호</li> </ul>
	지역상생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공존 지역사회 지원</li> <li>·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li> </ul>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친화기업·산업 육성</li> <li>· 사회시스템 수급 조정 및 지속가능성 제고</li> </ul>

자료: 제4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재구성

[표 8] 정책유형별 중앙부처의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지원

대상	현금성 지원	서비스 지원
영유아·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Ⅱ) '22년 신규도입위한 차질없는 준비(법령개정 등)</li> <li>영아수당: '22년 단계적 도입, '25년 월 50만원</li> <li>첫만남 꾸러미(Ⅱ): 아동 출생시 200만원 바우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li> <li>온종일돌봄 지속 확충</li> <li>초등돌봄교실 700실,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등</li> </ul>
청소년·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3.1만 가구)</li> <li>청년의 자상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저축계좌 지원 확대(365천명)</li> <li>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디지털 분야 50만원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1.7만명)</li> <li>청년 행복주택 1.0만호, 패입·전세임대주택 3.0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공급</li> <li>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li> <li>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연400→500만원)</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상향(18→19세)</li> <li>저소득 출산가정 '산모 회복, 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확대(중위소득 120→1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평등한 일터 조성</li> <li>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추진</li> <li>노동위원회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 신설</li> <li>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 확대(60→75개소)</li> </ul>
아동양육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만남 꾸러미 도입 준비(임신시, '22년-)</li> <li>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60→100만원)</li> <li>육아휴직 지원 신설·확대('22년-)준비</li> <li>특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li> <li>육아휴직 소득대체를 인상(80%, 150만원)</li> <li>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li> <li>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 200만원)</li> <li>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최대 월 1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확대</li> <li>임대주택 0.5만호 공급</li> <li>중형주택(전용60-85㎡)신규도입</li> <li>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건설) 1.6만호 공급</li> <li>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li> <li>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활성화</li> <li>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li> </ul>
중장년·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li> <li>기초연금 최대 수금액 대상자 확대(소득 하위 40%→7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일자리 등 확대(80만개)</li> <li>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연 최대 960만원)</li> <li>건강생활 실천 위한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실시</li> <li>신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2000호)</li> <li>ICT 기술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충</li> </ul>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총 35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서 72.7조원으로 저출산 분야에 64%(46.7조 원), 고령사회 분야에 36%(26.0조 원) 를 투입

- 보건복지부 107개(35조 3,356억 원), 국토교통부 16개(23조 3,168억 원), 고용노동부 65개(6조 376억 원), 교육부 42개(5조 1,378억 원), 여성가족부 41개(1조 4,168억 원) 등

○ 신혼부부 주거 구입, 전세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청년 임대출자·용자 등 주거 관련 지원이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이 25.9%로 188, 581억 원임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직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지원이 34.4%로 나타남

[표 9]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중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 정책 예산

(단위: 억원, %)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정책		
직접 지원	현금	육아휴직급여, 출산휴직급여, 아동수당 등	61,791 (8.5%)	기초 연금	기초연금	188,581 (25.9%)
	서비스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등	114,570 (15.8%)			
	의료비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난임지원 등	3,038 (0.4%)	취업 지원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44,181 (6.1%)
간접 지원	고용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등	42,198 (5.8%)	복지·의료	생계급여, 치매관리 등	21,557 (3.0%)
	주거	신혼부부 주거 구입, 전세 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청년임대출자·용자 등	229,833 (31.6%)			
	교육	교육급여 등	6,496 (0.9%)	기타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5,635 (0.8%)
	기타	인식개선, 시스템 구축 등	8,919 (1.2%)			
예산액(%)			466,846 (64.2%)	예산액(%)		259,953 (35.8%)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제1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는 임신·출산, 보육료 지원, 육아 휴직 등 기혼 부부의 출산 장려·양육 부담 경감, 고령 사회정책의 경우에는 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 의료 및 돌봄에 중점
- 제4차 기본계획에는 청년, 아동, 베이비붐 세대 등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다양한 가족 지원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절 지역별 인구정책 관련 제도

### 1. 인구정책 관련 조직

- 인구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2021년 9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광역자치단체로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지역별 인구정책 담당 행정조직은 주로 기획조정실 기획관 소속 인구정책팀으로 구성(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 또한 청년정책 담당 부서 내 인구정책팀(충북, 전북, 전남)
  - 보육 및 여성정책 담당 부서 내 인구정책팀(울산, 경북)

[표 10] 지역별 인구정책담당 행정조직 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지역	행정조직	전담조직 유무
서울	기획조정실 > 기획담당관 > 인구변화대응팀	○
부산	기획조정실 > 기획관 > 기획담당관 > 인구정책팀	
대구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미래인구정책팀	
울산	복지여성건강국 > 복지인구정책과	
경기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인구정책담당관	
강원	정책기획관 > 인구정책팀	
충북	기획관리실 > 청년정책담당관 > 인구정책팀	
전북	기획조정실 > 대도역청년과 > 인구정책혁신팀	
전남	인구청년정책관 > 인구정책팀	
경북	아이여성행복국 > 인구정책과	
경남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제주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비전·인구정책팀	
인천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x
광주	여성가족국 > 출산보육과	
대전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담당관	
세종	보건복지국 > 여성가족과	
충남	저출산보건복지실 > 출산보육정책과	

자료: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 2.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

- 지역별 인구정책 관련 자치법규는 2021년 9월 현재 조례와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80건, 기초자치단체는 595건이 제정되었으며, 인구 관련 211건, 출산 관련 167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35건, 고령 관련 652건 등 총 642건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
- 특히 고령 관련 자치법규(광역 47개, 기초 215개)가 다수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광역 5, 기초 39), 충남(광역 5, 기초24), 경북(광역 4, 기초 22)순으로 가장 많음

[표 11] 지역별 인구정책관련 자치법규 현황(2021년 9월 30일 기준)

(단위: 건)

지역	광역					기초					합계
	인구	출산	저출산 고령사회	고령	소계	인구	출산	저출산 고령사회	고령	소계	
서울	-	-	-	4	4	-	9	-	23	32	36
부산	3	1	-	2	6	3	13	1	4	21	27
대구	1	2	-	-	3	4	5	-	5	14	17
인천	-	1	-	3	4	4	6	3	5	18	22
광주	1	-	-	4	5	3	3	-	8	14	19
대전	1	1	-	2	4	5	2	-	3	10	14
울산	1	1	-	2	4	2	5	-	4	11	15
세종	1	1	-	3	5	-	-	-	-	0	5
경기	3	-	1	5	9	12	27	15	39	93	102
강원	1	-	-	2	3	23	10	1	12	46	49
충북	1	-	-	-	1	13	11	3	9	36	37
충남	1	-	-	5	6	18	7	3	24	52	58
전북	1	-	2	1	4	18	15	-	20	53	57
전남	2	-	-	4	6	32	14	2	16	64	70
경북	1	2	-	4	7	31	22	4	22	79	86
경남	1	-	-	3	4	23	8	-	21	52	56
제주	1	1	-	3	5	-	-	-	-	0	5
<b>합계</b>	<b>20</b>	<b>10</b>	<b>3</b>	<b>47</b>	<b>80</b>	<b>191</b>	<b>157</b>	<b>32</b>	<b>215</b>	<b>595</b>	<b>642</b>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절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정책

#### 1.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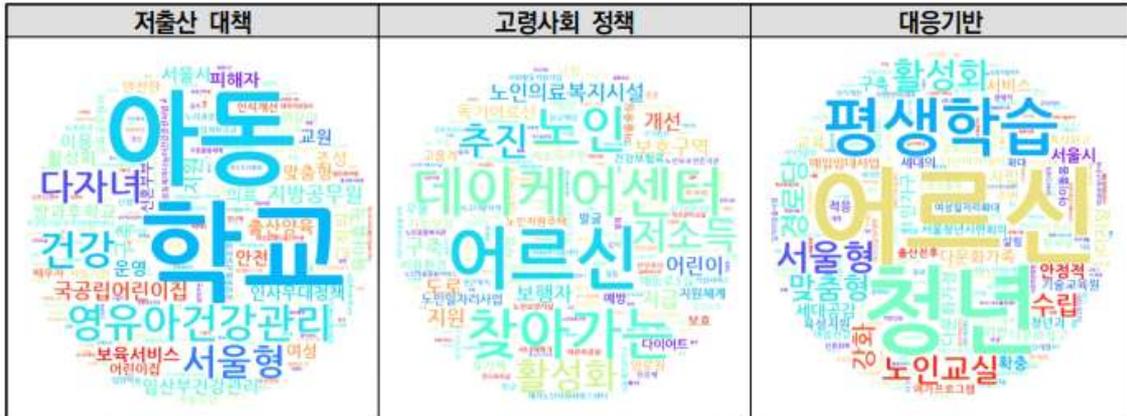
- 서울시는 2017년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를 구성하여 운영, 2018년 아이 돌봄 전담부서 신설, 2019년 조례 제정
  - 최초로 ‘우리동네키움센터’ (’ 18년 4개소 →’ 19년 98개소), ‘열린 육아방’ (15년 30개소→ 19년 74개소) 등 지역사회 내 공동돌봄 인프라 확충
  
-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1인,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접근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청년) 청년 미래 투자 기금 조성
  -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에 포함된 청년 사업으로, 청년들의 조기 자산 형성을 도와 진로 모색, 역량 강화, 취·창업 활동 지원
  -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 미래 자금(취업 및 창업 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 1인당 최대 3,000만 원(연간 500명, 4년간 총 1,000억 원) 을 지원
  -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으로써, 기초자산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표 12]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추진 방향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정책	
비전	모두가 삶의 권리를 누리는 지속가능한 서울	비전	어르신이 살기 편하고 다함께 건강한 보람찬 서울세
목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균형 달성	목표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정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정, 시스템 마련</li> <li>•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li> <li>•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li> <li>• 청년,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경제력 향상과 사회기여도 제고</li> </ul>	정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년에도 살던 지역에서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li> <li>• 신중년(50-64세)의 스마트한 노년준비와 보람찬 어르신일자리 보장</li> <li>• 예방적 보건과 체계적 일상생활 지원으로 병원, 장기요양 진입 예방</li> <li>• '어르신'에 대한 인식전환과 세대 간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li> </ul>
핵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라밸) 일·생활균형 지원,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등</li> <li>- (성평등 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 성평등임금 공시 등</li> <li>- (아동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li> <li>- (아동 기본권) 아동수당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li> <li>- (성·재생산권) 서울야기 방문 건강 관리,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li> </ul> </li> <li>•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훈련)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 취약계층 취업능력 제고 등</li> <li>- (경력 유지) 여성일자리 확대 및 취·창업 지원 등</li> <li>- (청년의 삶)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li> </ul> </li> <li>•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역량 강화 지원, 한부모 자립지원 등</li> <li>- (세대 교류) 가족 소통·공감 증진, 위기예방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한 세대 통합</li> </ul> </li> </ul>	핵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층적이고 촘촘하게 보편적인 욕구 발굴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누구나 아는 「65·70세 도래 어르신 방문 상담」(찾·동 2.0)</li> <li>- 다양하고 긴급한 욕구에 대응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li> <li>-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 '희망복지지원단'</li> <l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효과적인 어르신 안전·건강관리 확대 추진</li> </ul> </li> <li>• '50+캠퍼스·센터', '시니어클럽' 등 노년 대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퍼스 2개소 확충(강남, 광진), 센터 10개소 확충(양천, 강동 등)</li> </ul> </li> <li>•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립 및 종사자 차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제」확립(인증 인센티브 ↑, 인증부여기준 ↑, 모니터링 ↓)</li> </ul> </li> <li>• 「서울시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마련 및 세대공감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고령친화 환경조성, 어르신일자리 확대, 웰다잉문화 보급, 어르신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사업 등</li> </ul> </li> </ul>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6]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키워드



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세부사업명을 토대로 워드클라우드 생성기 3.5 활용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pp.42-54.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저출산) 정책목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제공하고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활 균형, 성평등 사회 조성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성평등 임금 공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심 일터 조성,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500여 개) 대상 워라벨 직장문화 조성, 산모 및 신생아 맞춤형 방문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운영(25,000명),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 확대(5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시범 추진(55개소) 보육서비스 제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안전망 강화
- (모두의 역량이 발휘되는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여성 창업의 허브, ‘스페이스 살림’ 개관·운영(’21. 상반기), 서울 청년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500명), 청년의 생활 건강 지원(2,500명),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13,800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1,600명)

○ (고령사회) ’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

- 스마트한 예방형·맞춤형 의료·보건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50+캠퍼스·센터’, ‘시니어클럽 등 노년 대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25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마련

- 「마을 중심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배치('20년 25개 구 791명) 및 65·70세 보편적 방문 상담을 통한 욕구 발굴 및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 연계
  -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취약 어르신 세대에 IoT기기 설치 확대(~'20년 10,000가구→'21년 12,500가구)
  - 어르신 및 50+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21년 준공 2개소, 5개소 진행), 기능개선(102개소), 노인 지원 주택('20년 27호 입주, '21년 49호 예정), 50+캠퍼스·센터(신규 3개소)
  - 보행 편의시설 확충, 시니어파크 조성, 노인사고다발지역 개선 등 어르신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
- 2016년부터 베이비부머를 고령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50+(신중년) 지원 대책 마련
- 서부, 중부, 남부 지역별 특화된 50+캠퍼스를 확충하여 커뮤니티 및 단체 지원, 인생 2막 설계지원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 고령사회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노인 주거복지시설
  - 개선방안, 서울형 노인복지시설 구축 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

## 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市 인구정책의 총괄·조정·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써 기본계획 필요
- 부산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하여 인구감소와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계획 마련

[그림 7]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방향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																			
<b>비전</b>	모든 세대가 행복한 인구 활력 도시 부산																		
<b>목표</b>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와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b>방향</b>	<table border="1"> <tr> <th>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th> <th>인구관점 시정 종합관리</th> </tr> <tr> <td> <b>1. '산학협력' 창업 활성화 정책</b>                      ㉠ 대학-기업 중개연구 활성화                      ㉡ 창업 더블 샌드박스 조성                 </td> <td> <b>1.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b>                      ㉠ 일하기 좋은 도시                      ㉡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                      ㉢ 가족이 행복한 도시                 </td> </tr> <tr> <td> <b>2.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b>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 청년 유턴 프로젝트 추진                 </td> <td> <b>2.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b>                      ㉠ 축소사회 준비                      ㉡ 활기찬 초고령사회                      ㉢ 균형·포용적 도시                 </td> </tr> <tr> <td> <b>3. '가족 삶의 질' 저출산 대응</b>                      ㉤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확대                 </td> <td>연계·융합·조정</td> </tr> <tr> <td> <b>4. '스마트&amp;컴팩트' 도시정책</b>                      ㉦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조성                      ㉧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td> <td>                     인구정책 기존 추진과제                      (4대 분야 972개 사업)                 </td> </tr> <tr> <td> <b>5. '노인 경제자립' 초고령 대응</b>                      ㉨ 신중년 경제자립 플랫폼 조성                      ㉩ '인생 2막 정주 도시' 조성                 </td> <td>                     일자리 지원 정책                      (7대 과제 334개 사업)                 </td> </tr> <tr> <td> <b>6. '세대·계층' 균형·포용정책</b>                      ㉪ 세대·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                      ㉫ 부산 청소년 성장 지원                 </td> <td>                     저출산 대응 정책                      (4대 과제 137개 사업)                 </td> </tr> <tr> <td></td> <td>                     고령사회 대응 정책                      (3대 과제 71개 사업)                 </td> </tr> <tr> <td></td> <td>                     정주환경 개선 정책                      (6대 과제 430개 사업)                 </td> </tr> </table>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구관점 시정 종합관리	<b>1. '산학협력' 창업 활성화 정책</b> ㉠ 대학-기업 중개연구 활성화 ㉡ 창업 더블 샌드박스 조성	<b>1.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b> ㉠ 일하기 좋은 도시 ㉡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 ㉢ 가족이 행복한 도시	<b>2.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b>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 청년 유턴 프로젝트 추진	<b>2.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b> ㉠ 축소사회 준비 ㉡ 활기찬 초고령사회 ㉢ 균형·포용적 도시	<b>3. '가족 삶의 질' 저출산 대응</b> ㉤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확대	연계·융합·조정	<b>4. '스마트&amp;컴팩트' 도시정책</b> ㉦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조성 ㉧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인구정책 기존 추진과제 (4대 분야 972개 사업)	<b>5. '노인 경제자립' 초고령 대응</b> ㉨ 신중년 경제자립 플랫폼 조성 ㉩ '인생 2막 정주 도시' 조성	일자리 지원 정책 (7대 과제 334개 사업)	<b>6. '세대·계층' 균형·포용정책</b> ㉪ 세대·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 ㉫ 부산 청소년 성장 지원	저출산 대응 정책 (4대 과제 137개 사업)		고령사회 대응 정책 (3대 과제 71개 사업)		정주환경 개선 정책 (6대 과제 430개 사업)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구관점 시정 종합관리																		
<b>1. '산학협력' 창업 활성화 정책</b> ㉠ 대학-기업 중개연구 활성화 ㉡ 창업 더블 샌드박스 조성	<b>1.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b> ㉠ 일하기 좋은 도시 ㉡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 ㉢ 가족이 행복한 도시																		
<b>2. '내 집 마련' 청년 주거정책</b> ㉢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 청년 유턴 프로젝트 추진	<b>2.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b> ㉠ 축소사회 준비 ㉡ 활기찬 초고령사회 ㉢ 균형·포용적 도시																		
<b>3. '가족 삶의 질' 저출산 대응</b> ㉤ 맞벌이 부모 유연근무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확대	연계·융합·조정																		
<b>4. '스마트&amp;컴팩트' 도시정책</b> ㉦ 부산형 15분 스마트도시 조성 ㉧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인구정책 기존 추진과제 (4대 분야 972개 사업)																		
<b>5. '노인 경제자립' 초고령 대응</b> ㉨ 신중년 경제자립 플랫폼 조성 ㉩ '인생 2막 정주 도시' 조성	일자리 지원 정책 (7대 과제 334개 사업)																		
<b>6. '세대·계층' 균형·포용정책</b> ㉪ 세대·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 ㉫ 부산 청소년 성장 지원	저출산 대응 정책 (4대 과제 137개 사업)																		
	고령사회 대응 정책 (3대 과제 71개 사업)																		
	정주환경 개선 정책 (6대 과제 430개 사업)																		
<b>추진 전략 및 과제</b>																			
	<table border="1"> <tr> <th>발굴</th> <th>검토·분석</th> </tr> <tr> <td>                     인구정책과제 발굴 플랫폼 운영                      &lt;패러다임 전환 신규 과제발굴&gt;                 </td> <td>                     인구영향분석제도 운영                      &lt;인구정책 재구조화&gt;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인구정책 전담 조직 강화</td> </tr> </table>	발굴	검토·분석	인구정책과제 발굴 플랫폼 운영 <패러다임 전환 신규 과제발굴>	인구영향분석제도 운영 <인구정책 재구조화>	인구정책 전담 조직 강화													
발굴	검토·분석																		
인구정책과제 발굴 플랫폼 운영 <패러다임 전환 신규 과제발굴>	인구영향분석제도 운영 <인구정책 재구조화>																		
인구정책 전담 조직 강화																			
<b>추진 체계</b>																			

자료: 부산광역시(2021),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그림 8]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정책	대응기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저출산) 출산 장려 기금 1,000억 원 조성('10년~'19년)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맘 부산’ 플랜('17년), 부산아이다가치키움('18년) 수립 등 정책추진 기반 마련
- 다자녀가정 우대시책('06년~), 모바일 가족 사랑 카드 발급('20년),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 핑크 라이트 실시, 난임지원바우처,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운영,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모든 출생아 출산 축하 용품 지급을 확대하고, 출산지원금을 상향, 입학축하금 지원, 공동육아나눔터('16년 8개소→'20년 9개소)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19년) 등

○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수립 발표 계획(9월)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16년 9월), 고령친화도시 8대 분야 59개 세부 과제 추진, 신중년 인생 3모작 및 생애 재설계 지원
- 신중년 인생 3모작 부산 특화사업, 50+생애 재설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16년 6월), 50+ 생애 재설계대학 4개소 설치 및 운영(2019년)

○ (청년)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2020)

- 청년세대의 수도권 등으로 유출,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인구 및 사회구조적 원인 등으로 비혼·만혼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불가피
- 청년 취업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고교재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청년에 이르기까지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부산지역 내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운영,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청년 머물자리론, 월세 지원, 부산하고재비 청년센터 조성, 청년 마음상담소 운영 등 핵심 대책 추진

[표 13]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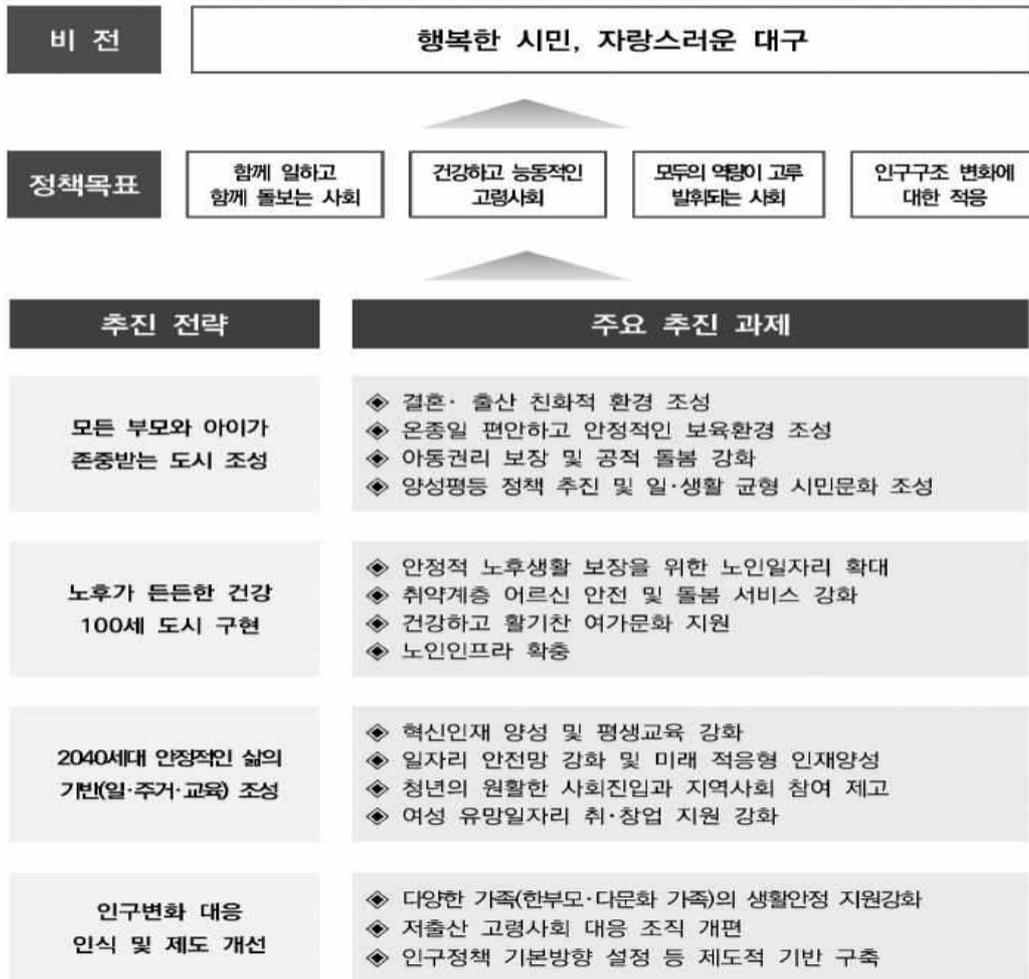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교 재학생	① 부산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6개월 이상 근무한 고3 재학생	500만원 (교육부 300 + 부산시 200) * 부산시 추가지원은 '20년 시행예정	
	② 청년 구직활동비 (부산형 청년수당)	만18~34세 이하 졸업예정 청년 추가 (중위소득 120% 이하)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간) * 졸업예정 청년 추가는 '20년 시행	
대학생	③ 면접 정장대여 "드림옷장"	만18~34세이하 청년 (대학생, 구직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등 대여 (3박 4일)	
	④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 졸업예정자	월 80% 이상 출석시 훈련수당 15~20만원 차등 지급	
	⑤ 지역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지원	부산소재 9개 대학	현장실습 인턴수당 지원(월 100만원)	
	⑥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대학생, 만29세 이하, 고교 이상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근로장학생 : 월 168만원 미취업청년 : 월 167만원	
	⑦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만18세~34세이하 청년	6개월간 인턴 인건비 지원 등	
	⑧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해당학기 소득 8분위 이내자 등	2016년 이후 대출분부터 발생한 상환이자 1년분 지원	
	⑨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학교 재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	기숙사비 지원(1인당 월 5만원, 연 60만원)	
	⑩ (예비)기술창업기업 지원	기술창업자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공간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⑪ 창업지원주택 건립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하는 자	'20년 준공 및 입주 예정	
	⑫ 햇살동지사업	지방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시민 등	시세의 50%, 임대기간 3-5년	
	⑬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 또는 취업생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2년, 최장 6년 가능	
	일반청년 구직자	⑭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훈련	만18세 이상 청·장년 실업자	월 80% 이상 출석시 훈련수당 20~25만원 차등 지급
		⑮ B-스타트업UP 청년인재 발굴 매칭 사업	만18~39세이하 청년	인재지원금(1인당 월 162.5만원, 최대 10개월) 기업부담 25만원 별도
⑯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만15~34세(군필자 만39세)이하 청년	인턴 최대 3개월간 월 15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조건	
⑰ 부산 청춘 희망카		만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초소형 전기차 청년구직자 제공 지역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취·창업	
⑱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만15~34세이하 청년	1인당 교육·연수비 500만원 지원	
⑲ 창업기업 인턴지원사업		만20~65세 이하 청년 및 중장년층	월 90만원 6개월 지원	

자료: 부산광역시, 2020, 청년희망정책과 내부자료

### 3. 대구광역시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18년 8월 10일) 제정 및 시행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비전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이며, 추진 전략은 모든 부모와 아이가 존중받는 도시 조성, 노후가 든든한 건강 100세 도시 구현,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인구변화 대응 인식 및 제도개선임

[그림 9]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p.123

○ (저출산)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시행, 작은 결혼식 비용지원, 공공장소 등 소규모 예식장 발굴, 미혼남녀 만남 이벤트 등 예비·신혼부부 지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양·한방 난임부부 지원을 비롯해서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및 다자녀가정 우대 여건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확충, 대구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통해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육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구축
- 육아 상황 기반의 대학생 인구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추진하고 일·가정 양

립 문화 확산 사업을 확대

- 청년사회진입 활동 지원금, 청년희망적금 지원, 청년 고민 상담,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청년내일학교, 청년소셜벤처 육성, 청년소셜리빙랩 등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

○ (고령사회 정책)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및 지원강화,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강화

- 대구형 일자리 특성화 사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노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대구시 맞춤형 통합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독거어르신 안전 및 돌봄 강화,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제공
-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학대 노인 쉼터 등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 (청년)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목표로 대구시민 만들기,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반 확충 관련 사업 추진

-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 지원, 대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전입신고 창구 운영, U턴 청년 정착지원, 청년 귀환 프로젝트,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제3산단, 수성 의료지구) 건립, 수제 맥주 산업 육성, 대구형 청년 보장제 확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 등

[그림 10]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주: 저출산정책 공통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명을 토대로 워드클라우드 생성기 3.5 활용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대구광역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인구 유입 활성화, 저출산 극복, 고령

화 연착륙, 인구변화 대응 부문으로 구분

- 인구 유입 활성화 부문은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대학생 전입 지원, 휴스타 사업,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정책 중점 추진
- 저출산 극복 부문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결혼출산 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
- 아울러, 빈집 활용 및 콤팩트시티 등 인구변화 대응 도시공간 다운사이징 추진

○ 시행계획 중에서 12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주무 부서 인센티브 지원

[표 14] 대구광역시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12대 중점과제

구분	사업명
U턴 청년 정착지원 (청년귀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향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청년정책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SNS 등 활용)함으로써 청년귀환을 위한 지원채널 구축</li> <li>• 인재유입데스크, 출향청년 현황조사, 청년유입 대구탐방 등 시행</li> </ul>
HuStar(대경혁신인재 양성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미래산업(로봇, 물, 미래형자동차, 의료, ICT 등) 육성에 기반이 되는 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대학(재학생) : 기업맞춤형 커리큘럼 운영</li> <li>- 혁신아카데미(졸업생) : 기업실무 및 현장 교육(인턴과정 운영)</li> <li>- 혁신인재·참여기업 인센티브</li> </ul> </li> </ul>
세대맞춤형 주택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또는 분양주택 공급</li> </ul>
출산가정에 아낌없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부담을 경감(출생신고자에 보조금 및 현물 교부)</li> </ul>
아이돌봄 119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등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앱 서비스 도입 및 바로연계서비스 운영 등</li> </ul> </li> </ul>
청년고용, 고용환경 우수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선호 일자리와 고용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맞춤형 고용환경 개선</li> <li>- 의료·ICT산업 청년친화 고용환경 조성</li> <li>- 청년고용실적 우수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li> <li>-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li> </ul> </li> </ul>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의 제조업중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li> </ul>
시니어 생산직·사회공헌적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적합 업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소득보전,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업알선형 일자리로 구성</li> </ul> </li> </ul>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시행</li> <li>- 중점돌봄군 :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대상</li> <li>- 일반돌봄군 : 사회적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li> </ul> </li> </ul>
대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웰니스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육성</li> <li>•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역외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li> </ul>
빈집 활용 플랫폼 (빈집정보은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철거 후 썬지공원, 꽃밭 등 공공용지 조성</li> </ul>
영역단위 학교공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사용자(학생 및 교사 등) 중심의 설계를 통해 미래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학교공간 조성</li> </ul>

자료 : 대구광역시 내부자료,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2020

#### 4. 인천광역시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제1차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19~2023)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해 공공영역 서비스 확대와 민간 영역 서비스 질 개선
- (저출산)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 대상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확대
  - 드림 체크카드, Dream For 청년 통장,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으로 구직 청년 자립 지원 및 고용 창출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1석 5조 인천 청년 사랑 프로젝트 등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 임신·출산·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육아·공동돌봄 시설 ‘아이사랑꿈터’ 확충 등 맞춤형 돌봄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및 아이사랑누리센터 기반 혁신 육아 복합센터 건립 추진,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기반 조성
- (고령사회)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 예방·치료 서비스,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 맞춤형·전문화된 예방·치료 서비스 제공
  -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및 지역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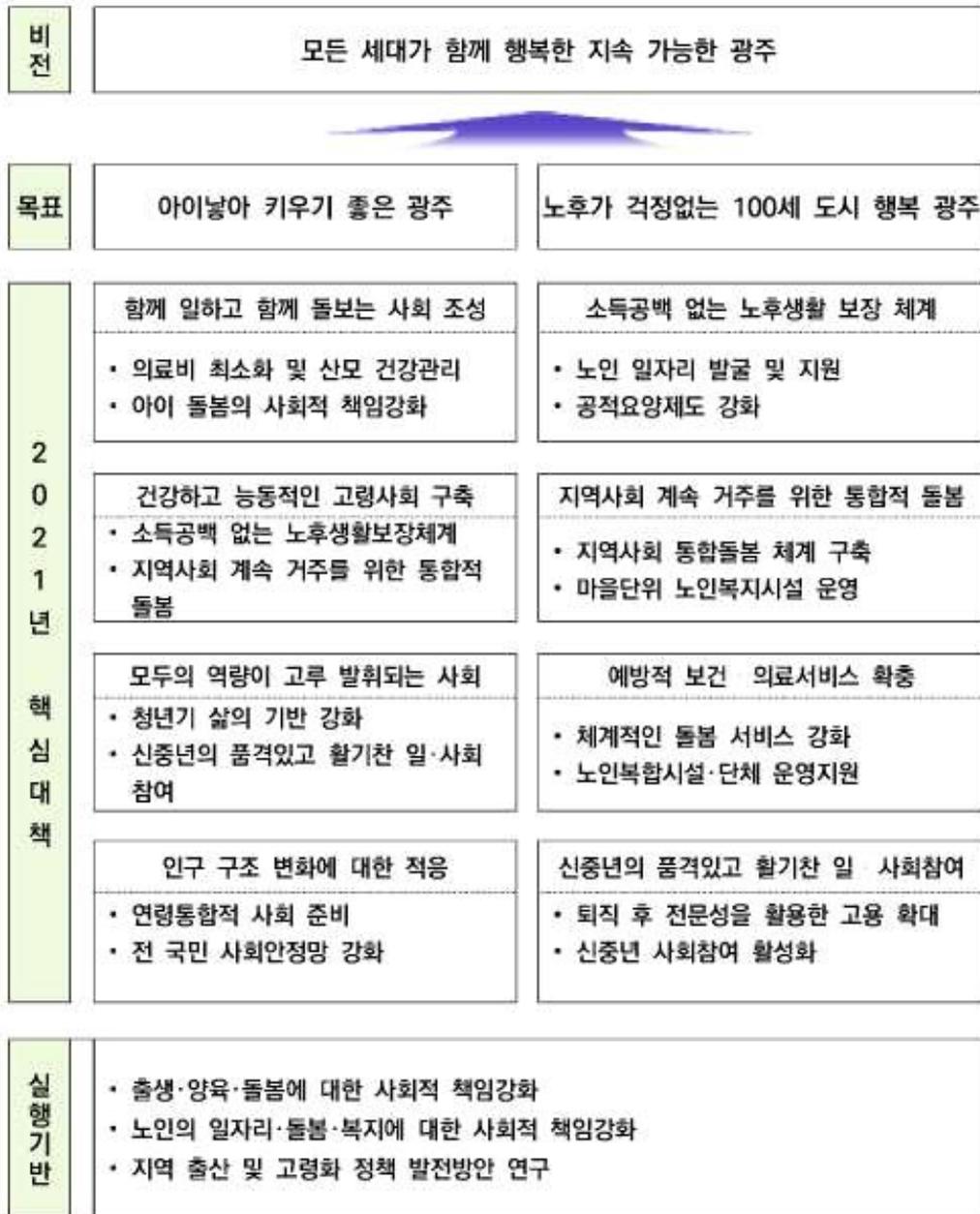
[그림 1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5. 광주광역시

[그림 12] 광주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저출산) 핵심 대책으로 의료비 최소화 및 산모 건강,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돌봄 체계 구축 및 아동 존중 문화조성, 청년의 안정된 삶 기반 구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생애 맞춤형 정책추진

- (출산·양육 분야) 아이친구센터(광주아이키움플랫폼) 설치 운영, 광주 출산 축하금 및 마더박스 지원
  - (일·가정 균형 분야) 가족 친화 인증 확보 지원, 직장맘·직장대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
  - (돌봄 체계 구축 분야)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손자녀 돌보미 지원
  - (청년의 안정된 삶 분야) 신 광주형 청년 채운 공제 지원,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 (고령사회)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이 4대 핵심 대책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응한 보편적 복지정책 및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 정책 지원
-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발굴·지원, 중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체계적 노인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공적 요양제도 강화
  -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마을 단위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 복합시설·단체 운영 지원
  -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종사자 직무교육 및 워크숍,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그림 1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표 15] 광주광역시의 인구정책

5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임신·출산이 축복이 되는 환경 조성</li> <li>• 차별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확대</li> <li>• 사각지대 없는 틈새 보육 확충</li> <li>• 맘 편한 보육 환경 조성</li> <li>• 여성·가족·아동 친화환경 조성</li> </ul>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광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행복 출발 지원</li> <li>•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li> <li>• 청년·청소년 인구교육, 예비부부·부모 교육</li> <li>• 광주형 청년 고용, 일자리 환경 지원</li> <li>•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공간 지원</li> </ul>
지역경제와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광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 활성화</li> <li>• 미래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li> <li>• 고용지원 인프라 혁신으로 미스매치 해소</li> <li>• 맘 편한 워킹맘,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li> <li>•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li> </ul>
든든 중년과 건강 노년의 알찬 광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년 제도기반 및 평생교육 체계 조성</li> <li>• 누구나 창업 도전 환경 조성 및 도약 지원</li> <li>•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li> <li>• 100세 시대, 시민건강 보장 강화</li> <li>• 노후가 편한 의료, 주거, 문화 인프라 확충</li> </ul>
인구구조 변화에 준비하는 광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계획 수립·시행</li> <li>• 함께 키우고 돌보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li> <li>• 인공지능(AI)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li> <li>•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용사회 조성</li> <li>•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정책 정보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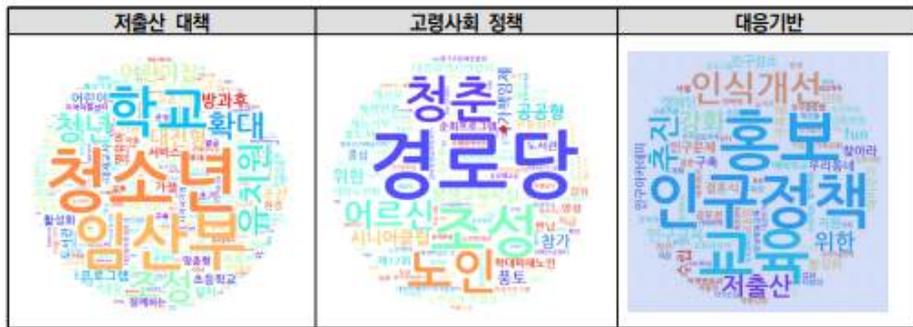
자료: 광주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 시행(안), p.8.

## 6. 대전광역시

- 모든 시민이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화된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하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 상 설정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 파견, 대전형 출산 장려 지원금 첫째아이상으로 지급 확대, 다자녀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기준대상 연령 완화, 다 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대전형 아이 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지급, 중고생 교복 지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청년 자립 및 청년부도 활동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다양한 수요계층 일자리 통합지원 서비스 및 컨설팅 공간 마련

-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 발굴·지원, 노인복지관 건립지원(2개소, 42.7억 원), 노인 돌봄 지원(10,177명), 치매안심센터 개소 (5개소), 치매 전문 병동 증축(제1시립전문노인병원, 40.2억 원),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를 통한 생애 설계·경력개발 교육(659명), 사회참여 활동(335회 657명), 한국 효문화진흥원 운영 등 예비 노년층 지원강화
- (인구변화 적극 대비)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인구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가이드북 제작, 지역 매체 활용 홍보, 시민단체·경제계·언론계 등 사회연대회의 구성·운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육아·일·문화 등 복합적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인구정책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

[그림 14]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7. 세종특별자치시

-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가장 젊은 도시로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인프라 조성,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추진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84이고 세종시가 1.28로 6년 연속 합계출산률 전국 1위 도시
  -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26개소 확충 예정이며, 동별 ‘공동육아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공공 돌봄 시설 확충 계획
  -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 설치, 혼밥쿠잉클래스, 인연만들기, 공공시설 이용 나만의 작은 결혼식 등 ‘만남에서 정착까지’ 커뮤니티 문화 조성
  
- (저출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 첫째 아이부터 120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모든 시민에게 맘 편한 가정방문 산후조리 지원,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행복 맘 통합지원센터, 가족품앗이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고령사회) 전 세대를 포함한 세종시정 전반에 걸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국제 네트워크 인증 및 1기 실행계획 수립
  -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주거, 교통, 안전 등 시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별 계획 수립, 고령 친화적 정책 및 우수사례 발굴, 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 생애 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 → 임신·출산 → 보육·돌봄·교육 → 중·장년 → 노년 등의 분야 및 거버넌스 분야 추가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 부서와 소통·협업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그림 15]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16]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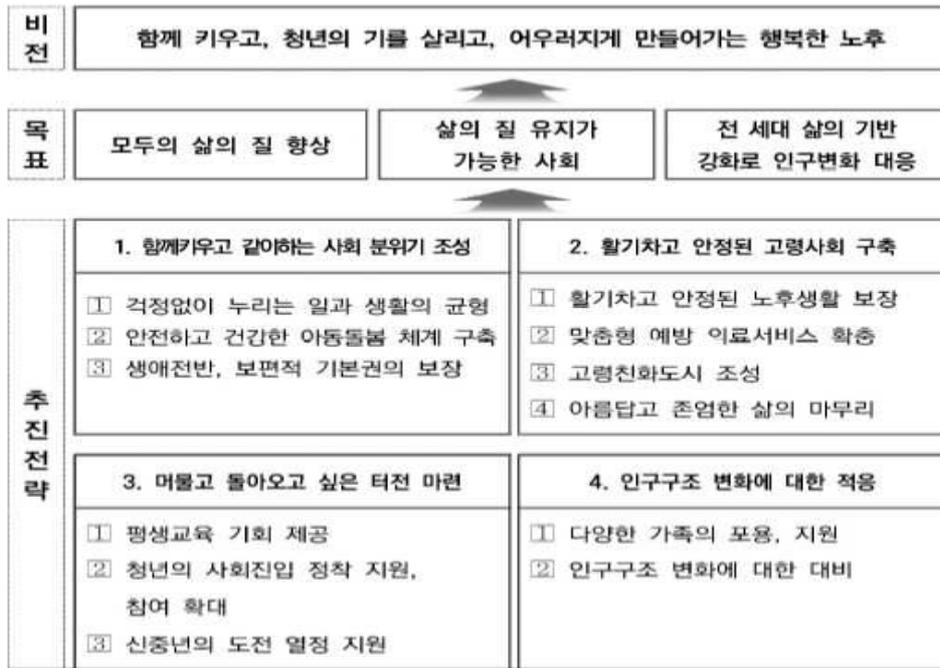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8. 울산광역시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인구정책 추진 방향은 ‘함께 키우고, 청년의 기를 살리고,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유지가 가능한 사회’, ‘전 세대 삶의 기반 강화로 인구변화 대응’을 목표로 함
  - 울산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은 크게 정주 여건의 개선을 통한 유출 방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 및 신규 대학의 유치가 요구되며, 대학 졸업자의 다른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취업 기회의 다양화가 요구
  - 한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더불어 질(R&D 관련)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및 도시 품격 제고에 노력
  - 2020년 울산광역시의 인구증대 시행계획은 7대 추진 전략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

[그림 17] 울산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18]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키워드



주: 저출산정책 공동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명을 토대로 워드클라우드 생성기 3.5 활용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9. 울주군

- 울주군의 인구정책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울주군’을 구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실현, 삶의 질 개선, 인구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과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노동자 복지지원을 위해 청년 기본소득, 군 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가입,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 지속
- (저출산) ‘모두의 일과 삶이 존중받는 경기’, ‘안심하고 함께 키우는 경기’, ‘청년이 행복한 경기’ 를 위해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보육·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출산 양육 부담 최소화, 청년복지·신중년·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
- (보육·교육) 도내 3~7세 자녀를 둔 아빠 1,000명 대상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 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 운영을 통해 온라인 기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단지, 보육수요가 많은 곳, 농어촌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신중년 세대 대상 은퇴 노후설계 및 직업기술 교육 과정 운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급
  - (주거·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도민 대상으로 경력 형성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민 대상 재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대상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경기 행복주택건설(1만 호), 울주군 청년 기본소득 지원(만 24세 청년), 청년 노동자 통장 운영(18~34세)
- (고령사회) ‘노후가 활기찬 경기’ 를 위해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를 목표로 노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통한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확보, 무료 급식 확대를 통한 저소득 노인 의식주 지원, 노인 어르신 즐길터 확대를 통한 노인 여가 공간 조성 지원
-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단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도내 65세 이상 대상 웰다잉 교육 및 인생노트 사업, 노인 자살 예방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

[그림 19] 울주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20] 울주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10. 강원도

- 강원지역은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비롯하여 수도권과 근접성으로 청년층의 순유출이 인구 증가의 한계점으로 작용함에 따라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수도권 장년층 유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및 귀농·산·어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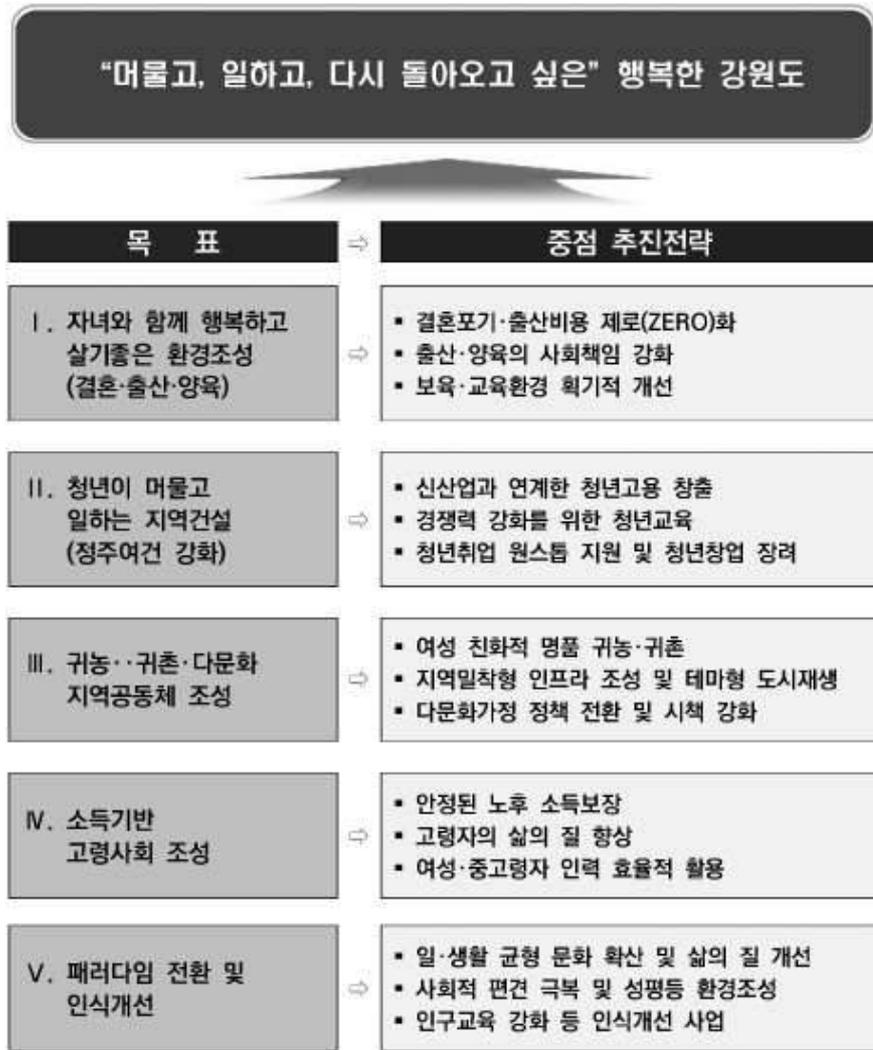
○ 강원도 인구정책은 강원형 육아 기본수당 도입으로 보편적 출산·양육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4+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고령사회 대응, 청년 중심 정책 지원 등 사업 발굴 및 확대

- 육아 기본수당은 ' 19.1.1. 출생아부터 4년간 월 30만 원 지원하며 단계적 지원규모 확대 추진
- 튼튼한 결혼 기반 조성, 행복한 임신·출산, 부담 없는 보육·돌봄, 균형있는 일·가정 양립 등 결혼 → 출산 → 양육 →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지원
-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참여 규모 확대로 사회참여를 비롯하여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독거, 치매,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어르신의 건강 → 돌봄 → 소통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 정규직 일자리 지원금 확대,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청년 농어업인 육성 등 청년 중심 통합적 정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 강원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

- (저출산 대응 강원형 선도모델 육성)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행안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와 재정지원 확대, 우수사례 발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결혼, 출산, 양육,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수요자 중심 생애 단계별 지원, 전국 최초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을 시작으로, 기존 시책 보완·발전 및 지역 맞춤형 신규 정책 적극 발굴 추진,
- (투자 계획) 2020년 총 504개 과제에 1조 9,221억 원 투입, 국비 사업 1조 5천억 원, 자체 사업 3천7백억 원(국비 80 : 지방비 20)

[그림 21]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22] 강원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11. 충청북도

### ○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방향

- 인구감소 시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 고령 사회정책을 수립
- 4대 위협요인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적 성숙, 지역 특 화 일자리, 신산업 및 관광산업 발굴·육성, 지역의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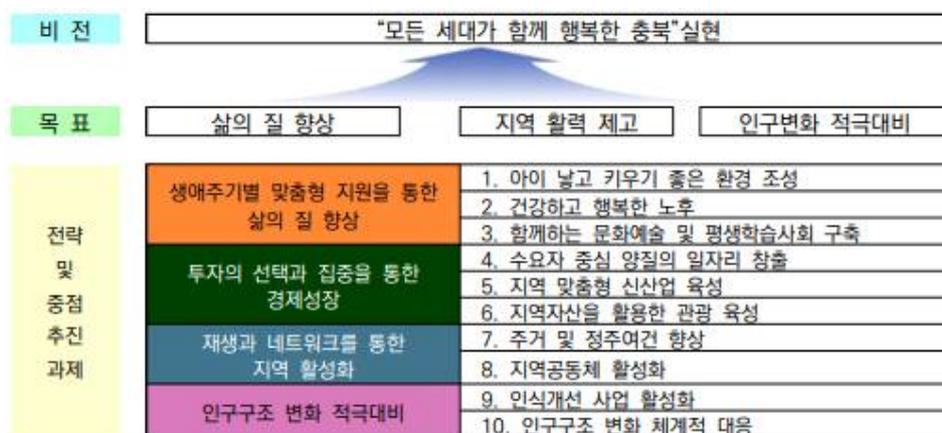
[그림 23]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



자료 : 충청북도·충청북도 교육청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 고령 사회정책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충북” 실현이며, 3대 목표로는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제고, 인구변 화 적극 대비를,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는 4대 전략에 따라 10대 중점과제를 설정

[그림 24] 충청북도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전 전략



[그림 25] 충청북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주: 저출산정책 공통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사업명을 토대로 워드클라우드 생성기 3.5 활용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총괄)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http://wordcloud.kr/#google_vignette))

자료: 보건복지부(2020)

- 충북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과 보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의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이를 위해 충청북도 차원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표 16] 충청북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현황 분석

분야	도 및 시군별 조례제정	비고
출산 임신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11개 시군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부분의 시군에서 출산장려 관련 조례를 제정 청주, 보은, 증평, 단양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보육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11개 시군 영유아 및 보육지원 조례 제정	
다문화 가족지원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1개 시군 다문화 가족지원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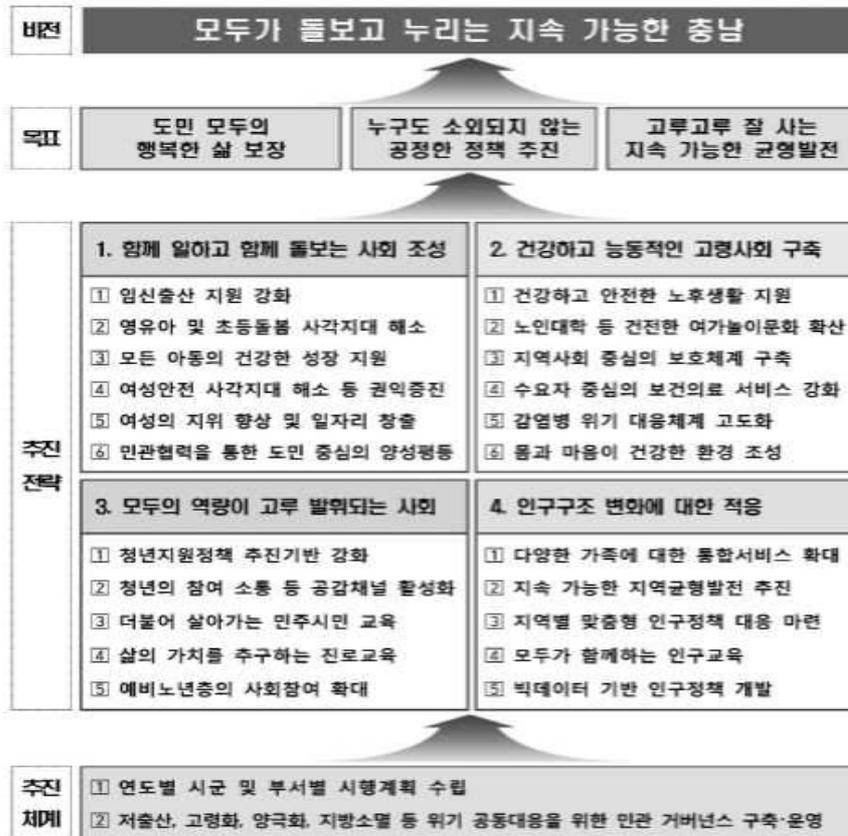
자료 : 충청북도·충청북도 교육청

## 12. 충청남도

- 충청남도 인구정책은 ‘모두가 돌보고 누리는 지속 가능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 보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정책추진, 고루고루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함.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임신 출산 지원강화,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보호아동 공정 책임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및 여가 놀이문화 확산, 노인 일자리 확충, 보건 인프라 확충, 지방 의료원 공공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임신부 전용 창구 2,773개 개설·운영, 보령·부여·홍성 3개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충남도 전역에 임신부 119 구급 서비스 지원, 기본금리+1.5%에 해당하는 임신부 우대금리 적금상품 지원, 난임부부 한방 치료 사업의 대상 연령 폐지 및 남성까지 지원 확대
  - (다자녀 및 산모·신생아 지원) 맘(MOM) 건강 관리 사업을 통해 3자녀 이상 출산한 어머니 대상으로 산후진료비(20만 원) 지원, 행복 키움 카드 리뉴얼사업을 통해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 지원하고, 사용처를 편의점 및 병원 등으로 확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소득 기준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2020년부터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628개소, 634명을 대상으로 한 호봉제 시행, 가정 어린이집은 1일 6시간, 그 외 어린이집의 경우 1일 4시간 보육도우미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차액을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해 학생 1인당 30만 원의 학교 지원금 지원
  - (결혼하고 싶은 환경(주거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신혼부부, 청년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3,000호, 5년간 15,000호를 공급, 청년

전월세 보조금 용자 지원을 통해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연계 및 이자 지원, 지역대학 충남 인재 장학금 및 취업 지원사업으로 채용기업에 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 지원(2년 지원) 및 참여 청년 대상 직무교육, 정주여선 개선 지원

[그림 26]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2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키워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13. 전라북도

-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청년의 삶의 기반 강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전략별 실행 과제 계획
  
- (저출산)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가족문화 조성 등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 취업, 고용불안, 주택 마련, 결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을 유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중점
  - 산모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육아와 돌봄 문화 보장 등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결혼, 출산, 돌봄,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출산·양육 환경 개선 및 맞춤형 돌봄 체계 확대
  -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관광 등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을 찾아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고령사회) 소득·건강·주거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
  - 연령대별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의 활동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환경 조성
  - 중장년층 인구 유입의 주요 요인인 귀농 귀촌 정책과 농촌 마을 활성화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거주 인구 증가에 기여
  - 생활 안정화 지원, 자립역량 강화 및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통합 추진
  -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여가 활동 참여 및 공동생활을 통한 활기찬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공간 마련

[그림 28]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29] 전라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14. 전라남도

- 전남의 경우,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으로 자연 증감률 개선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
- 상대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인구 감소세 개선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유도 시책 추진 필요
- 사회적 감소의 주 연령층인 유소년인구·청년인구(0세~39세)를 위한 교육·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 순유입 층인 장년층(40세~65세) 추가 유입 유도를 위한 귀농산어촌 유입 정책 적극 추진
- 전라남도 인구정책은 ‘아이부터 어른 모두 살맛 나는 전남’을 구현하기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초고령사회 대응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사회적 가족 관계망 활성화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표 17] 전라남도 인구정책 주요 내용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인구대응 통합체제 구축 및 새로운 유입구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변동 유형별 대응체계 재정비</li> <li>청년 희망 디딤공간 조성</li> <li>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추진</li> <li>전남형 귀농어귀촌 통합지원시스템 구축</li> <li>청년 창업 농어업 및 기업 승계 청년 지원</li> </ul>
청년 자립결혼육아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자립 및 정착 지원</li> <li>결혼 응원 프로젝트</li> <li>행복 출생 패키지 지원</li> <li>흠뻑한 아이돌봄 시스템 확충</li> <li>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li> </ul>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대·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전공대 설립,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li> <li>첨단 시소재,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li> <li>첨단 농수산 거점단지 조성</li> <li>전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li> <li>섬해양내륙을 잇는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li> </ul>
인구구조변화 부응 장주여건개선 및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계획 수립·실행</li> <li>권역별 인구댐 및 귀촌벨트 구축</li> <li>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회 확대</li> <li>사회적기업 육성</li> <li>축소지역 학교살리기 확대</li> </ul>

자료: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18), p.82

[그림 30] 전라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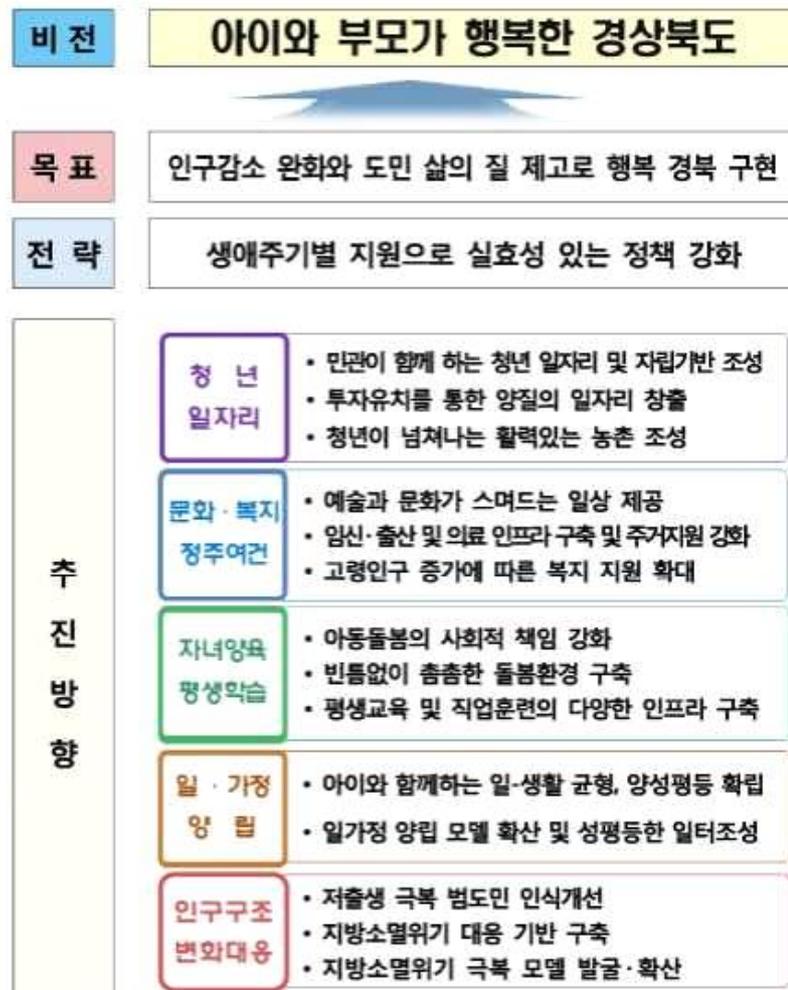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15.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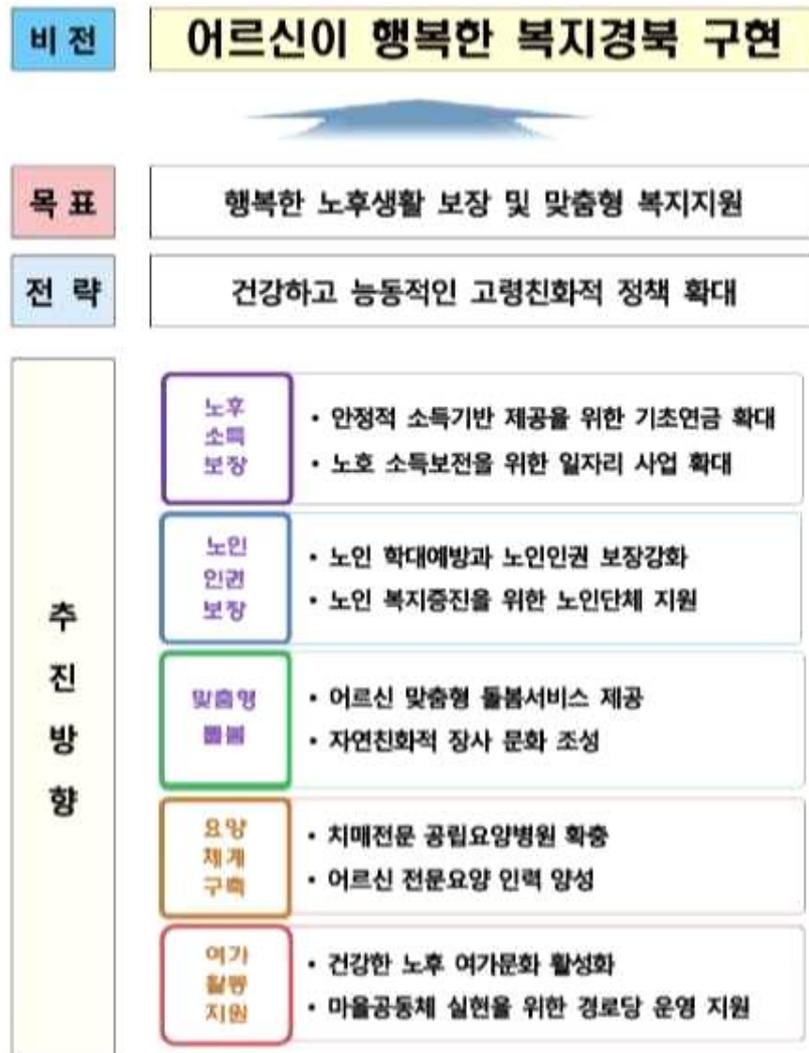
- 경상북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상북도’와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경북 구현’을 위해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에 따라 각 영역별로 추진 과제 계획
- 저출산 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문화·복지 정주여건, 자녀 양육 평생학습, 일·가정 양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령사회 정책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 노인 인권 보장, 맞춤형 돌봄, 요양체계구축, 여가 활동 지원에 따라 정책 추진방향 제시

[그림 31] 경상북도 인구정책 방향(저출산 대책)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그림 32] 경상북도 인구정책 방향(고령사회 정책)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환경 개선, 돌봄 체계 개선,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의 사업 추진
-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계획: 경북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를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셋 이상 낳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지방소멸 극복모델사업으로 이웃사촌 시범 마을 조성(2019~2022), 청년 창농, 창업 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청춘남녀 건전한 만남의 장 제공
  - 일자리·주거·복지가 갖춰진 명품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정책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청춘촌)을 제안하여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도입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돕고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사업대상자는 경북에서 창업·창직·창작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전국 청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분만과 산후조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저출생 극복 대응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
  - 여성 일자리 제공과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 수립(2017~2021),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2018~) 및 인구정책 TF 확대·운영,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2019)

[그림 33] 경상북도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표 18]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구분		사업명
국비	임신·출산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미혼모·부자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아동수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마을돌봄터 확대 조성
	지역사회 협력 및 인식개선	•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자체 사업	결혼	• 청춘남녀 만남 지원, 청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
	임신·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돌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료 등 지원,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아이사랑카드 운영, 누리과정 지원, 다함께 돌봄 설치 및 운영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 경감사업,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다복가정 희망카드,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임신부·영아 방문건강관리시범사업.
	청년	• 경북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청년농부육성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커플 창업지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청년기업 및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인식개선	• 가족친화인증 기업 육성, 출산장려 캠페인, 공동육아 인식활성화, 다둥이 가족 대잔치, 아이사랑가족 대축제, 미래세대 인구교육, 출산장려 UCC&사진 공모전, 저출산극복 공모사업 선정, 저출산극복 시책 우수시군 시상, 저출생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경상북도 인구정책 T/F 회의자료」, 2020

## 16. 경상남도

- 2020~2024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 경남은 ‘미래인구맵; 설계를 통해 경남 미래를 탐색하여 모든 정책에 인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
- 청년과 여성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관점에서 결혼·임신·출산·보육 그리고 주거·일자리 등의 정책을 설계하고 미래지향적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노인복지 실현
  - (전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인프라 구축) 출산 부담 완화·보육의 질 제고를 통해 저출생 완화, 경남형 아이 돌봄 모델 실현으로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청년·여성 정책과 교육 혁신

으로 인재 유입 선순환을 기반으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고령화에 대비

[표 19]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비전, 목표, 전략, 추진 과제

구분	내용
비전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목표	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②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③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
전략	①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 ② 청년이 빛나는 경남 ③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④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사람 ⑤ 행복한 경남 실버와 인구변화 선제 대응 ⑥ 인구변화 선제 대응
추진과제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등 160개 추진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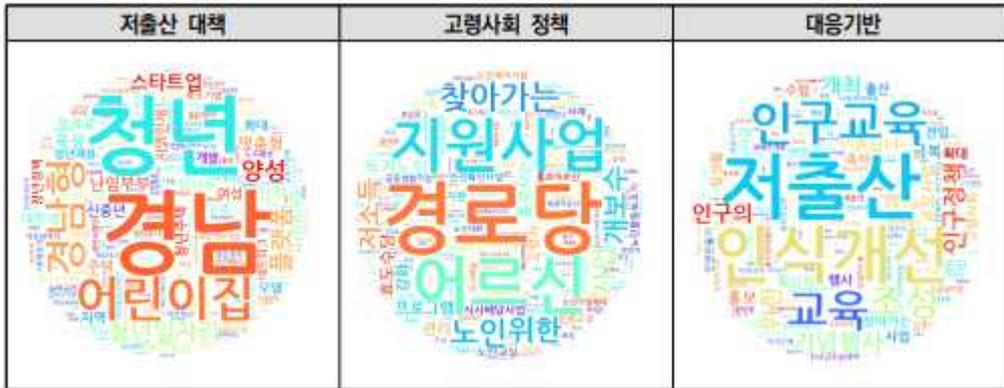
자료: 경상남도(2020), 2020~2024년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요약), p.2

[표 20] 2020년 경상남도 저출산·고령화정책 주요 세부 사업

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백만원)	주요내용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8,896	업력7년 미만 스타트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지역상생 청년일자리사업	432	도내에서 취창업을 희망하는 서울청년의 인건비 및 창업지원금 지원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5,519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7,030	경남광역시, 시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
시간제보육지원	924	시간당 4천원 중 3천원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상담전문요원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886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50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한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사업	2,266	기저귀 월64천원, 분유 월86천원, 동시지원 월150천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0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700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2,131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통합서비스
남명학사 운영비 지원	2,608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 제공으로 주거부담 완화
청년일자리플랫폼 운영	500	취업특강 및 교육, 스터디룸·세미나실 등 공간대여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90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3개월 고용유지시 기업 및 인턴에 취업장려금 30만원 지급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지원	380	시군의 다문화가족 지역특성 반영한 특수시책 개발, 시행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pp.614~658

[그림 34] 경상남도 인구정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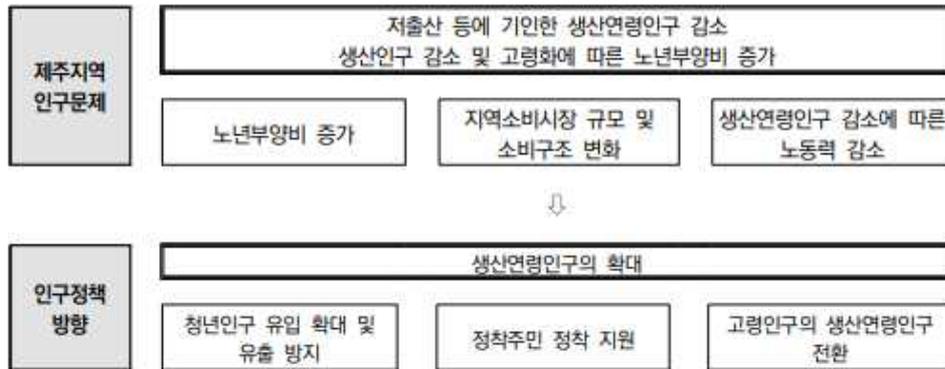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17.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의 인구문제, 즉 저출산에 의한 장래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은 결국 사회적 이동 조절(인구 유치 및 유출 방지)을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대와 노년부양비 완화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이동 조절을 통한 생산연령인구 확대는 구체적으로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 지원(정착 주민 유출 방지)’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노년부양비 완화는 생산연령인구 확대와 함께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 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인구정책의 방향은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을 통한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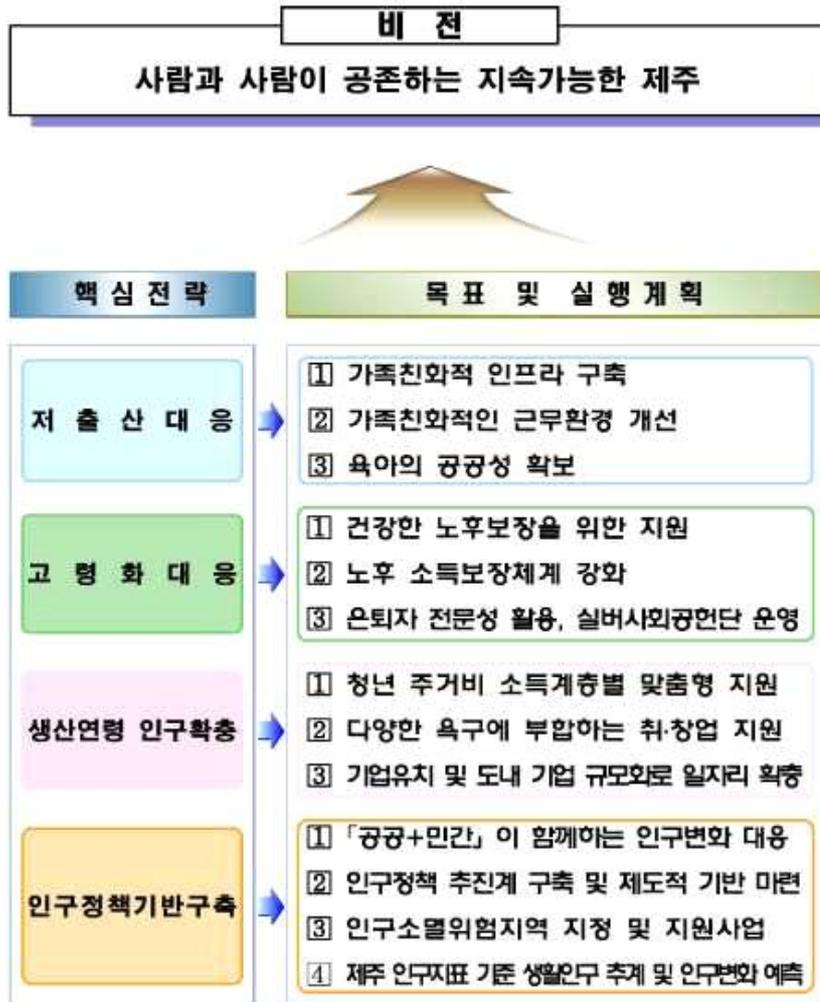
[그림 35] 제주 인구정책의 방향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2019),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p. 74

- (인구정책의 전략 및 방향) 신규 사업 발굴 보다는 기 추진사업의 연계와 정보 통합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조직, 제도 등 인구정책 추진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이에 인구정책의 방향, 즉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에 부합하는 기 추진 사업을 연계하거나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인구정책의 전략으로 ‘정책정보·수요 전달 시스템 구축’, ‘연계사업 및 패키지사업 발굴·지원’을 설정함

[그림 36]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 (저출산) 수놓음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등 주거 생활권 내 공동의 보육시스템 구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인 가족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워라벨 문화 확산 및 아이 돌봄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여성들이 모여드는 지역사회 조성, 제주 아동 친화 도시 인증,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영유아-부모-교사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출산 장려 지원책 강화
- (고령사회) 노인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 돌

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노인 여가시설 환경 개선 및 종합공간으로서의 경로당 기능 강화, 고령자복지주택 확충,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제 도입,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그림 3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키워드



자료: 시도 및 교육청(2021)

## 18. 종합

- 서울은 2017년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1인,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다각적인 접근
  - 고령 사회정책으로 신중년 50세 이상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며, 서울 거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래 투자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정책대상자 확대
- 부산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하여 인구 감소와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계획 마련하였으며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 수립, 고령 사회정책으로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수립 발표
  -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정책으로 고교재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청년에 이르기까지 부산형 취업 연계 지원

- 대구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유입 활성화 부분 대구 행복기숙사건립, 대학생 전이 지원, 휴스타 사업,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등 지역대학 (12개)과 연계한 청년 정책 중점 추진
- 인천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제1차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인천형 뉴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인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 광주주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목표로 5대 추진 전략, 25개 중점과제 추진
  - 광주아이키움플랫폼 ‘아이 친구센터’를 설치 운영, 광주 출산축하금 및 마더박스 지원, 직장맘·직장대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시행 등 저출산 분야 생애 맞춤 정책추진
- 대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워라벨·성평등, 아동 돌봄, 생애 주기 지원, 노후 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역량 강화, 청년 지원, 여성·신중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상생 기반 구축 추진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대전형 출산 장려 지원금 첫째 아이 이상으로 지급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시행
- 울산은 출산 보육 친화 도시 조성, 베이비부머 세대 체계적 관리, 도시 균형발전 및 광역 벨트 연대 강화, 도시 생활안전 확보, 울산 청년 희망 도시 조성, 최적화된 워라벨 등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시행
  -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 여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 추진

- 경기도는 공정사회 실현, 삶의 질 개선, 인구변화 대응을 목표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노동자 복지지원 지속
- 강원은 수도권 근접성으로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수도권 장년층 유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및 귀농·산·어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
- 충북은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제고, 인구변화 적극대비 등 4개 추진 전략하에 10개 중점과제 추진
- 충남은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 보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정책 추진, 고루고루 잘 사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22개 추진전략을 수립
- 전북은 청년의 삶의 기반 강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의적 인재 육성,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일자리 및 주거지원, 양육 및 돌봄 기반 조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 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 및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 과제 시행
- 전남은 사회적 인구감소세 개선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유소년인구와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일자리 정책발굴(안전공대 설립,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전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장년층(40세~65세)을 위한 귀농산어촌 유입 정책 적극 추진

- 경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환경 개선, 돌봄 체계 개선,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계획: 경북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 이웃사촌 시범마을(청춘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추진
- 경남은 ‘미래인구맵’ 설계를 통해 경남 미래를 탐색하여 모든 정책에 인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0~2024년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6대 전략별 160개 추진 과제를 제시
- 제주는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을 통해 기 추진사업을 연계하고 정보를 통합하여 인구정책 전략 프로젝트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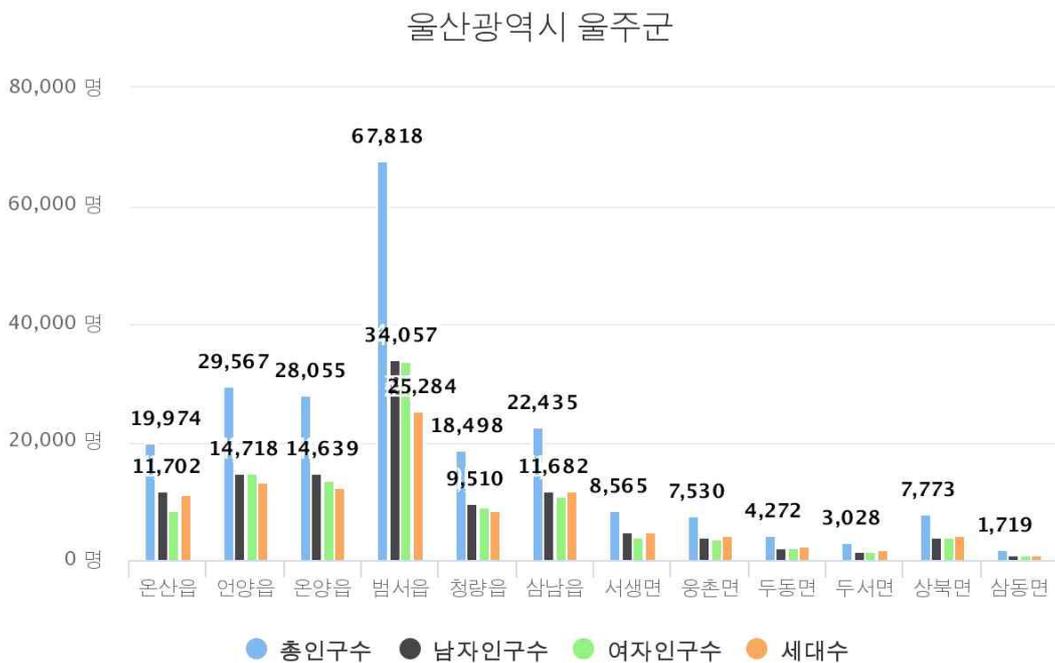
### 제3장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인구 현황

#### 제1절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및 연령별 인구 및 세대 현황

##### 1.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거주자 현황

- 울산 울주군의 총인구수는 2023년 11월 기준 219,234명으로 울산광역시 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이고 있음
- 울산 울주군의 총 세대수는 100,537세대, 세대당 인구수는 2.18명으로 나타남

[그림 3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 거주자 현황(2023. 11월 기준)



[표 21] 울산 울주군 총 인구수 현황표(2023년 11월 기준)

구분	2023년 11월					
	총 거주자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 인구수	여자 인구수	남여 비율
울산광역시	1,103,752	490,174	2.25	567,145	536,607	1.06
중구	208,347	94,147	2.21	105,358	102,989	1.02
남구	307,790	140,245	2.19	157,005	150,785	1.04
동구	152,356	67,702	2.25	79,432	72,924	1.09
북구	216,025	87,543	2.47	111,861	104,164	1.07
울주군	219,234	100,537	2.18	113,489	105,745	1.07

## 2.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

○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전체 연령별 인구 추이를 보면

- 14세 이하는 1월 141,029명에서 10월 136,202명으로, 15~64세 이하는 804,097명에서 794,316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65세 이상은 164,948명에서 175,513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39]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3년 1월 ~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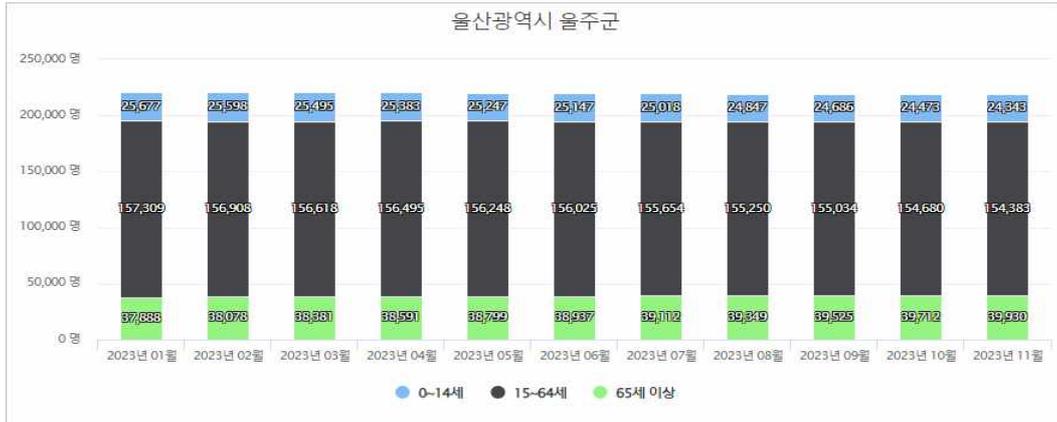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령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 14세 이하는 1월 25,677명에서 11월 24,34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15~64세 이하는 157,309명에서 154,383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65세 이상은 37,888명에서 39,93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3년 1월 ~ 11월)



[표 22] 울산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연령별 인구 현황표(2023년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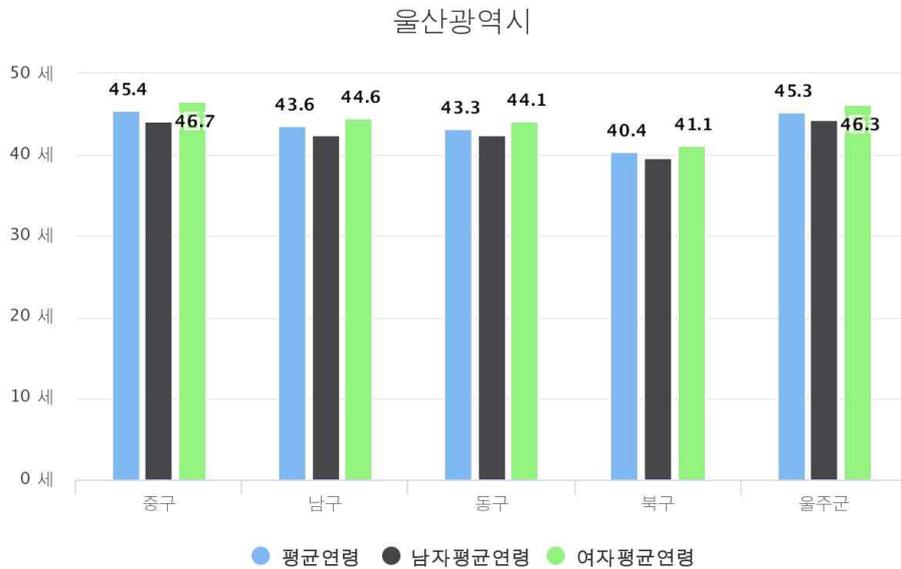
구 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총 인구수	1,103,752	208,347	307,790	152,356	216,025	219,234
0~9세	79,489	13,559	20,053	11,615	20,421	13,841
10~19세	109,488	19,149	28,266	16,014	24,652	21,407
20~29세	122,788	21,867	38,569	15,509	23,478	23,365
30~39세	137,197	24,399	40,588	19,083	29,843	23,284
40~49세	178,531	31,555	47,017	26,966	39,353	33,640
50~59세	204,292	38,878	59,051	24,281	38,711	43,371
60~69세	169,171	35,185	47,055	24,837	26,310	35,784
70~79세	71,082	16,535	19,339	10,413	9,006	15,789
80~89세	27,967	6,427	7,036	3,247	3,692	7,565
90~99세	3,666	780	805	377	546	1,158
100세 이상	81	13	11	14	13	30

## 제2절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

### 1.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

-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을 보면 전체 평균연령에서 울주군이 45.3세로 울산광역시 내 두 번째로 높은 연령을 보이고 있음 (2023년 11월 기준)

[그림 41]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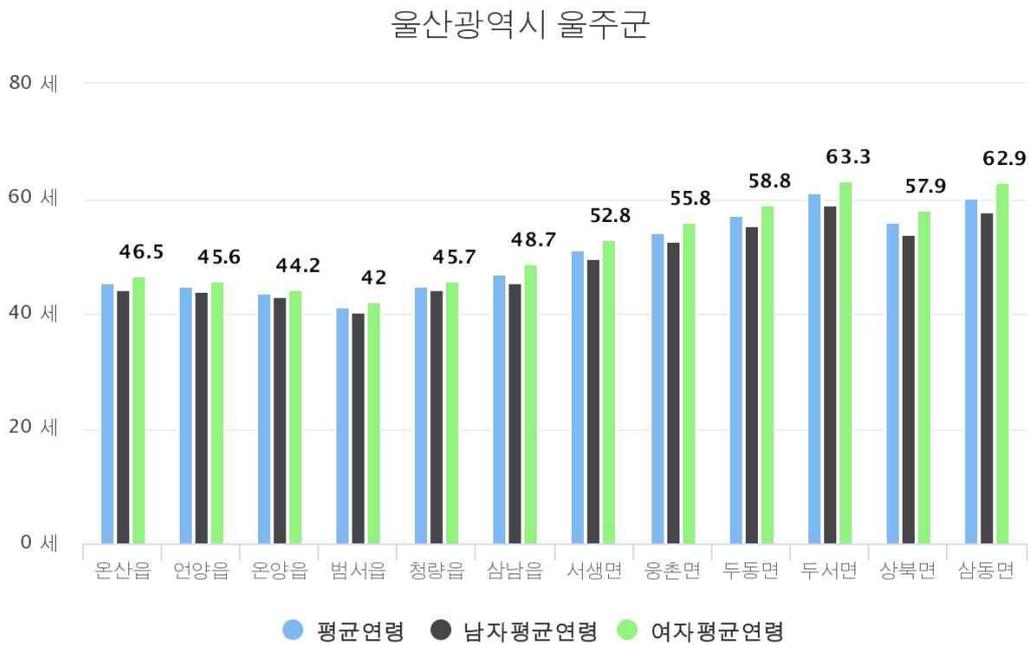


[표 23]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 연령(2023년 11월 기준)

구분	남자 평균연령	여자 평균연령	평균연령
울산광역시	42.7	44.6	43.6
중구	44.1	46.6	45.3
남구	42.6	44.7	43.6
동구	42.5	44.2	43.3
북구	39.8	41.2	40.5
울주군	44.3	46.3	45.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세부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두서면이 61.1세로 가장 높은 평균연령을 보이고 있으며, 범서읍이 41.2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2023년 11월 기준)

[그림 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령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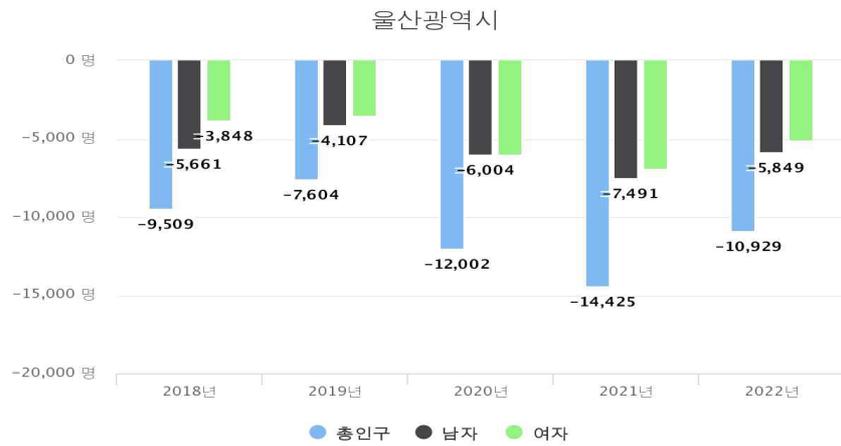
[표 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평균 연령

구분	남자 평균연령	여자 평균연령	평균연령
울주군	44.3	46.4	45.3
온산읍	44.3	46.5	45.3
언양읍	43.8	45.6	44.7
온양읍	43.0	44.2	43.6
범서읍	40.4	42.0	41.2
청량읍	44.1	45.7	44.8
삼남읍	45.4	48.7	47.0
서생면	49.6	52.8	51.0
웅촌면	52.5	55.8	54.1
두동면	55.3	58.8	57.0
두서면	59.0	63.3	61.1
상북면	53.8	57.9	55.8
삼동면	57.8	62.9	60.2

## 2.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및 울주군 인구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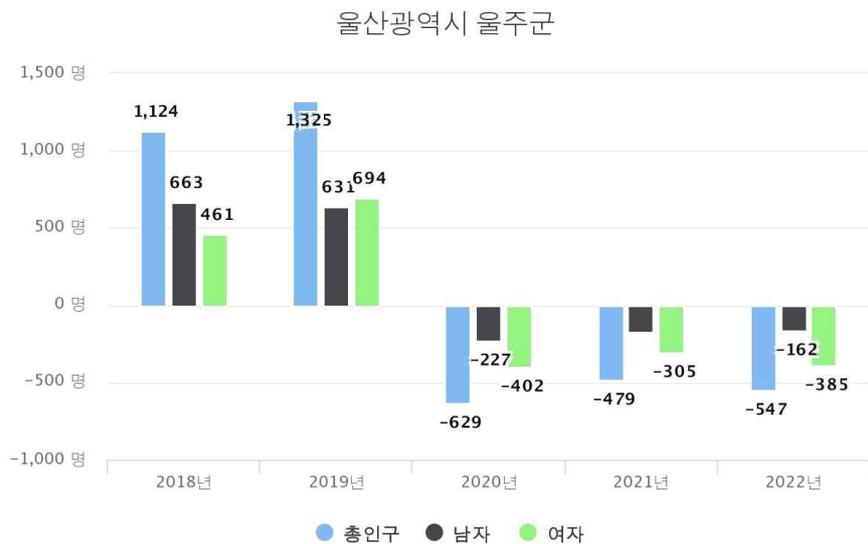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인구증감을 보면 2018~2022년 중 2021년에 -14,425명으로 큰 폭의 인구감소가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2022년에도 -10,929명으로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43] 울산광역시 인구증감(2018~2022년)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인구증감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총인구는 각각 1,124명, 1,325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20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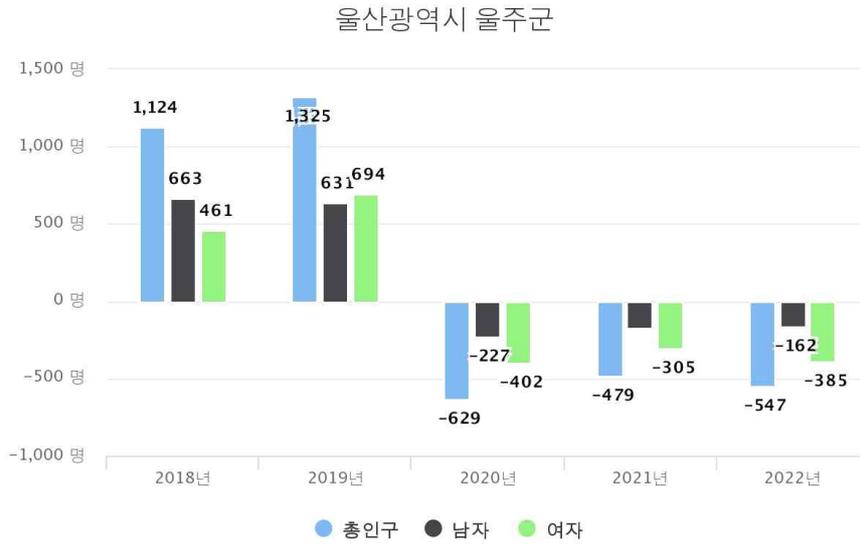
[그림 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감(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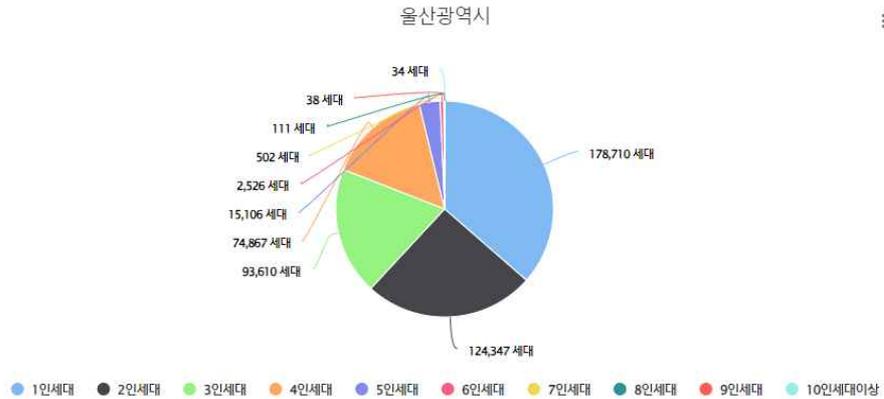
### 3.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2023년 10월 기준)

- 울산광역시 세대원 세대수를 보면 1인 가구가 178,710세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인 세대가 124,347명, 3인 세대가 93,610세대로 나타남

[그림 4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증감(201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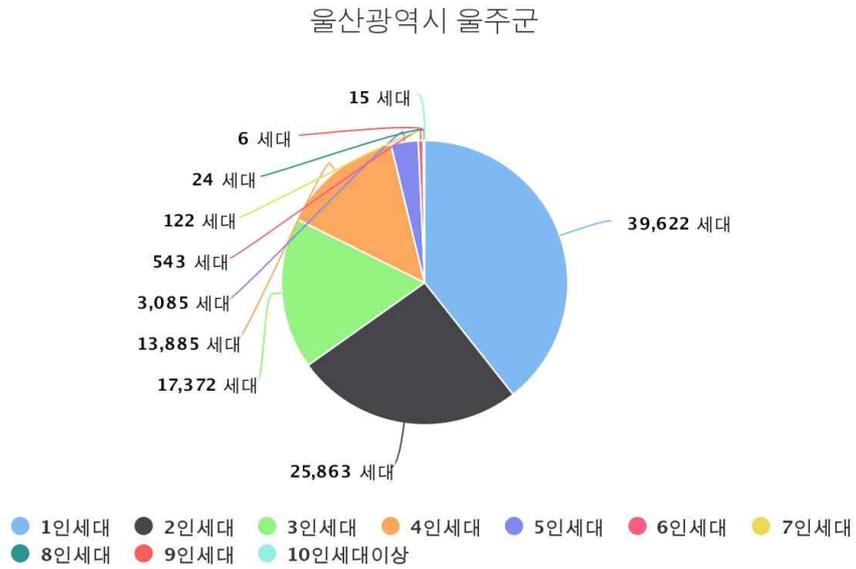


[그림 46]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1인 세대가 24,723세대, 2인 세대가 17,604세대, 그리고 3인 세대가 12,309세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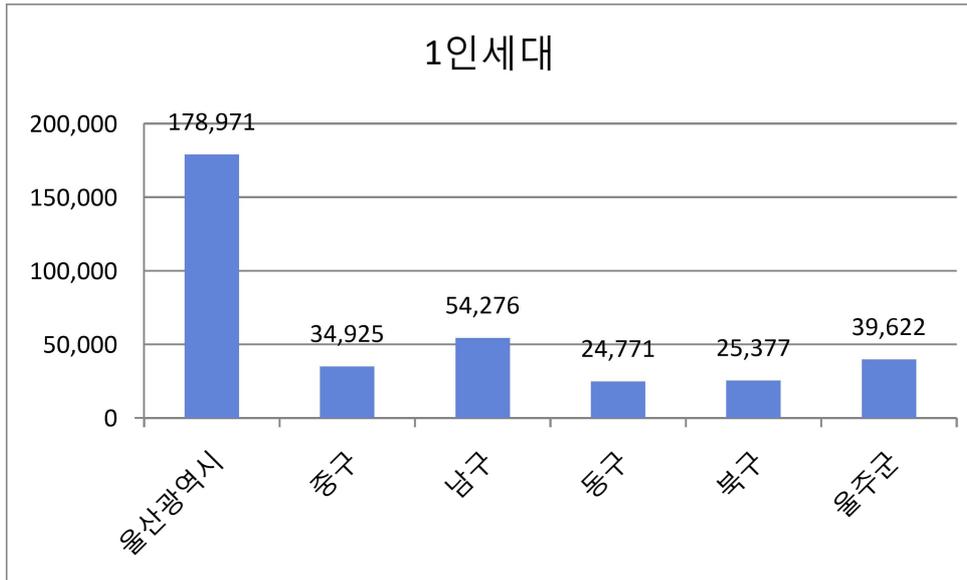
[그림 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대별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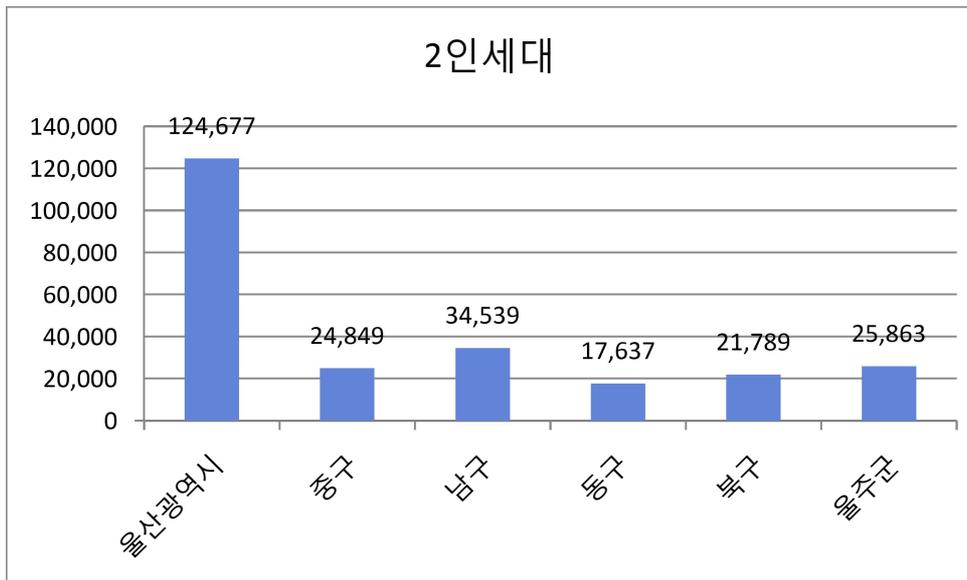
[표 25]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세대원 세대수(2023년 11월 기준)

구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세대	490,174	94,147	140,245	67,702	87,543	100,537
1인세대	178,971	34,925	54,276	24,771	25,377	39,622
2인세대	124,677	24,849	34,539	17,637	21,789	25,863
3인세대	93,679	17,826	26,750	12,338	19,393	17,372
4인세대	74,579	13,248	20,228	10,216	17,002	13,885
5인세대	15,055	2,722	3,667	2,216	3,365	3,085
6인세대	2,535	461	620	424	487	543
7인세대	499	86	121	72	98	122
8인세대	108	16	28	18	22	24
9인세대	37	8	12	5	6	6
10인세대 이상	34	6	4	5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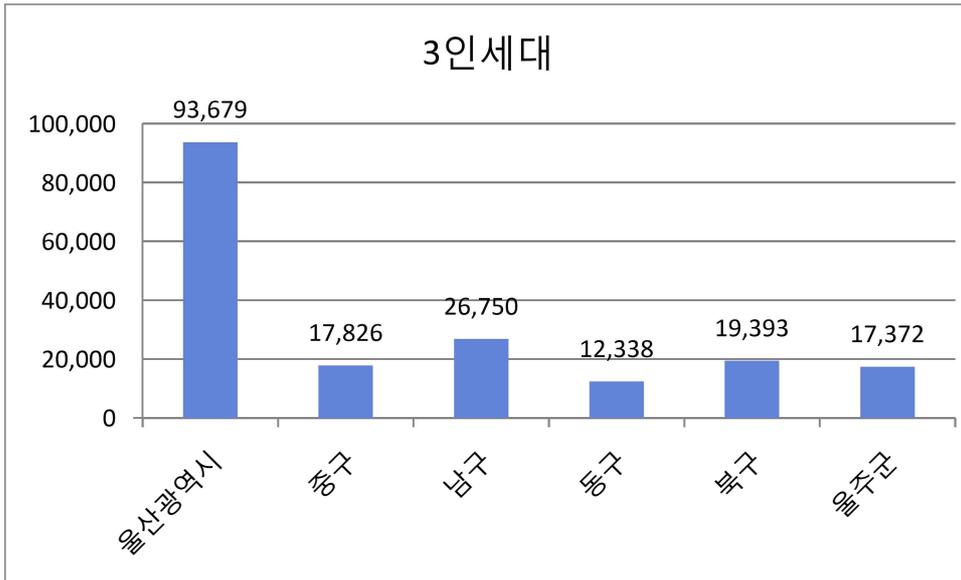
[그림 48]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1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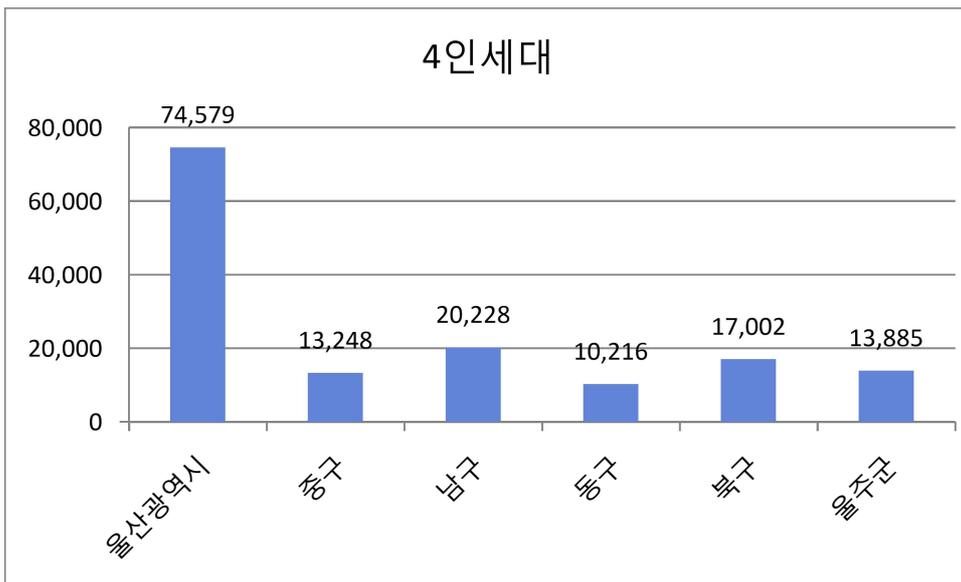
[그림 49]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2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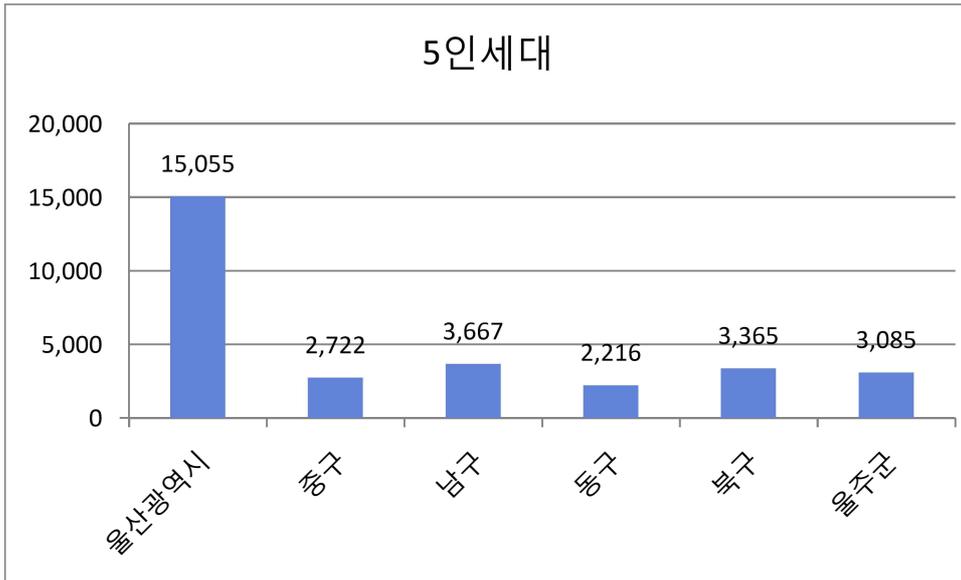
[그림 50]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3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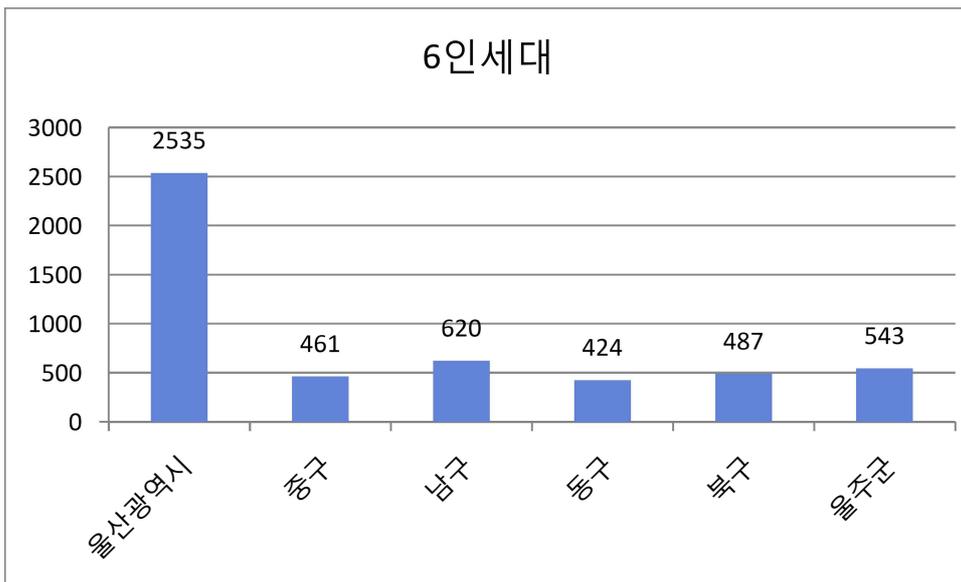
[그림 51]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4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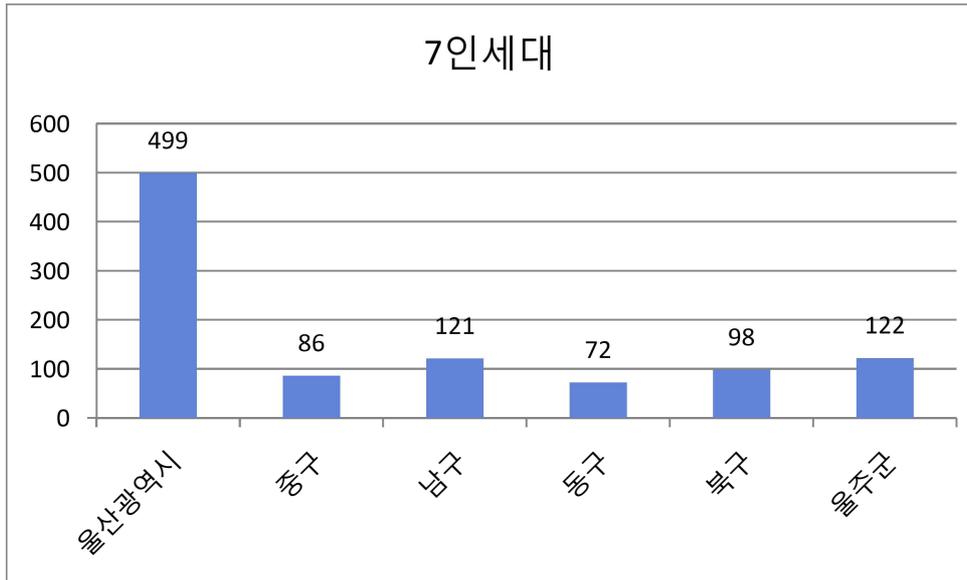
[그림 52]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5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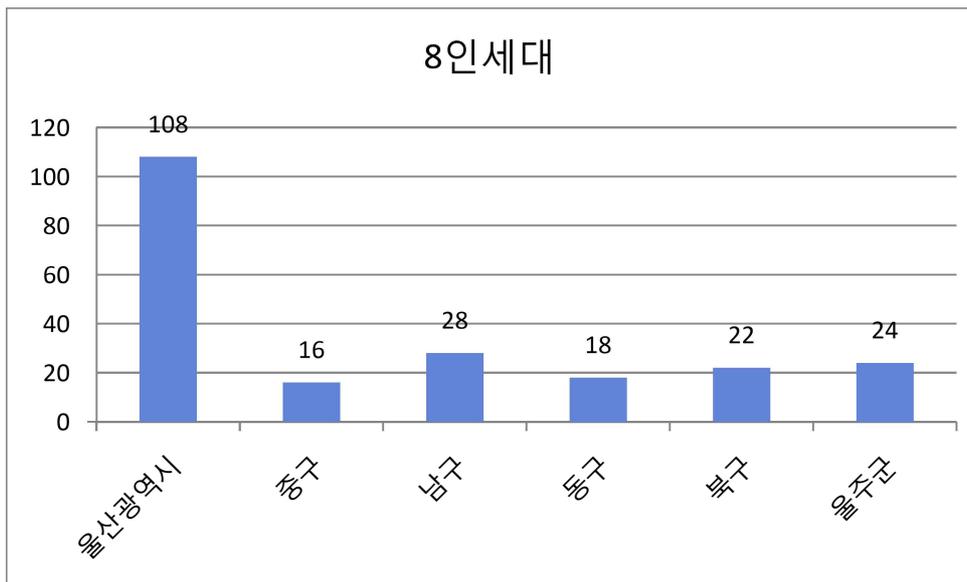
[그림 53]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6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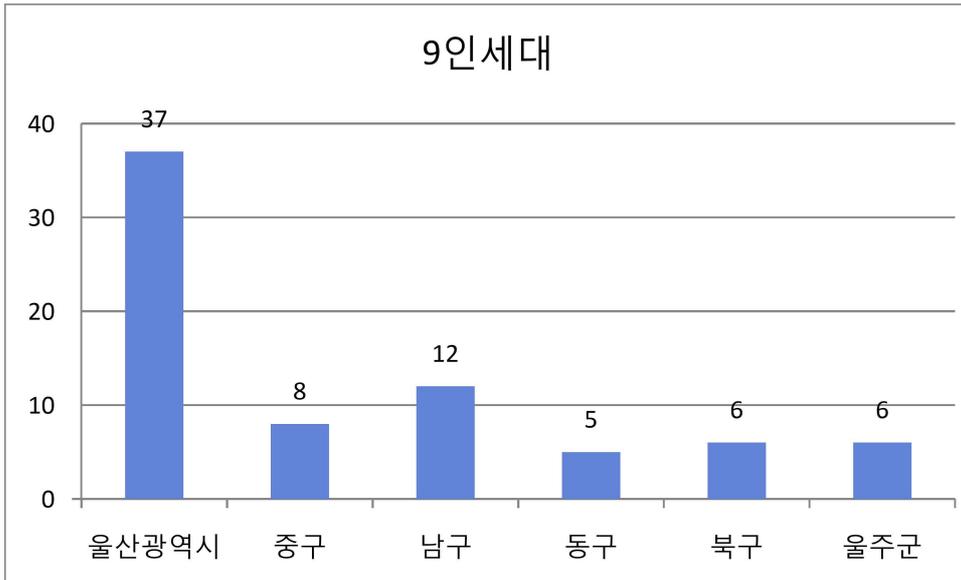
[그림 54]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7인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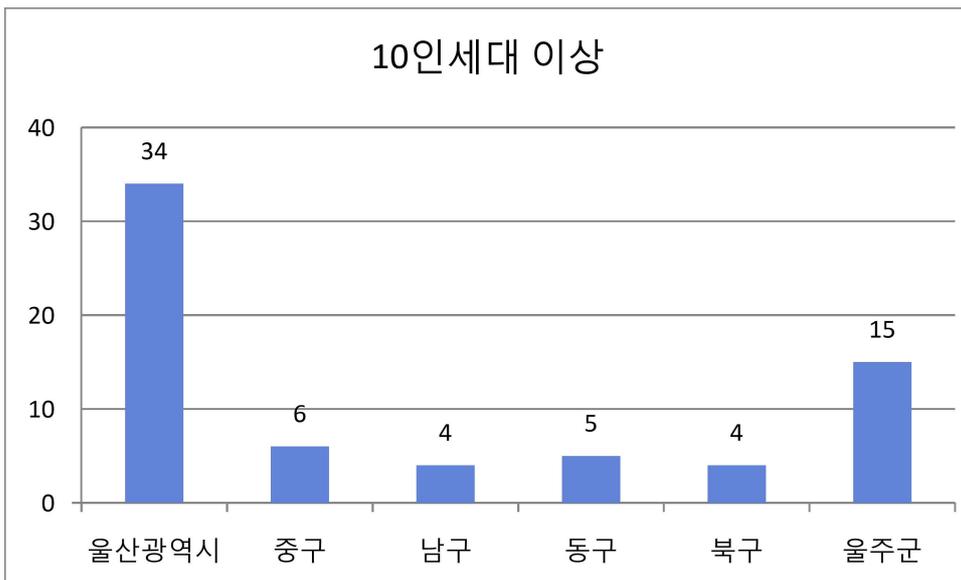
[그림 55]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8인 세대



[그림 56]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9인 세대



[그림 57] 울산광역시 및 지역별 10인 세대 이상



#### 4.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지역 내 다른 구·군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인구는 지역 내 2번째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8] 울산광역시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현황(2023. 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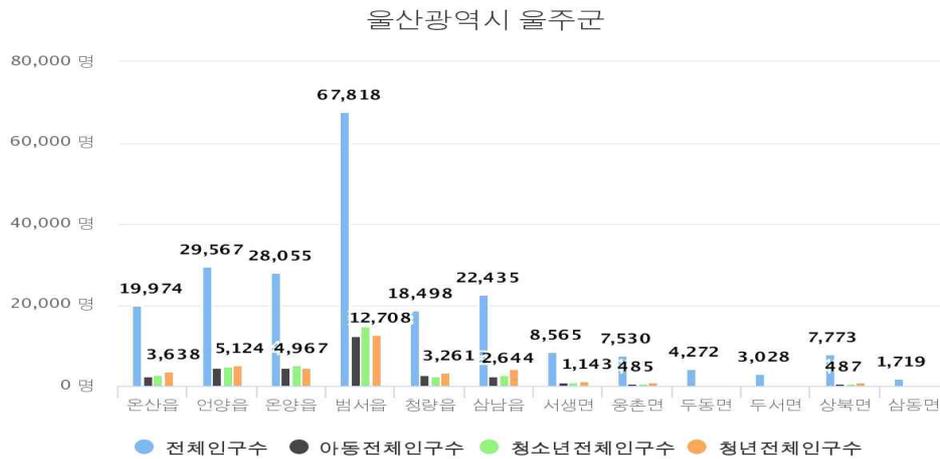


[표 26] 울산광역시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현황(2023년 10월 기준)

구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1,103,752	208,347	307,790	152,356	216,025	219,234
남자	567,145	105,358	157,005	79,432	111,861	113,489
여자	536,607	102,989	150,785	72,924	104,164	105,745
아동전체	168,893	29,203	42,739	24,998	40,990	30,963
아동남자	87,208	15,219	22,125	12,909	21,016	15,939
아동여자	81,685	13,984	20,614	12,089	19,974	15,024
청소년 전체	175,746	30,661	48,006	24,674	37,645	34,760
청소년남자	93,965	16,568	25,696	13,116	20,107	18,478
청소년여자	81,781	14,093	22,310	11,558	17,538	16,282
청년전체	202,333	36,158	63,135	25,487	40,150	37,403
청년남자	113,580	20,158	35,242	14,346	22,744	21,090
청년여자	88,753	16,000	27,893	11,141	17,406	16,31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중 범서읍이 아동, 청소년, 청년 수가 각각 12,347명, 14,624명, 12,708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삼동면이 세부 지역 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임

[그림 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현황 (2023. 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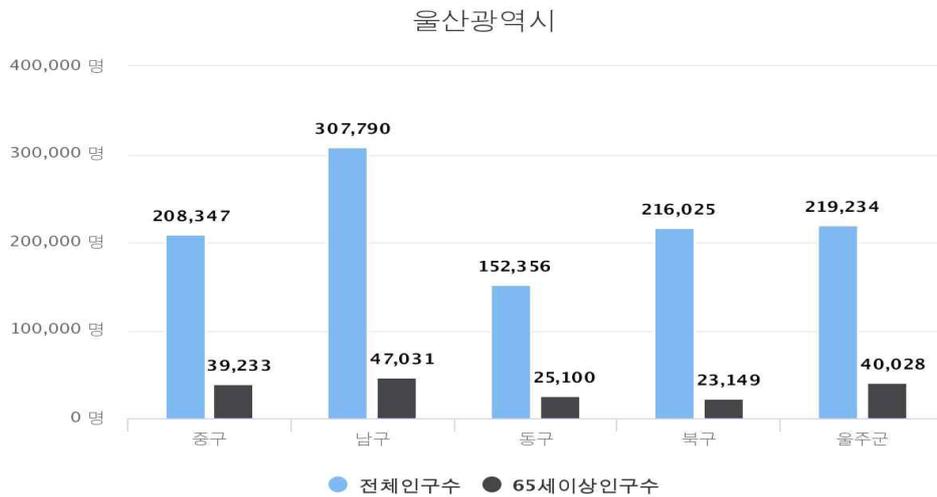
[표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인구 분포

구분	전체	아동전체	청소년 전체	청년 전체
울주군	219,234	30,963	34,760	37,403
온산읍	19,974	2,358	2,572	3,638
언양읍	29,567	4,507	4,711	5,124
온양읍	28,055	4,523	4,967	4,646
범서읍	67,818	12,347	14,621	12,708
청량읍	18,498	2,637	2,437	3,261
삼남읍	22,435	2,400	2,644	4,271
서생면	8,565	792	896	1,143
웅촌면	7,530	485	681	1,041
두동면	4,272	252	310	391
두서면	3,028	113	171	226
상북면	7,773	487	670	821
삼동면	1,719	62	80	133

## 5.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고령 인구 현황

- 울산광역시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울주군은 40,028명으로 지역 내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편입

[그림 60] 울산광역시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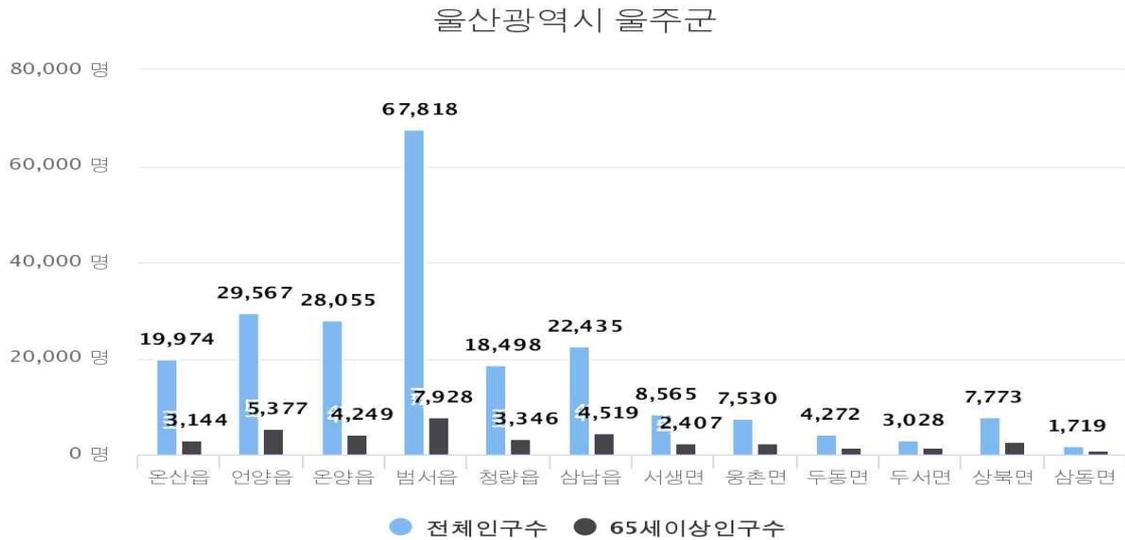


[표 28] 울산광역시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표(2023. 11월 기준)

구분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체	1,103,752	208,347	307,790	152,356	216,025	219,234
남자	567,145	105,358	157,005	79,432	111,861	113,489
여자	536,607	102,989	150,785	72,924	104,164	105,745
65세이상 전체	174,541	39,233	47,031	25,100	23,149	40,028
65세이상 남자	80,751	17,674	21,785	12,070	10,778	18,444
65세이상 여자	93,790	21,559	25,246	13,030	12,371	21,58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범서읍이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7,928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61]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표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부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2023. 11월 기준)

구분	전체	65세이상 전체	65세이상 남자	65세이상 여자
울주군	219,234	40,028	18,444	21,584
온산읍	19,974	3,144	1,446	1,698
언양읍	29,567	5,377	2,417	2,960
온양읍	28,055	4,249	1,975	2,274
범서읍	67,818	7,928	3,687	4,241
청량읍	18,498	3,346	1,564	1,782
삼남읍	22,435	4,519	2,056	2,463
서생면	8,565	2,407	1,116	1,291
웅촌면	7,530	2,468	1,125	1,343
두동면	4,272	1,621	760	861
두서면	3,028	1,435	658	777
상북면	7,773	2,748	1,268	1,480
삼동면	1,719	786	372	414

## 제4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환경·안전 현황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환경·안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 및 활용하였음<sup>1)</sup>
- 전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를 위해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sup>2)</sup> 내용 중 해당 항목과 유사한 항목에 대해 결과 비교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해 전국 대비 울주군의 현 상황 및 수준을 파악함

### 제1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 현황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형태(2022년 기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거주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54.8%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40.3%로 지역 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0] 울산광역시 지역별 거주형태 형태

(단위: %)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거주지역	중 구	50.9	25.8	7.5	11.4	4.5
	남 구	62.5	13.4	5.3	17.1	1.8
	동 구	57.2	27.0	6.3	7.0	2.4
	북 구	77.8	17.4	2.2	0.4	2.2
	울주군	54.8	40.3	2.9	0.7	1.3

자료: 2022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 1)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개인 관련 사항 16개 항목과 가구수 응답 21개 항목, 각 부문별 공통 응답 71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내 총 3,820가구를 조사하였고, 이 중 울주군의 경우 740가구(전체 대비 19.4%)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는 전국 약 19,000 가구 중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됨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거주 형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6.5점으로 지역 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1] 울산광역시 지역별 거주형태 만족도

구 분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10점 척도 평균]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거 주 지 역	중 구	0.8	1.5	1.7	2.1	4.8	39.4	9.1	11.6	14.3	6.5	8.2	6.2
	남 구	1.6	1.0	2.5	2.4	4.2	38.0	10.1	15.1	11.5	4.7	8.9	6.1
	동 구	1.1	1.5	2.5	3.2	3.4	52.7	5.6	10.1	8.3	3.2	8.5	5.8
	북 구	1.4	1.0	1.7	3.1	5.4	47.0	7.5	13.0	10.9	3.5	5.5	5.8
	울주군	0.4	0.4	2.3	2.5	1.9	35.2	10.3	15.1	13.1	9.9	8.9	6.5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6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도 20.9%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 주택 점유 형태(단위: %)

(단위: %)

구분		자기 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기타
거 주 지 역	중 구	67.3	12.4	14.9	2.1	3.0	0.1
	남 구	64.3	14.0	18.0	0.7	2.8	0.2
	동 구	65.4	10.1	20.4	1.0	2.4	0.8
	북 구	67.4	11.0	15.5	1.9	4.1	0.0
	울주군	68.6	5.3	20.9	2.1	3.2	0.0

##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혼 및 자녀 계획(2022년 기준)

### 결혼계획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결혼계획 의향 중 ‘있다’ 는

응답은 21.9%로 지역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계획은 24.2%로 지역 내 보통 수준임

- 전국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2022) 남성의 경우 55.8%, 여성은 44.3%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33] 결혼 계획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 구	31.2	23.0	28.1	28.2	40.7	48.8
	남 구	34.7	26.9	19.8	36.0	45.4	37.1
	동 구	32.9	17.3	26.1	26.5	41.0	56.2
	북 구	36.2	27.5	23.3	31.7	40.6	40.8
	<b>울주군</b>	<b>21.9</b>	<b>24.2</b>	<b>30.4</b>	<b>31.6</b>	<b>47.7</b>	<b>44.2</b>

[표 34] 전국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에 대한 견해

구분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남자	55.8	37.7	2.8	3.8
여자	44.3	48.7	4.4	2.6

- 통계청(2022)의 사회조사 결과 중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가 12.8% 등으로 나타남

[표 35] 전국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남자	32.8	16.6	11.9
여자	24.6	12.7	13.7

□ 자녀계획

- 남성의 자녀계획은 울산광역시 내 다른 구·군에 비해 울주군의 경우 53.6%가 ‘없음’ 으로 지역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있음’ 의 경우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없음’ 의 응답율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있음’ 의 경우도 15.5%로 지역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표 36] 자녀 의향(남성)

(단위: %)

구분	없음		있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잘 모르겠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 구	47.6	56.7	29.7	23.9	19.0	14.6	10.2	8.3	0.5	0.8	0.0	0.3	22.7	19.4
	남 구	44.0	60.9	33.8	26.7	18.7	14.3	14.7	11.5	0.3	0.4	0.2	0.5	22.1	12.4
	등 구	60.0	66.1	25.2	17.4	12.4	10.0	11.2	5.2	0.8	1.3	0.7	0.9	14.8	16.5
	북 구	59.6	68.8	27.9	20.3	15.5	12.0	11.3	7.5	0.8	0.7	0.3	0.0	12.5	10.9
	<b>울주군</b>	<b>53.6</b>	<b>70.5</b>	<b>23.8</b>	<b>15.5</b>	<b>14.9</b>	<b>8.0</b>	<b>7.0</b>	<b>6.8</b>	<b>0.9</b>	<b>0.7</b>	<b>0.9</b>	<b>0.0</b>	<b>22.6</b>	<b>14.0</b>

###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 기피 사유(2022년 기준)

□ 남성의 출산 기피 사유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남성의 경우 ‘현재 자녀 수에 만족’ 이 53.0%로 가장 높은 반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도 18.1%로 나타남

[표 37] 출산 기피 사유(남성)

(단위 : %)

구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교육 등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주택 마련 부담	보육 인프라 미흡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나이가 많아서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현재 자녀 수에 만족	일과 가정 균형 어려움	기타
거주지역	중 구	10.4	5.4	2.3	4.6	0.6	1.2	17.5	9.3	45.9	2.3	0.6
	남 구	19.5	4.3	0.4	2.8	0.5	1.3	11.2	5.7	50.8	2.3	1.2
	동 구	20.6	2.3	1.3	0.8	1.6	1.1	14.7	16.8	38.7	0.5	1.6
	북 구	18.9	2.4	0.9	0.6	0.0	0.6	9.9	10.3	54.3	0.0	2.2
	울주군	18.1	2.2	1.2	1.1	0.6	0.6	9.8	9.4	53.0	2.9	1.1

□ 여성의 출산 기피 사유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여성의 경우 ‘현재 자녀 수에 만족’ 이 56.0%로 가장 높은 반면, ‘나이가 많아서’ 가 14.4%,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도 11.6%로 나타남

[표 38] 출산 기피 사유(여성)

(단위 : %)

구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교육 등 교육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주택 마련 부담	보육 인프라 미흡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나이가 많아서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함	현재 자녀 수에 만족	일과 가정 균형 어려움	기타
거주지역	중 구	12.7	1.7	1.5	0.5	0.6	1.5	16.6	10.2	46.8	5.6	2.5
	남 구	19.9	1.2	1.5	0.5	2.4	0.6	14.1	5.9	50.7	2.2	1.1
	동 구	15.7	1.9	3.9	0.0	0.0	0.0	20.3	9.7	46.8	0.0	1.6
	북 구	12.2	1.3	2.3	0.0	0.7	1.5	16.3	7.8	54.1	2.9	0.8
	울주군	11.6	2.1	2.6	0.0	0.0	1.5	14.4	9.1	56.0	0.4	2.4

####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삶 및 생활 만족도(2022년 기준)

##### □ 삶 만족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남성의 삶 만족도는 5.9점, 여성의 경우 6.2로 다른 구군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표 39] 최근 자신의 삶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삶 만족도 [10점 척도 평균]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구	5.6	5.6
	남구	5.7	5.7
	울주군	5.5	5.4
	북구	5.6	5.6
	<b>울주군</b>	<b>5.9</b>	<b>6.2</b>

##### □ 생활 만족도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남성의 생활 만족도는 5.9점, 여성의 경우 6.0으로 지역 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0] 최근 생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삶 만족도 [10점 척도 평균]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구	5.6	5.6
	남구	5.8	5.8
	울주군	5.3	5.2
	북구	5.4	5.4
	<b>울주군</b>	<b>5.9</b>	<b>6.0</b>

##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요 복지정책 인식(2022년 기준)

### □ 복지정책 인식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복지 확대’ 46.5%,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서비스 증진’ 39.5%,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이 3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 확대’ 가 3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 필요 복지정책 인식(남성)

(단위: %)

구분		저소득층 복지 확대	장애인 복지 시책 확대	노인 복지 시책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 시책 확대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서비스 증진	청년 복지 시책 확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시책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강화	여성 복지 시책 확대	기타
거주지역	중 구	40.7	15.8	42.7	29.3	43.2	32.1	49.4	8.2	23.3	5.2	1.5
	남 구	42.8	24.1	40.6	33.7	34.5	36.8	46.7	10.0	20.4	6.3	0.9
	동 구	45.1	14.0	47.0	32.2	41.7	27.7	48.7	10.6	19.1	5.6	2.9
	북 구	39.6	13.9	36.3	37.0	39.1	30.9	49.6	11.0	24.8	7.4	2.2
	<b>울주군</b>	<b>46.5</b>	<b>16.0</b>	<b>41.0</b>	<b>25.9</b>	<b>39.5</b>	<b>22.9</b>	<b>39.4</b>	<b>10.6</b>	<b>20.4</b>	<b>5.4</b>	<b>0.1</b>

[표 42] 필요 복지정책 인식(여성)

(단위: %)

구분		저소득층 복지 확대	장애인 복지 시책 확대	노인 복지 시책 확대	아동, 청소년 복지 시책 확대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서비스 증진	청년 복지 시책 확대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시책 확대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 교통 강화	여성 복지 시책 확대	기타
거주지역	중 구	36.7	12.4	42.3	29.5	38.8	28.9	45.9	10.9	23.3	23.7	0.8
	남 구	37.1	24.0	44.9	35.0	35.0	27.9	43.4	12.2	18.1	19.8	0.6
	동 구	39.8	15.7	44.7	31.9	39.8	23.6	45.9	9.9	20.6	22.6	1.7
	북 구	30.4	16.0	35.9	40.7	33.6	26.0	44.7	10.8	24.4	28.5	3.2
	<b>울주군</b>	<b>35.9</b>	<b>17.9</b>	<b>37.3</b>	<b>31.6</b>	<b>36.2</b>	<b>18.3</b>	<b>40.7</b>	<b>12.6</b>	<b>24.9</b>	<b>19.3</b>	<b>0.3</b>

###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2022년 기준)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 남성의 경우 해당 항목의 만족도가 3.23점, 여성은 3.34로 울산광역시 지역 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10점 척도 평균]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구	2.97	2.95
	남구	3.08	3.13
	울주군	2.79	2.88
	북구	2.88	2.93
	<b>울주군</b>	<b>3.23</b>	<b>3.34</b>

##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2022년 기준)

□ 남성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 울주군의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는 남성은 3.23점, 여성은 3.31점으로 울산광역시 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44]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5점 척도 평균]	
		남성	여성
거주지역	중구	3.00	3.05
	남구	3.12	3.21
	울주군	2.80	2.90
	북구	2.88	2.99
	울주군	3.23	3.31

##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 복지 향상 중점 분야(2022년 기준)

□ 남성의 여성 복지 향상 중점분야

- 남성의 경우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센터를 늘린다’와 ‘여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한다’가 각각 71.2%, 72.7%로 나타남

[표 45] 여성복지 향상 중점분야(남성,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센터를 늘린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린다	자녀양육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늘린다	여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한다	여성이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해 준다	기타
거주지역	중 구	76.1	75.5	52.6	62.9	19.9	1.1
	남 구	76.3	79.4	61.9	57.5	20.6	0.6
	동 구	78.0	75.9	58.4	61.4	18.0	2.1
	북 구	71.7	75.4	62.4	58.5	17.2	2.2
	울주군	71.2	72.7	49.1	56.1	15.9	0.3

□ 여성의 여성 복지 향상 중점분야

- 여성의 경우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센터를 늘린다’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린다’가 각각 71.1%, 78.9%로 나타남

[표 46] 여성복지 향상 중점분야(여성, 중복응답)

(단위: %)

구분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센터를 늘린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린다	자녀양육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늘린다	여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한다	여성이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해 준다	기타
거주지역	중 구	74.4	79.5	48.8	63.6	22.1	1.8
	남 구	73.6	79.3	56.3	62.8	24.9	0.5
	동 구	75.4	84.2	50.9	62.9	21.8	1.0
	북 구	75.8	85.7	52.4	58.2	19.0	1.9
	울주군	71.1	78.9	41.6	59.5	21.7	1.1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 개선 시 중요사항(2022년 기준)

- 울주군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24.1%로 개선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7] 보육환경 개선 시 중요사항

(단위: %)

구분		보육비 지원 확대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보육교사 확충	육아휴직제도 등의 정착	기타
거주지역	중 구	26.7	17.3	21.6	13.2	9.1	11.1	1.0
	남 구	22.6	21.1	20.6	14.7	10.3	10.8	0.0
	동 구	34.6	15.2	17.1	13.8	7.8	10.4	1.2
	북 구	27.8	17.8	19.5	13.8	9.5	11.2	0.5
	울주군	24.1	16.4	20.0	13.1	11.0	15.4	0.0

##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복지 우선 사항(2022년 기준)

- 울주군의 장애인 복지 우선 사항 중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관 확충’ 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장애인을 이해·포용분위기 조성’ 이 3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 장애인복지 우선 사업(중복응답)

(단위: %)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아동)수당지급	의료비지원	교육비지원	주거비지원	자립자금대여(창업자금대여등)	고용촉진및직재활사업	장애인생활시설및복지관확충	보조기구(휠체어, 목발등)배부	활동보조인지원	문화, 예술사 참여지원	장애인을 이해·포용분위기 조성	장애 아동 재활 치료·양육 지원 서비스	기타	
														중 구
거주지역	중 구	32.5	40.0	18.9	22.4	13.4	30.2	39.8	8.7	17.6	3.9	37.8	27.9	0.1
	남 구	36.6	41.4	20.5	17.2	14.8	31.6	40.5	7.5	21.5	6.6	32.6	27.3	0.1
	동 구	38.5	43.9	21.8	16.9	13.8	27.1	45.7	7.3	18.5	4.3	33.5	23.7	0.6
	북 구	33.1	36.9	17.4	15.5	9.4	31.3	44.0	9.2	18.7	5.4	39.5	34.0	0.2
	울주군	31.5	30.6	14.3	12.3	16.6	32.0	39.9	7.7	20.8	4.4	37.2	26.3	0.0

##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복지정책 (2022년 기준)

- 울주군 청년 필요 복지정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 청년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단위: %)

구분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준비 비용지원	월세 등 주거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포괄적 생활안정 자금지원	기타	필요 없음	
								중 구
거주지역	중 구	42.0	22.7	9.3	14.5	8.1	0.6	2.8
	남 구	44.1	19.3	8.9	16.6	9.4	0.0	1.6
	동 구	49.8	16.7	9.9	10.2	8.6	0.4	4.4
	북 구	44.6	20.5	9.4	13.2	9.4	0.6	2.4
	울주군	43.7	19.4	6.1	16.9	11.8	0.1	2.0

##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정책 (2022년 기준)

- 울주군의 노인 관련 필요 복지정책으로 ‘의료서비스 확대’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이 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0]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 서비스

(단위: %)

구분		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문화 예술축제 활성화	노인 일자리 제공	소외노인 지원강화	여가, 취미 프로그램 확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평생학습 교육기회 제공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	기타
거주지역	중 구	42.4	1.8	30.1	7.9	7.2	6.5	2.4	1.6	0.2
	남 구	34.1	1.9	31.5	7.9	9.8	7.7	4.9	2.2	0.0
	동 구	38.4	2.7	30.4	6.0	9.2	7.9	3.3	1.4	0.7
	북 구	36.6	1.2	32.2	7.5	10.0	7.9	3.1	1.4	0.1
	울주군	37.6	2.4	27.0	13.6	7.9	6.4	2.5	2.6	0.0

##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지환경 만족도(2022년 기준)

- 울주군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34점으로 지역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 녹지 환경 체감도

(단위: %, 점)

구분									[5점 척도 평균]
		부정 응답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긍정 응답	약간 좋다	매우 좋다	
거주지역	중 구	18.5	3.2	15.3	48.9	32.6	25.3	7.3	3.18
	남 구	19.3	3.9	15.4	55.1	25.6	20.1	5.5	3.08
	동 구	20.2	4.0	16.1	56.8	23.0	18.4	4.6	3.03
	북 구	18.7	4.7	14.0	53.3	28.0	22.0	6.0	3.11
	울주군	15.4	3.6	11.7	43.6	41.1	28.7	12.3	3.34

- 울주군의 환경 개선 관련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기환경 문제’가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 보전’이 19.1%,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문제’가 15.7% 등의 순으로 나 타남

[표 52] 환경문제 우선 개선사항

(단위: %)

구분		자연 생태계 보전	대기 환경 문제	수질 개선 및 식수 관리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문제	토양 오염 방지	산업 공단 환경 개선	하수도 정비	생활 악취 개선	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기타
거주 지역	중 구	17.4	32.5	7.7	11.1	1.2	5.2	12.1	3.9	7.2	1.6
	남 구	10.9	40.5	7.4	8.9	1.9	9.9	7.0	6.4	6.3	0.7
	동 구	12.8	39.1	7.0	10.3	1.6	13.8	3.4	3.1	6.2	2.6
	북 구	19.0	31.9	8.2	7.2	1.2	11.4	3.7	5.5	9.2	2.6
	울주군	19.1	23.8	9.9	15.7	2.2	10.7	6.1	2.5	9.1	1.1

## 제2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 현황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 불안 요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이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위험 및 자원고갈’이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2022) 사회조사 항목 중 사회 불안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이 전국 4.0인데 비해 울주군은 11.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재의 경우 전국 8.0, 울주군 11.3, 신종질병의 경우 전국 21.0, 울주군의 경우 30.4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5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 불안 요인

(단위 : %)

구분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범죄 발생	신종 질병	경제적 위험 및 자원 고갈	사회적 불안
거주 지역	중 구	9.6	12.2	8.8	7.9	13.6	24.7	13.4	9.9
	남 구	10.6	9.5	13.0	8.8	12.2	24.5	10.8	10.6
	동 구	10.6	8.6	13.4	6.4	13.9	24.2	12.5	9.5
	북 구	9.4	8.5	7.8	7.5	15.1	27.1	13.4	11.0
	울주군	9.9	11.0	8.0	5.9	11.3	30.4	13.2	10.3
2022년(통계청)		14.5	4.0	8.4	8.0	13.9	21.0	13.3	-

###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 울주군은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3.21점으로 울산광역시 내 가장 높은 안정 인식을 보이고 있음

[표 54]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

(단위: %, 점)

구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이다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5점 척도 평균]
거주지역	중 구	11.4	1.4	10.0	58.1	30.5	28.9	1.6	3.19
	남 구	13.7	1.7	12.1	58.5	27.8	26.5	1.3	3.14
	동 구	17.3	2.7	14.6	61.7	21.0	20.4	0.5	3.02
	북 구	12.3	1.8	10.5	61.6	26.1	23.4	2.7	3.15
	울주군	10.8	1.6	9.2	56.9	32.3	31.2	1.2	3.21

###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교통 안전

- 도로교통 안전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중구·울주군(각 3.01점) > 북구(2.91점) > 중구(2.90점) > 동구(2.85점)의 순으로 나타나 울주군이 높은 안전 인식을 보이고 있음

[표 55] 교통사고 안전 인식

(단위: %, 점)

구분					보통이다				[5점 척도 평균]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거주지역	중 구	20.4	2.0	18.5	57.1	22.5	21.9	0.5	3.01
	남 구	24.4	2.5	21.9	59.0	16.6	15.9	0.7	2.90
	동 구	28.2	3.5	24.8	55.6	16.2	15.7	0.5	2.85
	북 구	24.7	3.8	20.8	57.4	17.9	16.4	1.6	2.91
	울주군	<b>18.3</b>	<b>2.3</b>	<b>16.0</b>	<b>61.3</b>	<b>20.4</b>	<b>19.3</b>	<b>1.0</b>	<b>3.01</b>

###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 안전

- 울주군의 화재안전 인식은 ‘불안’ 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40.0%로 높은 편이고, 전체 평균 2.71점으로 울산광역시 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임

[표 56] 화재 안전 인식

(단위 : %, 점)

구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이다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5점 척도 평균]
거주지역	중 구	23.4	2.9	20.5	52.2	24.4	23.1	1.2	2.99
	남 구	26.5	2.3	24.2	50.4	23.0	21.6	1.4	2.96
	동 구	30.2	3.8	26.4	51.1	18.8	17.9	0.8	2.86
	북 구	23.4	2.9	20.5	56.7	19.9	17.9	2.0	2.96
	울주군	40.0	4.1	35.9	45.8	14.2	13.5	0.7	2.71

###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먹거리 안전

- 울주군의 먹거리 안전 인식은 전체 평균 3.19점으로 중구의 3.22점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57] 먹거리 안전 인식

(단위 : %, 점)

구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이다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5점 척도 평균]
거주지역	중 구	13.0	1.2	11.8	52.2	34.8	33.2	1.6	3.22
	남 구	17.7	1.7	16.0	54.1	28.2	26.1	2.0	3.11
	동 구	13.6	2.1	11.6	61.7	24.7	23.4	1.3	3.10
	북 구	12.9	1.9	11.1	59.8	27.3	23.9	3.4	3.16
	울주군	12.0	0.4	11.6	58.3	29.7	28.2	1.5	3.19

###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죄 위험 인식

- 울주군의 범죄 위험 인식은 전체 평균 2.93점으로 중구의 2.95점에 이어 높은 편인 평균 값을 보이고 있음

[표 58] 범죄 위험 인식

(단위 : %, 점)

구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이다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5점 척도 평균]
거주지역	중 구	25.8	3.6	22.2	51.0	23.2	22.1	1.1	2.95
	남 구	28.3	4.2	24.1	51.1	20.6	19.1	1.5	2.90
	동 구	34.1	7.2	26.9	49.8	16.1	15.0	1.0	2.76
	북 구	31.0	5.7	25.3	50.0	19.0	16.6	2.5	2.85
	울주군	27.4	5.3	22.1	48.5	24.1	22.8	1.4	2.93

###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반적인 사회 안전 인식

○ 거주지역별 안전 정도를 살펴보면, 중구(3.12점) > 남구(3.06점) > 북구(3.05점) > 울주군(3.00점) > 동구(2.94점)의 순으로 나타남

○ 통계청(2022)의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전’ 과 ‘매우 안전’ 이 전국 22.9%, 3.4%인데 비해 울주군의 경우 22.9%, 0.9%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59] 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 점)

구분		불안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이다	안전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5점 척도 평균]
거주지역	중 구	14.8	1.1	13.7	58.4	26.7	25.3	1.5	3.12
	남 구	17.1	2.1	15.0	59.4	23.5	21.8	1.7	3.06
	동 구	21.8	3.0	18.8	60.4	17.8	16.7	1.1	2.94
	북 구	17.2	2.1	15.1	60.3	22.5	20.8	1.7	3.05
	울주군	22.2	2.2	20.0	54.0	23.8	22.9	0.9	3.00
2022년(통계청)		-	2.6	19.1	45.0	-	28.8	3.4	-

##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업(이직) 및 창업 인식

### 남성 취업(이직) 인식

- 울주군 거주 남성의 경우 우선 ‘취업, 창업 의사 없음’ 이 72.3%로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이직)’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창업(업종 변경) 이 7.0%로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표 60] 취업 및 창업 의사(남성)

(단위 : %)

구분		취업(이직)	창업(업종 변경)	취업, 창업 의사 없음
거주지역	중 구	24.9	3.7	71.4
	남 구	26.8	4.9	68.4
	동 구	32.8	4.7	62.5
	북 구	32.3	6.4	61.3
	울주군	20.7	7.0	72.3

### 여성 취업(이직) 인식

- 여성의 경우 취업(이직) 의사가 23.3%로 울산광역시 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61] 취업 및 창업 의사(여성)

(단위 : %)

구분		취업(이직)	창업(업종변경)	취업, 창업 의사 없음
거주지역	중 구	24.7	3.4	71.9
	남 구	24.7	4.7	70.6
	동 구	27.0	3.8	69.2
	북 구	32.5	6.9	60.6
	울주군	23.3	4.1	72.6

### 남성 창업 희망 분야

- 울주군 남성의 창업 희망 분야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이 20.1%, ‘서비스업’ 이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2] 창업 희망 분야(남성)

(단위 : %)

구분	제조업	건설업	IT/신기술/벤처분야	운수업	금융·보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업	문화·예술·창작관련업	방송·통신관련업	농·어업 및 임업	기타	
거주지역	중 구	7.4	3.9	0.0	22.0	0.0	3.2	19.7	34.1	6.4	0.0	0.0	-	3.2	-
	남 구	10.1	13.1	6.6	2.2	0.0	10.6	19.0	25.0	2.3	3.7	2.2	-	5.3	-
	동 구	33.8	3.9	2.6	0.0	0.0	0.0	40.6	8.2	5.7	0.0	0.0	-	5.3	-
	북 구	5.5	9.2	9.8	7.0	4.4	0.0	22.9	31.3	2.4	2.1	2.4	-	2.9	-
	울주군	10.9	6.3	12.1	0.0	5.5	8.3	20.1	16.5	8.5	5.8	0.0	-	5.9	-

□ 여성 창업 희망 분야

-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 이 가장 높은 3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 음식점업’ 이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3] 창업 희망 분야(여성)

(단위 : %)

구분	제조업	건설업	IT/신기술/벤처분야	운수업	금융·보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업	문화·예술·창작관련업	방송·통신관련업	농·어업 및 임업	기타	
거주지역	중 구	7.3	0.0	0.0	0.0	3.6	3.6	18.0	38.7	11.6	3.6	6.9	3.5	3.3	0.0
	남 구	10.0	0.0	6.2	0.0	0.0	19.8	30.1	16.7	3.9	5.0	8.2	0.0	0.0	0.0
	동 구	0.0	0.0	14.7	0.0	5.1	5.1	21.2	14.9	3.7	18.3	11.2	5.9	0.0	0.0
	북 구	0.0	0.0	1.9	2.4	0.0	4.7	27.5	39.8	4.7	6.2	4.9	5.2	2.7	0.0
	울주군	0.0	4.6	4.6	0.0	4.6	0.0	18.6	39.7	10.4	10.5	0.0	0.0	3.5	3.4

### 제3절 2022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관련 정책

- 울산광역시 2023년 울주군의 인구정책 분야 중 복지, 일자리 등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울주 군립병원 설립

##### □ 추진배경

- 2019년 이후 남부권 응급의료시설 전무로 주민 의료공백 장기화
- 군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남부권 공공 응급의료기관 설립 요구

##### □ 추진개요

- 위 치 : 울주군 남부권 일원
- 사업내용 : 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운영
- 소요예산 : 기본계획 수립 후 확정

##### □ 추진사항

- 2022. 2. ~ 12. : 군립병원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추진(울산연구원)

##### □ 추진계획

- 2022. 8. ~ 2023. 1. : 주민의견수렴, 추진방안 확정(규모, 위치, 추진방식 등)
- 2023. 1. ~ 2023. 6. : 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기능, 운영방안 등)
- 2023. 7. ~ 2023. 12. : 병원 부지매입
- 2024. 1. ~ 2024. 12. : 실시설계
- 2025. 1. ~ 2027. 상반기. : 건립공사 추진
- 2027. 하반기 ~ : 병원 운영

## 2.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 추진배경

- 관내 산후조리원 전무한 상황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하는 상황
- 고액의 산후조리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 건설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우선 조성 필요

### □ 추진개요

- 기 간 : 2022. ~ 2025.
- 위 치 : 울주군 일원
-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 모자동(30실), 신생아실, 산후관리실, 프로그램실, 운동실 등
- 사업규모 : 지상 4층 / 연면적 3,000㎡
- 소요예산 : 12,000백만원(군비) ※ 추진방안에 따라 변동 가능

### □ 추진계획

- 2022. 8. ~ 2023. 2. :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 2023. 3. ~ 12.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 2024. 1. ~ 2025. 6. : 건립공사 추진, 운영계획 수립
- 2025. 7. ~ : 운영

## 3. 복합문화공간 울주문화원사 건립

### □ 추진개요

- 위 치 : 울주군 온양읍 일원
- 기 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울주문화원사 1동 건립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1동, 연면적 1,652㎡
  - 주요시설 : 전시관, 강당, 강의실, 다목적실 등
- 소요예산 : 7,000백만원(시비 1,500, 군비 5,500)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2. 8. ~ 12. : 문화원사 부지 검토
- 2023. 1. ~ 6. :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3. 6. ~ 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4. 1. ~ 12. :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
- 2025. 1. ~ 2026.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6. 7. ~ : 개관 및 운영

#### 4. 거점형 체육공원 및 실내체육센터 건립

□ 추진개요

- 위 치 : 울주군 관내(언양읍, 온양읍)
- 기 간 : 2022. ~ 2027.
- 사업내용 : 체육공원 조성 1개소, 체육센터 1개동
  - ※ 체육공원 - 부지면적 30,000㎡, 체육센터 - 건축연면적 5,000㎡
- 소요예산 : 49,000백만원(체육공원 24,000 체육센터 25,000)

□ 추진사항

- 언양체육공원 조성
  - 2022. 1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착수
  - 2022. 12. : 대상 부지 관계부처 협의(문화재청)

□ 추진계획

○ 언양체육공원 조성

- 2023. 10. : 부지선정,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수립 완료
- 2024.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 및 환경법 협의 완료
- 2025. 12. :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완료,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6. 1. ~ 2027. 12. : 토지보상 및 수용, 공사착공 및 준공

○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 2023. 1. ~ 12. :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24. 1. ~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 및 환경법 협의
- 2025. 1. ~ 12. : 건축설계,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 인허가○ 2026. 1. ~ 2027.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5. 울주복지재단 설립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 2024.
- 설립형태 : 출연기관(비영리 재단법인)
- 사업내용 : 울주복지재단 설립
  - 조직(안) : 이사회(15인 이내), 감사, 대표이사(상임 1명), 1사무국, 3팀
  - 주요기능 :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자원발굴,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 소요예산 : 1,961백만원(군비)

□ 추진사항

- 2021. 6. 4. : 재단 설립 추진계획 수립
- 2021. 7. 30. :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전협의안 심의
- 2021. 11. 30. ~ 2022. 7. 29. :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실시(기본계획)
- 2022. 12. 26. : 전문기관(울산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 추진계획

- 2023. 1. ~ 7. :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평가)
- 2023. 8. ~ 9.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군, 울산시)
- 2023. 11. ~ 2024. 3. : 조례제정, 이사회 구성, 설립총회, 설립허가, 법인  
등기
- 2024. 4. : 출범

## 6. 행복 누림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 내 용 : 신규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 기존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추  
진계획
-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 13개 복지사업 외 타 부처(보훈청, 국토교통  
부 등)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금융 등 공적 자료  
조사-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환경, 주요 복지 욕구 등 생활실태 파악
- 연간 조사계획 수립 : 6,925세대 7,875명
- 기존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 조사 : 13개 사업
-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 확인 조사
  - 공적 자료 변동에 따른 자료 정비(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시
-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가족관계 해체 등 위기 대상자 적극 구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7. 맞춤형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 사업

###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사업별 중위소득 150%~160% 이하(일부 사업 제한 없음)
- 사업내용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등 16개 바우처 사업
- 지원금액 : 사업별 차등 지원
- 제공기관 : 아이원언어발달센터 등 35개소
- 소요예산 : 1,264백만원(국비 884, 시비 190, 군비 190)

### □ 추진계획

- 사회서비스(바우처) 운영
  - 2023. 2. : 바우처 이용자 정기 모집 및 대상자 선정·통지
  - 2023. 3. : 등록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16개 사업, 35개 제공기관)
  - 2023. 8.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른 이용자 추가모집
- 제공기관 관리
  - 제공기관 현장점검
  - 제공기관 등록 시 회계, 운영, 안전관리 분야 교육 실시
  - 제공기관 수시 방문 모니터링

## 8.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

### □ 추진배경

- 읍·면 또는 군청 방문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편의 제공 및 신청내역관리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대상사업

-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온라인을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자료 업로드 및 제출
- 마이페이지를 통한 본인의 신청내역 및 접수상태 확인
- 관리자의 신청내역 확인 및 실시간 접수·처리 진행상황 문자 자동 발송○  
소요예산 : 22백만원(군비)

□ 추진계획

- 2023. 2. ~ 3. : 홈페이지 구축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2023. 4. ~ 6. : 홈페이지 구축 및 테스트
- 2023. 7. : 홈페이지 오픈

## 9.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건립현황

- 서부센터(2026년 준공), 온산센터(2023년 준공), 남부센터(2028년 준공)  
등 총 3개 센터 건립 계획

□ 추진사항

- 2018. 12. :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건립 계획 수립
- 2020. 1. ~ 12. : 온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1. 9. : 온산센터 착공
- 2021. 10. : 서부센터 계획변경(사업위치, 규모, 방법 변경)
- 2021. 12. : 서부분소 세부시설 설치 협의(사업시행자⇄군)

□ 추진계획

- 2023. 1. ~ 2023. 12. : 남부센터 부지 선정 및 매입
- 2023. 2. ~ 2026. 3. : 서부센터 착공 및 준공(사업시행자\_신일산업개발)
- 2023. 11. : 온산센터 공사 준공



## 10. 아동친화도시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2022. 7. ~ 2028. 12.
- 사업내용 : 유니세프 심사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아동친화도시 :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친화적인 구성요소를 충족한 지자체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 추진계획

- 2023. 1. : 아동친화조례 제정
- 2023. 3. : 주민공청회 개최 및 지역사회현황조사 실시 등
- 2023. 9. : 사전 아동영향평가 실시, 유니세프 업무협약 체결
- 2023. 11. : 아동친화사업 4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 2027. 7. : 사후 아동영향평가 실시 및 인증 심사 신청
- 2028. 12. : 아동친화도시 인증

## 11. 가족센터 운영 및 건립

□ 추진개요

○ 가족센터 운영

- 대 상 : 지역 내 다양한 가족(다문화, 취약계층, 일반 등)
- 사업내용 : 건강가정지원 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소요예산 : 1,643백만원(국비 604, 시비 371, 군비 668)

○ 가족센터 건립

- 위 치 : 온산읍 덕신리 36-4번지 외 3필지
- 기 간 : 2019. 6. ~ 2023. 11.
- 규 모 : 연면적 1,558㎡(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내 5층)
- 소요예산 : 4,3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750, 군비 2,050)

□ 추진사항

- 2021. 9. : 착공
- 2022. 7. : 콘크리트 파일 공사 및 터파기 공사(공정률 22.54%)

□ 추진계획

○ 가족센터 운영

-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 663백만원(분기별 보조금 교부)
- 건강가정 지원사업 : 425백만원(분기별 보조금 교부)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555백만원(분기별 보조금 교부)

○ 가족센터 건립

- 2023. 6. : 골조공사 완료
- 2023. 11. ~ : 준공 및 개관준비

## 12. 우리 아이들의 무지갯빛 미래, 영유아 복지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어린이집 113개소, 영유아 7,663명, 교직원 1,338명
- 사업내용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 소요예산 : 64,961백만원(국비 34,010, 시비 20,659, 군비 10,292)

□ 추진계획

-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매월) : 7,663명, 37,773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매월) : 1,338명, 18,665백만원
-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매월) : 113개소, 6,032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수시) : 20개소, 77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수시) : 2개소, 375백만원
- 어린이집 연합회별 연찬회(12월) : 3개단체, 15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분기) : 2개소, 2,024백만원

### 13.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어린이집 113개소, 재원아동 4,637명, 교직원 1,338명
- 사업내용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열린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
- 소요예산 : 1,109백만원(시비 978, 군비 131)

#### 추진계획

- 공공형어린이집 재·신규지정 (연 1회)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매월) : 13개소, 1,093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연 1회) : 8개소, 16백만원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추진 (연 1회) : 46개소
- 열린어린이집 지정 및 점검(연 1회) : 56개소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 2년 이내 지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연중)
  - 수시점검 : 국민신문고, 민원발생 어린이집(연중)
  - 평가제 기본사항 확인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연중)
  - 안전점검 : 2년 이내 안전점검 미실시 어린이집(상·하반기)
  - 시·군 교차점검 : 부정의심 모니터링 시설(상·하반기)

### 14. 당당한 청소년! 성장 친화정책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예술제 등
- 청소년 보호망 구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단속 활동,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청소년증 발급 등

○ 소요예산 : 11,119백만원(국비 564, 시비 325, 군비 10,230)

□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지원(1,142백만원),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1개소, 342백만원)
- 청소년의 달 행사(60백만원) 및 청소년예술제(55백만원) 개최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3백만원), 청소년증 발급(4백만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698명, 103백만원)
-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7명, 23백만원), 학교밖청소년복지포인트(15백만원),
- 울주군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2,110백만원)
-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캠페인 등 단속 활동 추진(연중, 6백만원)
-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비행예방청소년선도활동(연중, 15백만원)
- 청소년 문화탐방, 안보 교육 등 지원(6개 사업, 18백만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263백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84백만원)
-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2백만원), 운영위원회 지원(4백만원)
- 서부청소년수련관 운영(2,951백만원), 중부청소년수련관 운영(990백만원),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2,929백만원)

## 15. 아동 행복돌봄 프로젝트

###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울산양육원, 울산일시보호시설, 울산자립생활관,  
관,
- 그루터기), 입양아동, 결식 우려 및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등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아동 보호비 및 양육보조금, 어린이날 행사, 결식아동 급식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 소요예산 : 23,130백만원(국비 12,635, 시비 7,906, 군비 2,589)

### □ 추진계획

- 아동복지시설 운영 : 울산양육원 등 4개소, 5,831백만원
- 아동수당 지원 : 10,953명, 13,118백만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 : 1개소, 2,100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995명, 1,217백만원
- 입양아동 가족 지원 : 42명, 118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302명, 362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46명, 197백만원
- 어린이날 행사 지원(3개 권역) : 12,000명, 120백만원
- 마을놀이터 정비 : 7개소, 10백만원
- 아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지원 : 4백만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 2명, 3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 50백만원

## 16. 보호아동의 최상이익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추진개요

#### ○ 사업대상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등의 아동
-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의료비, 프로그램비)

#### ○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관리

#### ○ 소요예산 : 819백만원(국비 132, 시비 239, 군비 448)

### 추진사항

#### ○ 2020. 10. 아동보호팀 신설 및 아동보호전담요원(3명) 배치

#### ○ 2021. 12. 아동보호전담요원(1명) 인력 확충

### 추진계획

####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급(시간선택임기제 3, 공무원직 1) : 152백만원

#### ○ 아동양육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가정방문(분기 1회/보호아동 1명) : 8백만원

#### ○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 : 6백만원

#### ○ 보호대상아동 의료비 지원 : 4백만원

#### ○ 보호대상아동 및 원가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 : 11백만원

#### ○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지원 : 638백만원

## 17. 드림스타트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0세~만12세 이하 취약계층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지원인원 : 430명 내외
- 센터운영 : 2개소(서부, 남부), 사례관리사 7명(1인당 40~70명 관리)
- 사업내용 : 권역별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한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 주요사업
  - 아동 및 가구별 욕구에 따른 가정방문 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 맞춤형 서비스 운영(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 지원기구 운영(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조직화
- 소요예산 : 603백만원(국비 386, 시비 48, 군비 169)

□ 추진계획

-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 430명, 연중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 7명, 349백만원
- 권역별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 2개소, 31백만원
- 맞춤형 서비스(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 4분야, 201백만원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조직화 : 22백만원

## 18. 지역아동센터

□ 추진개요

-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아동 418명
- 사업내용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시 설 수 : 18개소
- 소요예산 : 3,330백만원(국비 986, 기금 234 시비 1,118, 군비 992)

□ 추진사항

- 2019년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운영 지원
- 2020년 1개소 신규 신고 및 운영(꿈자람지역아동센터)
- 2022년 꿈자람지역아동센터 ‘22년 진입평가 통과

□ 추진계획

- 센터 운영비 지원 : 18개소, 1,557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 19명, 378백만원
- 특성별(특수목적, 토요일운영) 추가지원 : 10개소, 52백만원
- 종사자 수당(교통비 외 6종) : 37명, 192백만원
- 아동돌봄도우미 인건비 지원 : 18개소, 166백만원
- 아동 급식비 및 간식비(정원별 차등) : 18개소, 854백만원
- 연합캠프 및 종사자 보수교육 : 18개소 1회, 35백만원
- 공공요금 추가지원 : 18개소, 22백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및 장비비, 환경개선 등 : 18개소, 74백만원

## 19. 다함께돌봄센터

□ 추진개요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 이용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6세~만12세)
- 시 설 수 : 8개소

- 이 용 료 : 월 10만원 이내(급·간식비 별도 수납 가능)
- 사업내용 : 돌봄 관련된 프로그램, 숙제지도, 특기 적성 학습활동(음악,
- 미술, 체육, 컴퓨터 등), 독서지도, 신체활동 등
- 소요예산 : 710백만원(국비 356, 시비 178, 군비 176)

추진계획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8개소, 88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 16명, 552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 1개소, 70백만원

## 20.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추진배경

- 일자리 발굴과 연계, 취업프로그램 운영, 창업과 사회적경제 지원 등
- 일자리 관련 종합지원 컨트롤센터 필요
- 창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추진개요

- 위 치 : 웅촌면 곡천리 67-11번지 일원
- 기 간 : 2023. 4. ~ 2023. 12.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1동(부지 2,936㎡, 연면적 3,000㎡)

사업내용

- 종합센터 운영비 및 창업사업지원
  - 시설 운영 자산 취득비
  - 창업행사, 창업 교육운영, 창업사업지원비 등
  -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 센터 공간 활용

- 시설 운영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등
- 청년 창업지원
  - 청년 창업교육·컨설팅
  - 청년 창업공간 지원
  - 청년 취업강좌, 모의면접 지원
  -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발굴 육성
  - 수행방법 : 위탁
-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창업자 등
  - 사무공간, 창업교육, 상담, 경영지원(세무·회계·법률 등)
  - 수행방법 : 위탁

## 21.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

### □ 추진개요

- 위 치 : 울주군청 1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
- 기 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 1:1 맞춤형 컨설팅 및 동행 면접 지원
  - 일자리 발굴 및 현장실사, 채용대행서비스, 채용박람회(연1회)
  - 구직자 증명사진 촬영 지원, 카카오톡 채널 ‘울주군취업정보게시판’ 운영
- 소요예산 : 71백만원(군비)

## 22. 울주청년 플랫폼, 청년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위 치 : 범서읍 점촌5길 39-7, 2층(울주군 가족센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
- 운영방법 : 민간 위탁
- 사업내용
  - 청년 진로·취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및 청년 네트워킹
  - 청년주간 행사 운영
  - 청년 관련 조사연구사업(신규)
- 소요예산 : 510백만원(군비)

### 추진계획

- 2023. 1. ~ 12. :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및 홍보사업
- 2023. 2. ~ 11. : 청년 진로심리상담소(청년공감) 진행
- 2023. 3. ~ 11. : 취업역량 강화아카데미, 울주청년 금융학당, 청년창업 멘토 특강 진행
- 2023. 3. ~ 11. :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
- 2023. 3. ~ 11. : 청년 실태 및 수요조사 진행(신규)
- 2023. 8. ~ 11. : 청년주간 행사 운영
- 2023. 12. : 청년센터 운영 활동집 발간

## 23. 청년이 든든한 청년일자리 지원

###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다양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 기업 7,200천원, 청년 3,000천원 지원, 9개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청년인력지원 사업 : 인건비 1인당 연24,000천원 중80%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청년 지원사업 : 인건비 1인당 연 최대22,500천원 지원- 청년 꿈 날개 지원 사업 : 면접 정장 무료 대여(1인 연 3회/3박 4일)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2회, 80명(겨울방학 40, 여름방학 40)

○ 소요예산 : 677백만원(국비 16, 시비 61, 군비 600)

□ 추진계획

○ 2023. 1. :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공고 및 시행

○ 2023. 1. ~ 12. : 청년 꿈 날개 지원사업 시행

○ 2023. 1. / 7.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1월, 7월 채용 예정)

○ 2023. 2.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

## 제5장 국내 및 해외 인구정책 사례

### 제1절 국내 인구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청년 일자리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2년)

##### □ 아동·청소년 지역 활동 전문가 양성(서울 성북구)

##### ○ 아동 친화 도시, 성북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 201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을 확장하고 동주민센터 돌봄플래너를 배치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안전 영역에서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
- 2017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놀이 거점 공간을 만들고 놀이큐레이터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 소통과 관계 맺기의 장으로서 아동·청소년 공간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청소년 공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또래나 성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함께 배우고 함께 놀고 서로 돕는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있음
-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간은 일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관계 맺기가 담보되어야 하고, 돌봄, 배움, 놀이, 쉼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 안에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공간의 전문적 운영 필요

- 미성년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움과 관계 맺기의 역량을 가지려면 교육적 관점을 활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지역활동가가 필요
- 아이들이 공간에 비치된 놀이기구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기획하고 아이들의 적극적·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성북구 아동·청소년 활동의 지

### 속적 토대 마련

- 아동·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년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
- 지역 청년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그 지역에서 자신의 전문영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경험의 구체성과 지속성 및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역 기반 공동체 활동이야말로 청년들에게 이러한 요인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
- 향후 청년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겨난 관계를 기반으로 확장된 지역 활동 사업을 구상하고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 사업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 놀이문화 활성화 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일상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운영
  - 지역 청소년 축제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취약계층 지역 청소년 대상 자치·배움 공동체 사업
  - 청소년 진로동아리 운영(디자인/사회적경제/IoT 진로동아리)
  - 여름농촌봉사활동, 협동학습 토요공부모임, 학부모모임 등
- 청년 활동가 모임
  - 자원봉사자 및 보조강사 청년 활동가 관계 형성을 위한 모임
  - 청년 활동가 운영진 회의 및 청년 활동가 세미나 모임

### ○ 사업 지원 내용

- 고용 청년 인건비(연 2,400만 원) 및 성북구 생활임금(월 236,720원) 지원
- 지자체 자율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영어 회화 강의 등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연 300만 원), 직무수행 관련 컨설팅(연 2회)

### □ 인문 청년 기술인재 전황 지원사업(대구광역시)

-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청년 유입 지원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필요
  - 2021년 1분기 대구시 인구 순유출 인원 7천 518명, 이는 전년 1분기(3천 763명) 대비 99.8% 급증

-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순유출 인구는 7만 5,946명, 그중 25~29세 인구의 유출이 23.6%(18,117명)로 가장 많으며 청년 일자리 부족이 인구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
-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경향을 감안하여 자격증·기술이 없는 인문계열 전공 졸업자들에게 일 경험 제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 지역 정착지원
  - 신입사원 위주 채용을 밝힌 중소기업은 2020년 기준 52.8%에서 작년 53.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48.4%를 기록
  -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19.2%), 직무이해도(17.5%), 전공과 직무 간 관련성(16.3%)으로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 문이 더 좁아지는 것을 의미
- 인문계열 미취업자의 취업 알선 및 교육 지원 등이 절실함
  - 인문계 졸업생의 일자리가 전공과 불일치 하는 비율이 44.9%로 다른 계열에 비해 가장 높으며, 인문계 졸업생이 취업 경로에서 평균 745만 6,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공학계열 507만 5,000원)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타 계열에 비해 높아 지원이 필요
  - 대학 계열별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 계열(82.1%), 공학계열(67.7%), 예·체능 계열(62.2%), 교육계열(62.1%), 사회계열(60.9%), 인문계열(53.5%) 순서로 인문계열 취업률은 최하위권 차지
  - 지난 3년간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분석 결과 인문학 경시 현상으로 인하여 인문학 17개 학과 폐지, 공학 23개 학과 신설
-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필요
  - 인문학 전공자의 학습 능력, 과제 해결 능력 등의 장점과 전문 기술인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추진 가능
- 사업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문·사회·교육 계열 졸업자를 2022.01.01. 이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1,875,000원 지원(기업부담금 10% 필수)
  - 사업장당 최대 5명 한도 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의 50% 지원

[그림 62] 인문청년 기술인재 전환지원사업 지원 체계도



□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인천 미추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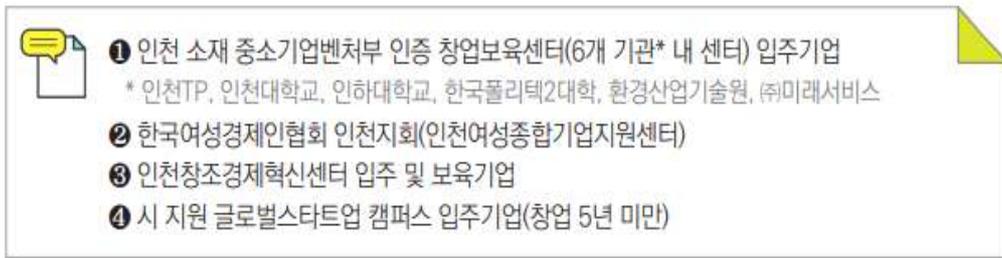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슬럼화와 청년 실업문제 동시 해결
  - 변종유흥업소가 제운사거리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난립
  - 업소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일반주택, 초·중·고·대학교 등이 주변에 소재하여 교육 환경상 좋지 않은 지역으로 경기 불황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지역도 슬럼화될 우려가 있어 도시 미관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의 필요성 대두
  - 인근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 청년인구가 미추홀구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역임
-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창업 특화 거리로 변모
  -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창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사업 주요 내용

- 변종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제운사거리 주변을 「청년창업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변종유흥업소를 지역 내에서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이 창업을 주도하여 지역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역의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 특화 거리」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년 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천테크노파크)

- 최근 인천시는 지역 내 좋은 환경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우수 Start-up기업들을 유치한 바 있으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기자본 부족 및 매출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초기 창업기업의 조속한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연구&사무인력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의 필요한 실정임
  - 다만, 인천의 지역적 한계로 채용 인력의 타 지역(서울, 경기) 유출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정착유도를 위한 동일지역 거주 청년의 채용 지원이 필요함
- 지역 기반 성장 우수 창업기업 CEO와 지역 청년 간의 매칭을 통해 상생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 초기 창업기업에 청년 채용 기회 제공 및 인력운영 비용지원으로 창업보육 활성화 촉진
  - 미취업 청년의 긍정적인 취·창업문화 형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기대
- 사업 주요 내용
  - (지역 창업보육 활성화) 지역 창업 특화 조성공간에 입주한 우수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의 발판 마련 및 성공적인 창업 신화 창출
  - (청년 일자리 제공) 미취업 청년의 창업기업 채용을 통한 창업노하우와 스킬 습득 기회 제공으로 긍정적인 취업문화 형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그림 63] 인천테크노파크 정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주요 내용



□ 광주지역 뉴딜산업청년채용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 광주형 뉴딜의 활성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인력난 해결 시급

- 광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신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도입 실태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기술 도입을 못 하는 이유로 전문인력 및 인재 부족(34.3%), 신기술 이해 부족(23.9%), 투자자금 부족(19.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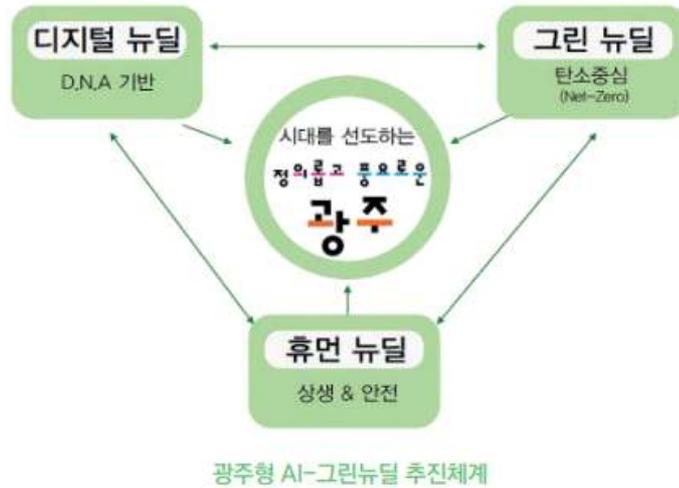
○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

- 기업의 부족률은 3.1%로 전체 평균(2.2%)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구 및 개발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1년 우리나라 산업 기술 인력 수급 현황에 따르면 중견 규모, 대규모 기업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은 각각 0.8%, 0.4%로 중소기업(3.1%) 기업보다 낮음

[그림 64] 광주지역 뉴딜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그림 65]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체계



□ 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사업(광구 광산구)

-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산단의 50%, 입주업체의 60%, 종업원 수의 66%, 매출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도가 높음
  - 에어가전 관련 기업(39%) 및 대기업 협력업체(83%) 광산구 위치
- 2019년 광산구는 지역 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역 산단의 주요 산업인 가전, 금형 등의 산업을 공기 산업(신산업)으로 전환 육성하는 사업 추진
  - 중소기업복합지원센터 건립, 공기 산업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등(180억 원 투자)
- 지역 정책인 광주광역시 친환경 공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발전 성과 부합 및 시너지효과 창출로 공기 산업 메카로서의 입지 강화
  - 광산구 평동3차 산업단지에 공기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으로 관련전문지원기관, 연구기관, 앵커기업 유치 예정
- 사업 주요 내용
  - 친환경에너지, 공기 산업 등 新산업분야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연관 분야 취업제고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로 지역경제 혁신성장 지원

□ 2022년 세종시 지역혁신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 지역 내 유망한 전략산업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정착유도
- 관내 성장이 유망한 혁신 전략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
  - 세종시 혁신 전략산업: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그린융합 부품·소재
- 지역의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
- 사업 주요 내용
  - (일자리 제공) 지역 정착 및 청년 유입을 위한 유망 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제공
  - (인건비·교통비 지급) 2년간 청년 인건비(월 160만 원), 교통비(월 10만 원) 지원
  - (역량 강화교육 지원) 청년 역량 강화 직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네트워킹 지원) 분기별 참여 청년 네트워킹(간담회) 지원
  - (청년 고용률 증대) 기업에 인력 채용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고용률 증대

□ 청년 뉴딜일자리(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일자리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
  - (청년인구) 지역의 고용시장의 취약성에 따른 관내 청년들의 지역 유출에 대응하고자 시흥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청년 고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고용구조)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구조를 보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한 단순 생산직 위주의 일자리를 개선하고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 참여 청년에 대

한 정규직 채용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혁신 인증 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채용 직무 위주의 기업선발로 청년의 성장 가능한 경력 형성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

- (기업 현황)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관내 전체 기업의 83%로 소규모 제조업체가 대다수인 관내 기업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소기업 이상(제조업 기준 10인 이상)의 기업참여 조건을 수립하여 청년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

[그림 66]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내용 중 개인별 1:1 맞춤 프로그램 프로세스



## 2.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행정안전부, 2023년)

-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 진행
-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5개 사업을 선정

### □ 경기도 동두천시

- ‘행복드림센터’에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형·체력 측정 공간, 놀이공간 등을 제공

지 자 체	주 요 내 용
경기 동두천시 1,000백만원 (특 400, 지 600)	<p>&lt; 키즈헬스 케어센터 조성관심지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체육활동 시설 내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키즈헬스케어 센터(상담 및 운동 처방) 조성 ※ 행복드림센터 1층내 조성</li> <li>○ 놀이를 통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기초체력 측정 후 이를 토대로 상담 및 운동처방 제공 및 아동복지 정책자료로 활용</li> </ul> <p><b>(바디펌프존)</b>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6대 체력측정 등  <b>(플레이 펌프존)</b> 체력강화형 체험 놀이  <b>(상담 및 운동처방)</b> 성장 발달 정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운동처방 제공</p>

□ 전북 군산시

-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를 건립하여, 텃밭 체험, 요리 교실, 공예 체험 등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

지 자 체	주 요 내 용
전북 군산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	<p>&lt; 전북 군산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동 돌봄 체계 구축</li> </ul> <p><b>(지역주민 연계를 통해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경험(텃밭체험, 요리교실, 만들기 교실)</li> <li>※ 텃밭체험 대상지 면적 : 약448㎡(추후 점진 확대 운영)</li> <li>- 마을 어르신 및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li> <li>- 엄마들의 쉼터 헬스케어센터(문화, 힐링공간 조성)</li> </ul>

□ 전남 진도군

- 영유아 놀이교육실, 프로그램실, 모유 수유실 등을 설치한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돌봄·육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

역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로 운영

지 자 체	주 요 내 용
<p>전남 진도군 800백만원 (특 400, 지 400)</p>	<p>&lt; 진도 임신·출산·육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인구감소지역 &gt;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육아커뮤니티센터 등 복합공간 조성</p> <p><b>(1층)</b>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재활치료사와 '임산부 운동교실' 연계 <b>(2층)</b> 놀이교육실, 맘침터, 수유·수면실 <b>(3층)</b> 모자보건사무실, 영양플러스실, 어린이 급식센터 <b>(4층)</b> 프로그램실, 소통·상담실</p>

□ 경북 구미시

- ‘구미역사’ 내에 임신·출산·보육 종합 안내 공간, 청년 문화 등 「결혼스토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저출산 대응 운영시설로 운영

지 자 체	주 요 내 용
<p>경북 구미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p>	<p>&lt; 웨딩테마 북카페 「결혼스토리 문화공간」 조성 &gt; ○ 구미역 2층 공실을 임대하여 결혼을 소재로한 북카페 청년문화공간 조성, 임신·출산·보육 등 각종 지원 시책 종합 안내 공간 조성</p> <p><b>(임신·출산·보육 등 기관별 각종 지원시책 종합 안내)</b> <b>(청춘 북카페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b> 청춘 북카페, 청춘감성 테마존, 청춘남녀 만남 이벤트 및 열린공간 <b>(스몰웨딩 관련 공공시설 대여 및 서비스 지원)</b> <b>(결혼 비용 부담 경감과 함께 신혼주택마련 자금형성 지원)</b> <b>(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취·창업 발굴 지원)</b></p>

□ 경남 사천시

- 「동(洞)지역 장난감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장난감·도서 대여 및 어린이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 등을 갖춘 육아 돌봄 시설로 구축

지 자 체	주 요 내 용
<p>경남 사천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p>	<p>&lt; 사천시 동(洞) 지역 장난감은행 조성관심지역 &gt;  ○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출산용품 및 장난감·도서 대여, 놀이공간, 육아 정보 나눔 공간조성</p> <p>-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  - 부모교육, 영유아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부모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아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p> <p>○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천시 가족센터,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등)</p>

## 제2절 국외 인구정책 관련 우수사례

### 1. 헝가리 인구정책

- 헝가리의 인구감소 현상은 해당 국가가 역사적으로 마주한 국제적 및 사회적 이슈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됨
  
-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친 후, 약 45년간의 공산주의적 지배와 냉전 기간의 여파는 헝가리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음
  - 이러한 기간의 동요는 인구 동태, 특히 출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음
  
- 사회주의 체제 종료 후, 헝가리의 총인구는 약 천만 명을 유지했으나, 경제 활동 가능 인구는 550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
  - 이와 같은 인구의 변화는 출산율의 저하와 관련성이 있으며, 199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불과 1.8명으로 하락했고, 1990년대 초, 헝가리는 국가 차원의 가족 지원 정책을 마련함

#### 가. 일관성

- 헝가리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에 걸쳐 꾸준하고 일관적인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
  - 이러한 정책은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의 하나로 여겨짐
  
- 20세기 헝가리의 인구정책은 특별한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
  - 프랑스를 제외하면, 헝가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산 촉진 정책을 추구한 국가로 평가됨

- 헝가리에서는 가족의 안정성과 구성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출산을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20세기 동안 헝가리의 인구정책 구성에서 독특한 사례를 보유하게 함
- 1927년, 헝가리는 유급 임신 출산휴가를 보편화해,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임신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함
- 이 조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 내 역할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초기의 시도로 볼 수 있음
- 1967년에는 육아수당(GYES)이 도입됨
- 이는 아이의 육아에 투자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이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아이를 둔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1985년에는 육아휴직급여(GYED)가 도입
- 이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부모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1993년,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금(GYET)이 도입
- 이는 대가족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016년에는 가족주택 보조금(CSOK) 도입
- 이 정책은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 2019년에는 가족 보호 행동계획(FPAP)이 시행됐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계획을 포함

- 최근 2023년에는 30세 미만의 엄마에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도입
  - 젊은 양육자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의도를 담고 있고,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전통적인 가정 구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즉 단독 양육 가정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헝가리 정부는 변화하는 현대의 다양한 가족 구성과 동시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정책 도입은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필요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한 예시로 평가될 수 있음

#### 나.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

- 헝가리의 가족정책은 2010년 이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이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근본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
- 아이들은 이제 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며, 그들은 국가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를 향한 국가의 투자 대상으로 간주
- 2023년 기준으로 헝가리의 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 지출 비율은 약 5%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과감하게 가족을 지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가 사회와 미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강조함
- 이와 같은 정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의 확립과 연계된 방식으로 진행됨

- 가족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 체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투자로 간주되며, 가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체가 성장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됨
- 결과적으로, 헝가리는 가족을 국가의 근본적 가치와 핵심 자원으로 간주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다. 의무교육의 확대

### ○ 2015년부터, 헝가리는 의무교육 체계를 확대

- 3살부터의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 ‘Ovoda(오보다)’와 ‘bolcsode(벌체데)’
- ‘Ovoda’는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으로, 학습 활동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학습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함
- ‘bolcsode(벌체데)’는 6개월에서 3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는 보육 기관으로, 영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

### ○ 최근 수년 동안 헝가리는 아동 및 청소년 교육과 건강을 위한 여러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변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제공

- 국립학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 거주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감소

-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금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는 데 보태거나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가족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종합적으로, 헝가리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건강, 그리고 거주 환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라. 육아휴직 급여(GYED)

- 1985년에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GYED)는 헝가리의 육아 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이 정책은 아이가 2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나누어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약 52%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이러한 급여 지원은 사회보험에 가입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에는 GYED Extra가 도입돼 육아 휴직 기간 중에도 일부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 더불어, 2020년부터는 은퇴하지 않은 조부모도 이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됨
  - 헝가리의 사회 구조와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라는 모계 중심의 사회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력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짐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는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여성 노동력이 크게 필요로 됐고, 이후의 사회주의 시기에는 남녀 모두의 노동 참여가 강조됨
  -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재 헝가리에서는 여성의 직업 참여와 육아의 병행을 크게 중요시하며,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음
  
- 이런 배경 아래 헝가리는 보육제도를 확대하고 무상의무교육 연령을 3세로 설정해 유치원 교육을 무료로 제공
  
- 더불어 할머니가 육아를 도와 줄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헝가리의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경력 단절의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육아와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마. 난임 및 불임 시술 지원

- 현재 헝가리에서는 7쌍의 부부 중 1쌍의 부부가 수년간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정부가 직접 이 상황 개선을 주도하겠다고 표명
  
- 2020년부터 헝가리의 불임 및 난임 제도는 매년 개편되고 있는데, 우선 난임 시설 여섯 곳을 국유화했고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을 100% 국가가 지원하였음
  - 시술은 무료이며, 시술 사이에 3개월간 휴식기를 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늘려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규정을 폐지함

#### 바. 시사점

- 출산과 결혼은 순수하게 경제적 또는 인프라적 문제로 단순화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
  - 이 문제에는 깊은 문화적 차원의 영향이 있음. 헝가리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전통사회 지향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가족의 중요성과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재하고 있음
  
- 전통적 가치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출산율의 상승을 견인하였고 할 수 있음
  
- 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그 원인이 단순히 정부 지원의 부재나 여성의 사회적 불편함에만 국한되지 않음

- 사회 전반에 걸친 물질주의의 만연화, 개인주의 등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 이와 같은 깊은 문화적 변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음
-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고용불안은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음
  - 이는 한국의 경쟁 중심의 문화와도 연관되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행복감을 찾을 수 없게 됨
  -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기때, 결혼 결혼과 출산은 부담으로만 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2. 프랑스 정주성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 프랑스는 1940년대부터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선구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1950년 국토 정비를 전담하는 부서가 부처 내에 마련되고, 프랑스 국토의 불평등한 발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
- 1960년대에 설립된 국토 및 지역계획단(DATAR)은 프랑스 국토의 지역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기틀이 됨
- DATAR가 실시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임
- 프랑스는 DATAR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됨

## 가. 주요 법제와 행정계획

- 2000년에 새로이 제정된 「도시연대재생법」(SRU법)은 지역 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게 하는 계기가 됨
  
- 이에 더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DS(차별화, 분권화, 분산화+단순화)법 (Loi 3DS relative à la différenciation, la décentralisation, la déconcentration et la simplification)을 제정하게 됨
  - 2022년 새롭게 발효된 3DS법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화, 분권화, 분산화 및 지역 행동의 단순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법으로 총 270개의 조항으로 구성
  - 동 법안의 구성을 위해 2년간 200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여 각 레지온과 협회를 통해 쟁점을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동 법은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 첫째, 국가 도로에 대한 분권화
  - 둘째, Aix-Marseille-Provence 대도시권 초광역 통합체제 개혁
  - 셋째, SRU법(도시재생과 연대법)의 현대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보건 정책 권한 강화
  - 다섯째,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연대소득(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에 대한 관리 개혁
  
- 특히, 동 법의 내용 중 ‘분권화’ 와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 첫째, 도심지에서는 적어도 해당 지역 내 20~25%의 사회적 주거(공공임대주택 등)의 보유 비율을 유지하는 것
  - 둘째, 파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의 임대료 인상 통제 조치가 3년 연장되는 점

- 셋째, 연대소득(RSA)에 대한 자금조달의 ‘재집권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향후 5년간 적극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것
- 프랑스는 국토통합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2만 명 이하 소도시는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 (Petites villes de demain) 프로그램을 통해, 중형도시(주로 꼬뮌)의 개발을 위해서는 Action Coeur de Ville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었음
- 특히 프랑스의 정책 방향은 대도시보다는 중형도시, 소형도시의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사는 지역주민들의 삶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성 제고 방안 연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음
- 두 프로그램 모두 상향식(bottom-up)으로 수행되며, 특징으로는 첫째, 중앙정부는 기술 인력의 지원 등을 담당하는 조력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와 지역의 경제주체가 가진다는 점임
- 둘째, 주요 정책행위자로 프랑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책행위자는 2020년 1월에 신설된 국토통합청(ANCT)이며, 국토 균형발전의 “단일한 창구”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 그런데도 지역단위의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구조이며, 국토 통합청으로 지역 주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력자 혹은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셋째, 주요 이행 수단으로 프랑스에서는 국토 재생 사업(ORT)을 통해 지방 도시의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허가에 대한 면제를 제공 등 법적, 재정적 권한을 보장하

는 방식을 채택

○ 또한 드노르망디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세금 감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도시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투자의 기회로 전환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개인 자본을 투입하고,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 인구 규모와 대상 집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표로 분석 결과를 재분류 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해 도시별 차별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지역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예비 지역민에게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사업지역의 인구 규모, 도시유형,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강점산업과 같은 사업지역의 특성, 사업 대상 집단(청소년, 신규이민자, 노인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사업 내용을 선택한다는 측면이 가장 특기할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의 정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물적, 재정적으로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인구 규모	소도시 (인구 2만 명 이하)	내일을 위한 작은마을프로그램 (Petites villes de demain / 프랑스)
	중형도시	BIMBY 프로젝트 (Beauty in my Backyard / 프랑스)
대상 집단	청소년	마이크로폴리 프로젝트 (Microfolie / 프랑스)
	노인	내일을 위한 작은 마을프로그램 시니어 레지던스 프로그램 (Petites villes de demain / 프랑스)

출처: 이유현 외(2023)에서 재인용

## 제6장 결 론

### 제1절 울주군 인구 및 사회·환경 특징

#### 1. 전국 인구이동 특징 요약

- 청년층(15~34세)의 경우, 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함
  -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의 순유입이 발생, 광역시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과 시 지역(50만 이상), 시 지역(50만 미만), 군지역에서의 순유입이 발생, 시지역(50만 이상)은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순유출과 시 지역(50만 미만)과 군지역에서의 순유입이 발생, 시 지역(50만 미만)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시 지역(50만 이상)에서의 순유출과 군지역에서의 순유입이 발생, 군지역은 전 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함
  
- 고령층(65세 이상)은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수도권에서 시 지역 및 군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나타남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시 지역(50만 미만)과 군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함
  
- 시·도별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울주군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연령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서울특별시는 15~34세의 청년층에서의 순유입이 나타남
  - 15~34세의 청년층은 서울특별시와 더불어 울주군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순유입이 나타남
  - 15~24세는 서울특별시,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와 함께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순유입이 나타남
  - 광역시는 순유출이 발생하며 도 지역에서는 15~34세의 순유출과 45세 이상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음

-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은 직업, 교육, 주거 환경요인에 의한 순유입이 자연환경 요인으로 인한 순유출이 발생함
  - 직업 사유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자 중에서 15~34세 청년층의 순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사유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은 15~24세 연령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자연환경 사유로 인한 수도권에서의 순 이동은 전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45~64세에 순유출량이 높게 나타남
  
- 이동사유별 인구이동 특성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교육 사유로 인한 순유입이 발생하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로 나타남
  - 직업 사유로 인한 순유입이 발생하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나타남
  - 주택 사유로 인한 순유입이 발생하는 시·도는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타남
  - 자연환경 사유로 인한 순유입이 발생하는 시·도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도에서 나타남
  
- 지역 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직업 사유로 인한 순 이동은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주택 사유로 인한 순 이동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교육 사유로 인한 순 이동은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주거 환경으로 인한 순 이동은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반면에 자연환경으로 인한 순 이동은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순유출이 발생함

○ 지역유형별 지역 특성별 상관관계 분석을 살펴보면 유형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

- 인구 증가 지역(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과 사회적 증가 우세지역(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증가)에서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나타남
- 반면에, 사회적 감소 우세지역(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감소)과 인구감소지역(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에서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는 인구 증가 지역과 사회적 감소 우세지역에서는 직업 사유로 인한 순 이동은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
- 반면에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사회적 증가 우세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직업 사유로 인한 순 이동은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순유출이 발생함

○ 인구이동 특성 분석을 통해서 국토 공간에서 인구구조 및 인구분포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음
-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공간 위계별로 순 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수도권에 인구 증가, 광역시의 인구감소, 도 지역에서의 청년층 감소와 4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인구 증가가 나타남

○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심화되기 때문에 광역시를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청년층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시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어메니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지역별로 인구이동의 사유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의 이동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발굴이 필요함
  - 지역에 인구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문을 더욱 강화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기할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함

## 2. 울주군 인구 및 사회·안전 환경 특징

### □ 인구 현황 및 추이

- 울주군의 경우 2023년 11월 기준 총 100,537세대, 총인구 219,234명으로 울산광역시 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임

### ○ 울주군의 인구 추이(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 14세 이하는 1월 25,677명에서 11월 24,343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15~64세 이하는 157,309명에서 154,383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65세 이상은 37,888명에서 39,93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인구증감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총인구는 각각 1,124명, 1,325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가 2020년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1인 세대가 24,723세대, 2인 세대가 17,604세대, 그리고 3인 세대가 12,309세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울주군 및 울주군 내 지역별 평균연령

- 주민등록 기준 울산광역시 지역별 평균연령을 보면 전체 평균연령에서 울주군이 45.3세로 울산광역시 내 두 번째로 높은 연령을 보이고 있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별 세부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두서면이 61.1세로 가장 높은 평균연령을 보이고 있으며, 범서읍이 41.2세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울주군 지역 중 범서읍이 아동, 청소년, 청년 수가 각각 12,347명, 14,624명, 12,708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삼동면이 세부 지역 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임

- 울주군 고령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범서읍이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7,928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 사회·안전 환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거주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54.8%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40.3%로 지역 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거주 형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서 6.5점으로 지역 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울주군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 미혼 남성 및 여성의 결혼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음
- 울주군 거주 남성 및 여성의 경우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가 울산광역시 내 다른 구·군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울주군 거주 남성 및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는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 울주군 필요 복지정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복지 확대’ 46.5%, ‘보건소 등 공공 보건 서비스 증진’ 39.5%,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이 39.4% 등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정책' 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복지 확대' 가 3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울주군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의 경우 울산광역시 내 지역에 비해 울주군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주군의 취약계층 만족도는 울산광역시 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울주군의 여성 복지 향상 중점분야는 '여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센터를 늘린다' 와 '여성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개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린다' 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육 개선 시 중요사항
- 울주군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가 24.1%로 개선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울주군의 장애인 복지 우선 사항 중 '장애인의 이해, 포용 분위기 조성', '의료비 지원' 으로 나타남
  
- 울주군 청년 필요 복지정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주군의 노인 관련 필요 복지정책으로 '의료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임

- 울주군의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울주군의 환경 개선 관련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기환경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 보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위험 및 자원고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울주군의 화재 안전 인식의 전체 평균은 울산광역시 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임
- 울주군 거주 ‘취업, 창업 의사 없음’이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3. 인구감소 대응 정책 요약 및 시사점

#### □ 인구감소 대응 정책 요약

- 서울은 2017년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1인,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다각적인 접근
  - 고령 사회정책으로 신중년 50세 이상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며, 서울 거주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래 투자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정책대상자 확대
- 부산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시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하여 인구

감소와 구조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종합계획 마련하였으며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2021~2025)’ 수립, 고령 사회정책으로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수립 발표

-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정책으로 고교재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청년에 이르기까지 부산형 취업 연계 지원
- 대구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유입 활성화 부분 대구 행복기숙사건립, 대학생 전이 지원, 휴스타 사업,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등 지역대학 (12개)과 연계한 청년정책 중점 추진
- 인천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제1차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2019~2023)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인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 광주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노후가 걱정 없는 100세 도시 행복광주를 목표로 5대 추진 전략, 25개 중점과제 추진
  - 광주아이키움플랫폼 ‘아이친구센터’를 설치 운영, 광주 출산축하금 및 마더박스 지원, 직장맘·직장대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운영, 임원아동 돌봄서비스 실시 등 저출산 분야 생애 맞춤 정책추진
- 대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워라벨·성평등, 아동 돌봄, 생애주기 지원, 노후 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역량 강화, 청년 지원, 여성·신중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상생 기반 구축 추진
  -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 파견, 대전형 출산 장려 지원금 첫째 아이 이상으로

지급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시행

- 울산은 출산 보육 친화 도시 조성, 베이비부머 세대 체계적 관리, 도시 균형발전 및 광역 벨트 연대 강화, 도시 생활안전 확보, 울산 청년 희망 도시 조성, 최적화된 워 라벨 등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 시행
  - 청년 유출방지를 위해 교육 여건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
  
- 경기도는 공정사회 실현, 삶의 질 개선, 인구변화 대응을 목표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과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노동자 복지지원 지속
  
- 강원은 수도권 근접성으로 청년층 유출 방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과 수도권 장년층 유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및 귀농·산·어촌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
  
- 충북은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제고, 인구변화 적극대비 등 4개 추진 전략하에 10개 중점과제 추진
  
- 충남은 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 보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정책 추진, 고루고루 잘 사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22개 추진전략을 수립
  
- 전북은 청년의 삶의 기반 강화,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창의적 인재 육성,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일자리 및 주거지원, 양육 및 돌봄 기반 조성,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사회 기반 조성, 일·가정 양립 및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세부과제 시행

- 전남은 사회적 인구감소세 개선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유소년인구와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일자리 정책발굴(안전공대 설립, 사이언스 파크 조성, 전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장년층(40세~65세)을 위한 귀농산어촌 유입정책 적극 추진
- 경북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환경 개선, 돌봄 체계 개선,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계획: 경북 희망둥이 1,2,3 프로젝트’, 이웃사촌 시범마을(청춘촌),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등 추진
- 경남은 ‘미래인구맵’ 설계를 통해 경남 미래를 탐색하여 모든 정책에 인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0~2024년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6대 전략별 160개 추진 과제를 제시
- 제주는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지원,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을 통해 기 추진사업을 연계하고 정보를 통합하여 인구정책 전략 프로젝트를 관리

□ 청년의 결혼, 출산, 노동 등의 변화와 시사점

-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를 통해 청년의 결혼, 출산 및 노동의 가치관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결혼)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여, ’22년에는 청년 3명 중 1명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 (자녀계획) ’22년 청년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
  - (가족관계 만족도) ’22년 청년 10명 중 7명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며,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직업선택기준) ' 21년 청년은 직업 선택 시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순으로 중시하나, 19~24세 연령 계층은 수입, 적성·흥미, 안정성 순으로 중시
- (선호 직장) 10년 전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이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 순이나, ' 21년에는 공기업, 국가기관, 대기업 순으로 선호
- (여성 취업) ' 21년 청년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육아 부담(46.3%),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 여건(13.8%) 순임
- (일·가정) 일과 가정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 21년에는 청년 2명 중 1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장 중시
- (교육 기회 충족)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청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 22년에는 청년 10명 중 8명이 교육 기회를 충족

□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최영미 외, 2019)

○ 최근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중 울주군의 인구감소와 관련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경제적 불안정성(주거 및 일자리)

- 청년층 결혼과 출산의 인식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이끈 요인은 바로 주거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경제적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결혼을 생각하더라도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서 파트너들이 수궁할 만한 적정 수준의 집을 장만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아예 결혼을 고려조차 못 한다는 절망감이 만연된 상황임
- 주거비용의 증가로 인한 실소득의 감소는 연쇄적으로 결혼 후 삶의 질 저하를 수반하게 되고 이는 곧 부부 간 갈등을 비롯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아이까지 갖게 된다면 양육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엄청난 사교육 부담은 더욱더 청년층으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옴
-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와 같은 고용의 질 저하는 미래 삶의 경제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어서 결국 일련의 경제적 측면의 원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청년층 활동의 다양성 증대(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활동)

- 청년층 활동의 다양성 증대와 가상공간에서의 교류 확대도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청년층의 활동 기회 확대에서 역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및 경제 진출의 환경 조성이다. 예전에 나타났던 대학 진학에서의 성차별은 거의 사라졌으며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의 마련은 여성이 곧바로 결혼을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당연시하게 되었음
- 이처럼 스스로의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하여 연애나 결혼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결과를 낳고 있음. 여성은 물론 남성의 경우에도 이성 교제 말고도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단체나 조직의 멤버로서 훨씬 더 폭넓고 능동적인 사회활동과 여가 활동에 매진하게 되었음

## 제2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및 제안

### 1. 인구 관련 정책 지원체계 구축 조례 개정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개정

- 2023년 기준 해당 조례는 울주군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제5조(인구정책의 시행)는 6개 조항으로 인구정책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울주군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함
- 울주군의 관련 조례의 경우 정주여건,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생애 주기, 1인 가구 지원, 거주 인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인구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인구 감소 및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울주군과 달리 보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당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청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수집 및 교육, 홍보 관련 사업과 특히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에 대한 지원 등 인구정책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

현 행	개정 의견
<p>제5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li> <li>2. 저출생·고령사회정책</li> <li>3. 전 생애주기 인구정책</li> <li>4. 1인 가구 지원정책</li> <li>5. 울주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 지원 정책</li> <li>6.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li> </ol>	<p>제5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li> <li>2. 저출생·고령사회정책</li> <li>3.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li> <li>4. 1인 가구 지원정책</li> <li>5.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li> <li>6.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li> <li>7.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li> <li>8.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li> <li>9. 군민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li> <li>10.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li> <li>1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li> </ol>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 후 제5조1항의10에 의거하여 군민 의견 적극적인 수렴 필요(가칭: 울주군 인구대응 500인 원탁토론회)
- 다수의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집행부 또는 지방의회가 시민 또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수혜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시킬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시와 광명시의 ‘500인 원탁토론회’ 를 예로 들 수 있음
  - 수원시의 경우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원시의 통합돌봄시스템의 미흡한 점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

[그림 67] 수원시 500인 원탁토론회 개최결과 예시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 따뜻한 돌봄특례시 완성을 위한 통합돌봄 500인 원탁토론회 결과 보고임

**I 주요 논의 결과**

- (브랜드명) : 1순위 **수원새빛돌봄(44%)** 2순위 새빛돌봄365(27%)
- (수행자명) : 1순위 **새빛돌봄미(42%)** 2순위 새빛반장(22%)
- (실거주 타지역 주민 서비스 이용) : **찬성(72%) vs 반대(28%)**

**II 총 평**

**잘된 점**

- (시민의견 수렴) 원탁토론 결과를 분야별 분류 및 집계하여 정책 반영
- (시민 집중도 ↑) 실시간 전자투표 방식 도입 **참여 집중도 제고**
- (통합돌봄 홍보)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도입으로 사업 및 수행자명 선정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미흡한 점**

- (특정 서비스 집중) 특정 대상 및 서비스로 선택 쏠림현상 발생
- ⇒ **선택 쏠림현상 발생가능 선택항목 제외 필요(당연 서비스로 제공)**
- ex) 식사도움 도움 등 가사서비스(48%), 퇴원환자 일시보호(56%)
- ⇒ 선택 집중 현상으로 이외 소수의견에 대해 유의미한 투표결과 미산출

**III 토론 결과**

**토론의제 1. 여러분은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 (방문가사지원) 1순위) 가사 서비스 지원: 48% 2순위) 신체활동지원: 28%
- (동행지원) 1순위) 병원동행: 38% 2순위) 일상생활동행: 30%
- (심리지원) 1순위) 은둔형 청년 심리서비스: 38% 2순위) 일동무 서비스: 24%
- (일시보호) 1순위) 퇴원 후 일시보호: 56% 2순위) 방과 후 돌봄: 41%

**토론의제 2. 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와 제공자간 학대 및 인권침해: 43%
- 종사자의 전문성 관리 및 감동 부족: 20%

**토론의제 3. 돌봄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주변인력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 31%
- 거점 공간 및 커뮤니티 구축: 26%

**선호도 투표 1. 수원형 통합돌봄 브랜드명: 수원새빛돌봄(44%)**

\* 새빛돌봄365(27%), 새빛돌봄(22%), 새빛돌봄누리(6%), 단박돌봄(1%)

**선호도 투표 2. 수원형 통합돌봄서비스 수행자명: 새빛돌봄미(42%)**

\* 새빛반장(22%), 돌봄지기(19%), 다봄이(10%), 돌봄롤러판장(7%)

**수원시 실거주중인 타지역 주민의 서비스 이용**

찬성 72%

반대 28%

## 2. 지역 여건 및 울주군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인구정책 추진

- 지역의 인구 및 이동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
  - 인구정책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를 취합하여 인구정책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울주군의 경우 각종 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시설,
  -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COVID-19시대에 적합한 스마트한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청년창업 지원,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추진이 중요
  - 특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2022년 11월 기준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 하지만 창업에 대한 욕구는 울산광역시 내 낮은 편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울주군 군민의 일자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플랫폼 개선
- 인구정책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울주군은 울주군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 군내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음. 이러한 일자리 안내 플랫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안내되는 일자리에 대한 제공 방식은 업체, 업무, 임금, 자격조건 등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성격이 강함
  - 일방적인 정보제공 차원에서의 안내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특히 해당 업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업체 문화, 일의 난이도 등)를 획득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울주군의 구직자 간의 관심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2023년 개관하여 일자리 안내 등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기존 관련 플랫폼과 센터와의 연계 사업 등을 발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울주군일자리안내지원센터 홈페이지>



○ 또한 울주군 관내 기업의 수준 및 일자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에서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울주군 내의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과 구직자 간의 연계 사업으로 기업에게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하여 정주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현 울주군의 일자리안내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고, 신청 및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
- 각 분기당 구직자 대상 세대(대학생, 청년 / 일반 구직자 / 중장년층 및 취약계층 등) 설정을 상이하게 하여 가능한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지원
- “희망일자리버스”<sup>3)</sup> 운영을 통해 방문한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기업에 대한 구인 관련자 소개 및 홍보, 현장에서 직접 면접 진행 등 실질적인 지원 가능
- 이를 통해 현 울주군일자리안내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기업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 제공 가능

3) 희망일자리버스 운영 사례는 김해시의 일자리 정책의 일환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울주군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한 희망일자리버스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대상: 관내 희망 기업 및 구직자</li> <li>• 방문장소: 관내 구인 우수 기업</li> <li>• 대상자: 구직자, 대학생, 청년 등 희망자</li> </ul>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주단위 또는 월단위</li> <li>• 참여인원: 미정</li> </ul>
운영방법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 4회, 각 분기당 대상 선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 (대학생, 청년층 등 / 일반 구직자 등 /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li> </ul>
이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작성</li> <li>• 기업소개, 현장투어 및 면접 실시</li> </ul>
참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직자: 기업 현장방문 면접 실시, 일자리 유관기관 등 연계 일자리 우선 배정</li> <li>• 기업체: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우수기업 관련 제도 마련 필요)</li> </ul>

[그림 68] 김해시 희망일자리 버스 리플렛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기업 현장 방문! 취업으로 직행!

## 김해시 희망일자리 버스



“ 관내 기업에는 지역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기회를 제공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운영개요</p> <p><b>참여대상</b> 관내 희망 기업체 및 구직자</p> <p><b>방문장소</b>   관내 구인 우수 기업</p> <p><b>대상자</b>   구직자, 대학생, 청년 등 희망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운영내용</p> <p><b>운영시기</b>   매월 셋째주 수요일</p> <p><b>참여인원</b>   40여명 내외</p> <p><b>운영시간</b>   당일 14:00~17:00</p> <p><b>출발장소</b>   대성동고분박물관 주차장</p>		
<p><b>1분기</b> 대학생, 청년층 등</p>	<p><b>2분기</b> 일반 구직자 등</p>	<p><b>3분기</b> 중장년층, 취약계층 등</p>	<p><b>4분기</b> 일반 구직자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이용절차</p> <p><b>구직자</b>   신청서 작성 제출</p> <p><b>기업</b>   기업소개, 현장투어 및 면접 실시</p> <p><b>모집시기</b>   매월 말일까지</p> <p><b>제출처</b>   김해시 기업혁신과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참여혜택</p> <p><b>구직자</b>   기업 현장방문 면접 실시 일자리 유관기관 등 연계 일자리 우선 매칭</p> <p><b>기업체</b>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p> <p><b>유관기관</b>   일자리 관련 기관별 정보 제공 등</p>	

접수문의 | 김해시 기업혁신과(055-330-3181), 김해시 일자리지원센터(055-330-3427)

□ 여성경제 활동인구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마련

- 학력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 활동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수준의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남녀 간 교육 격차는 점점 감소하고 있음
- 여성 20-30대의 교육 정도는 이제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이 높게 나타나 향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육아, 가사에 대한 부담으로 20대에는 증가하다 30대에는 감소하고 육아가 끝나는 40대 이후 다시 올라가는 M자 커브를 이루고 있음
- 게다가 출산·육아기 경력 단절은 이후 취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임
- 따라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sup>4)</sup>
- 이는 인적자본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등 보육 지원 서비스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등이 필요

□ 여성고용 및 경제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지만 울주군의 경우 2024년에 해당 센터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경력단절여성, 구직여

4) 보건복지부(2011)의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일·가족 양립을 위해 가장 먼저 정착되어야 할 부분이 직장 내 보육시설 등 보육 지원 서비스가 39.6%, 다음이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22.1%, 탄력근무제, 정시퇴근제 근로 시간 20.2%,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활용지원 17.3%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 대상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지원과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과의 매칭 등 구인·구직 관리 업무를 수행함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요사업>



-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적으로 158개소(2024년 1월 기준)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지원이 주요 사업으로 현재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음
- 이에 울주군의 경우 해당 센터를 설치 운영 측면에서 기존 지원사업 외 차별성을 두기에는 선택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에 울주군의 해당 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해당 센터를 이용 및 활용하는 군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울주군만의 차별적인 운영 방안 및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음
- 즉, 기존 설치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일자리 관련 플랫폼, 센터, 창업 센터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 및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울주군 특성을 고려한 청년 주거지원 마련

○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청년 가구 지원 관련 조례 마련 필요

- 울주군은 2024년 4월 기준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 의료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 예방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조례의 경우 모든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울주군의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핵심 세대인 청년 세대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마련이 필요함

○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의 한계

-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등)의 사업과 연계한 청년 월세 지원 등 한시적인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룸

○ 청년 가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및 사업 마련 필요

- 2024년 울주군의 1인 가구 세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어 청년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관련 정책 및 사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울주군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 및 정주여건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울주군의 청년세대 인구 증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따라서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 또는 독립하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및 사업 마련이 필요함

<울주군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

- 대상 : 19 ~39세 울주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청년 가구)
- 내용 : 울주군에 거주지를 둔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 및 관련 사업(안)은 [부록4] 참조

### 3. 인구 정착 기반 확충 마련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과 관련된 교육, 의료, 복지, 참여, 문화 등 사람 중심의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
- 지역 인재의 육성과 자치 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 내부로부터 발전이 지속될 수 있는 상향적, 내발적, 자발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울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러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안전 인식은 결국 인구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함

### 4. 울주군 유희·공간시설 종합자산관리 및 혁신적 활용

- 울주군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효율적·종합적인 운영 관리체계구축 지원
- 지역 쇠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통한 공공자산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의 노후 실태와 유희도 종합 조사하여 군민의 희망 수요를 토대로 리모델링 지원 및 용도전환 촉진
- 울주군 공공시설 종합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활용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 절약과 지역주민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공시설 활용
- 도시 내부의 쇠퇴 지역 및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지역에 지속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이 중요
- 생활 인프라는 주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일정 수준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필수적인 시설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통하여 기초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울주군 삼동면의 경우 울산 울주군 내 지역 중 가장 적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초 생활 서비스 공급에 있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1). 「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 김동신 외(2023). 지역청년층 및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01-120.
- 대한민국법령 (2014.3.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시도 및 교육청 (20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 오은열 외(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4); 67-92.
- 울산광역시(2022). 「2022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 이찬영 외(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최영미 외(201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6; 101-137
- 한국지역개발학회(2020). 「수도권지역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수도권지역 유입·정착 활성화 방안」.

광명시청([www.gm.go.kr](http://www.gm.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김해시청([www.gimhae.go.kr](http://www.gimhae.go.kr))

법제처([www.moleg.go.kr](http://www.moleg.go.kr))

수원시청(<https://www.suwon.go.kr/>)

울산광역시 울주군([www.ulju.ulsan.kr](http://www.ulju.ulsan.kr))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assembly.ulju.ulsan.kr](http://assembly.ulju.ulsan.kr))

화순군청(<https://www.hwasun.go.kr/>)

[부록1] 전라남도 화순군 벤치마킹

**“울주인구정책연구회” 벤치마킹**

□ 개 요

- 일 시 : 2024. 2. 15.(목) 08:30 ~
- 주 관 : 울주군의회 “울주 인구정책연구회”
- 장 소 : 전남 화순군
- 인 원 : 11명(의원 6, 직원 5)
- 주요내용
  - 화순 만원 임대주택
  - 24시 어린이집 운영,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 다문화팀 신설 등 인구정책 벤치마킹
- 일 정

구분	시 간		내 용
		소 요	
출발	08:30		울주군의회 출발
이동	08:30~12:00	3시간30분	리무진 버스
점심	12:00~13:10	70'	오찬 및 이동 (구지가)
인구정책 브리핑	13:30~14:30	60'	화순군청 관계자(인구청년정책과) 질의 및 응답
현장방문	14:30~15:00	30'	청년센터 시설 둘러보기
	15:00~15:10	10'	차량 이동
	15:10~15:40	30'	임대주택 시설 둘러보기(부영아파트)
귀울	15:40~19:10	3시간30분	울주군의회 도착, 해산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현황

-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을 향상
- 전세보증금을 군에서 납부(4,800만 원)해주고 입주자들에게 월 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
- 화순 부영아파트 20평형, 2026년까지 400호 공급 예정

□ 방문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연번	직 위	성 명
1	연구단체 회장	한성환 (의회운영위원장)	7	의사팀장	김해규
2	연구단체 간사	노미경	8	비서실장	유원종
3	연구단체 회원	김영철 (의장)	9	홍보기록팀장	김락현
4	연구단체 회원	박기홍 (부의장)	10	정책지원관	정혜원
5	연구단체 회원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	11	정책지원관	김정현
6	연구단체 회원	최길영	-	-	-

□ 질의응답 내용

- 만원 주택의 경우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화순군수님의 열정적인 홍보가 큰 역할을 하였음. 각종 행사 참여시 만원 주택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
- 24시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늦은 밤에 아이가 아플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 군내 24시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음. 화순군의 경우 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과하여 이를 위한 병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울주군의 경우 다수의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시 이를 지원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고민하여야 함. 특히 병원이 24시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등의 마련이 필요함









II

# 우수사례 #1 - 청년 주거 문제 해결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 02 우수사례 #1 청년 주거문제 해결

화순군  
Hwasun-gun

경향신문

2023.07.12.

### 화순 '만원 아파트' 입주 10명 중 4명 다른 지역에서 왔다

인근 광주광역시 등서 청년층 유입 군 "매년 100가구씩 400가구 공급"

화순군이 인구감소 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만원 아파트가 청년층 유입 성과를 내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10명 중 4명이 인근 광주광역시 등 화순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파악됐다.

화순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만원 임대주택(아파트)에 선정된 사업들이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일보

2023.04.26.

### 아파트 월세가 만원"... 화순에 청년들이 돌아왔다

전남 화순군이 처음 도입한 만원아파트(아파트)가 청년 인구 유입·정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소멸위기에 대응한 로프탑형과 근교주택(아파트)에서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만원 아파트는 군의 대표 청년주택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1차 50가구 입주시 모금에 500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4월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만원아파트 1차 50가구 입주자들의 출신 지역과 연령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 출신이 38%, 35세 이하가 59%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2023.06.21.

### 인구감소 막자"... '1만원 임대주택' 벤치마킹 불

입주자 50명 중 외지인 38% 달해 지역소멸 등 고민 큰 지자체 화순군에 기초지자체·민간 병행 문의 "지역 내 공실 주택 여부가 가늠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입지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은 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서울 전 18일 화순에 나열된 뉴스포스트에서 화순이 1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월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화순 인근 전남광역시 도는 물론 전북, 경남, 강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자체 관계자들의 방문 문의가 이어졌다.

매일경제

### 보증금 0원 월세 1만원 최저 대한민국에 이런 임대 아파트

SBS NEWS

### 전국 지자체 "저희도 해볼까" 화제된 임대주택

전남 화순군 '만원 아파트'

월세 1만원 임대아파트

2022.11.16.

### '증가·청년층 유입 위한 임대주택' 추진

2023.08.22.

### 화순 만원짜리 임대주택, 이상 타지역에서 신청

## 02 우수사례 #1 청년 주거문제 해결

### 추진배경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23.3.4.) 의견 수렴

일자리 부족, 자산형성과 대출, 불안정한 주거마련

**배우자나 애인과 동거하면서도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나요?**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택마련과 경제적 문제가 주된 원인

32.2%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은?**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안정적인 주거환경

40.6%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화순군

## 02 우수사례 #1 청년 주거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전국 최초!!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및 신혼 부부 세대(혼인 7년 이내)  
18세 이상 ~ 4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공급면적 68m<sup>2</sup> (20평)
- 지원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량** 총 400호(2023년 100호)
- 사업구조**



## 02 우수사례 #1 청년 주거 문제 해결



### 사업과정

- 2022. 9.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0.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수요조사
- 2022. 12. (주)부영주택 양해각서(MOU) 체결
- 2023. 4.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조례 제정
- 2023. 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원료(보건복지부장관)
- 2023. 4.~6. 제1차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50호)
- 2023. 9.~11. 제2차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50호)



10

## 02 우수사례 #1 청년 주거 문제 해결



### 주요성과

#### 주요성과

- 1, 2차 청년 만원임대주택 입주 청년 총 118명  
 ◦ 청년 82명 신혼부부 18쌍 (평균경정률 14:1)
- 1,2차 100세대 중 41세대(48명) 타 지역 청년 유입
- 연차별 계속 공급으로 타 지역 추가 인구 유입 기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공공주택 공실 감소 및 지역 활력 제고



#### 확산사례

- >> **벤치마킹**
  - 광역 3, 기초 14 직접방문
  - 그 외 지자체 전국 각지에서 전화문의 쇄도
- >> **확산사례**
  -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임대주택'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 신안군 '압해읍 임대주택'
- >> **관련기사**
  - 화순군발 '만원 임대주택' 전국 확산... 지방소멸 막는 촉매제 될까



11

III

# 우수사례 #2 -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환경 조성

##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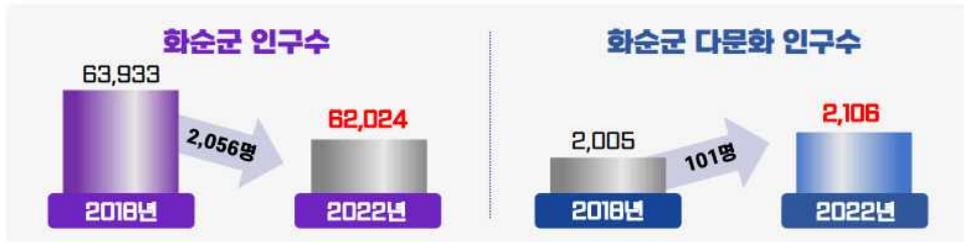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운영

### 03 우수사례 #2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 거주현황



- 화순군 인구는 63,933명(2018년) → 62,024명(2022년) 2,056명 감소  
\* 같은 기간에 다문화 인구는 101명 증가
- 화순군 총 인구는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국민 전담인력 필요성 대두**

### 사업과정

추진경과

2022. 12.

결혼이민여성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4명)

- 출신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중국(23.4)
- 채용직급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9급상당)

2023. 1.

(전국 최초) 결혼이민여성으로 구성된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

2023. 2.

화순군과 동강대학교 간 상호 협력 협약 체결(진학·진로·취업 지원)



전기행진

- 외국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 적극 검토
  - 인사혁신처 외국인 편람 참고 (외국인 고용 절차)
  - 대사관 증빙서류 (자국 공안기관발행 증명원)
  - 국정원 신원 조회 (결격 사유)



### 사업내용

#### 전국 최초(2023)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운영

다문화가족 인구 : 2,106명(전체 인구의 3.4%)

- › 다문화가족 인구 : 2,106명(전체 인구의 3.4%)
- › 화순군 다문화가족 세대현황

구분	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세대수	522세대	87	63	69	228	47	28

- › 다문화팀 현황

구분	계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원	7명	2	1	1	1	1	1

\* 라 지역 다문화팀은 내국인 공무원으로 구성, 가족복지업무 겸임

- 다문화가족 거주가구 직접 방문 및 애로사항 상담
- 병원, 은행 등 전문통역 필요 시 방문 동행
- 학교상담·친정부모 초청서류 등 작성 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03 우수사례 #2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환경 조성

#### 주요성과

##### 주요성과

##### > 추진실적

- 전화 및 방문상담 : 1,772건  
- 복지정보 417, 일자리 200, 통역 223, 일상생활 등 932
- 방문상담 : 314건  
- 서비스연계 109, 통역서비스 150, 생활실태 점검 등 55
- 시책홍보 : 44건(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등)  
- 각종 시책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한글본과 함께 SNS에 게재



##### 확산사례

- 경남 거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함평군에서 벤치마킹 방문  
- 경남 거창군청 행복나눔과(23. 6. 28. / 행복나눔과장 외 8명)  
- 전남 담양군청 향촌복지과(23. 7. 14. / 향촌복지과장 외 2명)  
- 전남 함평군청 가족행복과(23. 8. 8. / 여성가족팀장 외 1명)
- 주요 언론사(KBS, 경향신문, 광주일보 등) 취재 및 방송으로 전국적 이슈화



### 03 우수사례 #2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환경 조성

#### 향후계획

##### 다른 국적의 통번역사 추가 위촉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 중 통번역사 위촉

##### 다문화 전담 행정 인력 보강

춤춤한 서비스 추가 시행 시  
원활한 행정처리 가능

##### 다문화가족 문제 해결로 부적응 최소화

현장 중심의 서비스는 물론, 자국민 아이돌봄,  
출산·양육 도우미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굴 및 사례 관리



IV

## 우수사례 #3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 03 우수사례 #3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추진배경**

- 맞벌이, 조손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  
⇒ 지역 내 보육 수요를 반영한 “24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업내용**

- 이용대상 : 6개월 ~ 7세 이하 영유아
- 신청자격 : 화순군민 또는 화순군 소재 직장인
- 운영장소 : 어린이집 2개소
- 지원내용 :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 지원시간 : 월 최대 80시간, 24시간 운영(아침 07:30 ~ 익일 07:30)  
※ 시간당 1,000원

**추진실적**

- 이용 영유아수 : 114명(주간 99명, 야간 15명)
- 이용 상담건수 : 106건



[부록2] 행안부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사업

지 자 체	주 요 내 용
<p>부산 사상구 600백만원 (특 300, 지 300)</p>	<p>&lt; 미래아이 ‘도담도담’ 사상 다울성장터 조성 &gt; * 생활SOC 사업(도서관) 연계 ○ 주례열린도서관 내 생애주기별 돌봄 시설 조성으로 보육·교육·문화 서비스 원스톱 제공(연면적 4,879.27㎡ 중 994㎡, 지하1층~지상3층 중 3층, 신축)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외놀이터 등</p>
<p>대구 북구 800백만원 (특 300, 지 500)</p>	<p>&lt; 더·품·터* 조성 &gt; * 더불어 키우는 품속의 아이들을 위한 밝은 터전 * 생활SOC 사업(가족센터) 연계 ○ 행복북구통합가족센터 내 놀이·돌봄·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행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총 연면적 1,616.15㎡ 중 470㎡, 지하1층~지상5층 중 2~3층, 신축) ○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북카페, 다함께돌봄센터 등</p>
<p>경기 화성시 300백만원 (특 150, 지 150)</p>	<p>&lt; 화성형 아이키움센터 조성 &gt; ○ 화성시 아이 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라는 목표로 읍면동 아이키움담당관 및 가정양육지원시설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 서비스 원스톱 제공 (면적 405㎡,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산척센터, 리모델링)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교육·상담실 등</p>
<p>강원 화천군 1,200백만원 (특 300, 지 900)</p>	<p>&lt; 아이&amp;맘 헬스케어센터 건립 &gt; ○ 산후조리원 부재에 따른 산모 불편 해소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임신·출산 지원센터 조성, 안전한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 및 통합서비스 제공 (연면적 803.11㎡,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상2-4층, 리모델링) ※ 화천형 모델: 보건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임신·출산지원센터+메디컬 셔틀 ○ 공공산후조리원(산모실, 영유아실, 수유실 등), 임신·출산지원센터(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영유아 놀이공간 등)</p>
<p>충북 옥천군 600백만원 (특 300, 지 300)</p>	<p>&lt;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조성 &gt; ○ 돌봄 시설 부재, 청성초 폐교 위기 등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자치단체 유휴공간 활용 출산·보육·교육 서비스 통합 제공(연면적 194㎡, 청성면행정복지센터 생활관, 1층 리모델링 + 2층 증축) ○ 놀이공간, 프로그램실, 교육실, 공동체부엌 등</p>

[부록3] ‘2023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사업

구분	지 자 체	주 요 내 용
1	경기 동두천시 1,000백만원 (특 400, 지 600)	<p>&lt; 키즈헬스 케어센터 조성관심지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체육활동 시설 내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키즈헬스케어 센터(상담 및 운동 처방) 조성 ※ 행복드림센터 1층내 조성</li> <li>○ 놀이를 통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기초체력 측정 후 이를 토대로 상담 및 운동처방 제공 및 아동복지 정책자료로 활용</li> </ul> <p><b>(바디펌프존) 디지털 헬스케어 및 스마트 6대 체력측정 등</b>  <b>(플레이 펌프존) 체력강화형 체험 놀이</b>  <b>(상담 및 운동처방) 성장 발달 정도에 따른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운동처방 제공</b></p>
2	전북 군산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	<p>&lt; 전북 군산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공동 돌봄 체계 구축</li> </ul> <p><b>(지역주민 연계를 통해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경험·뒤틀체험 요리교실, 만들기 교실</li> <li>※ 뒤틀체험 대상지 면적 : 약448m<sup>2</sup>(추후 점진 확대 운영)</li> <li>- 마을 어르신 및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통한 돌봄체계 구축</li> <li>- 엄마들의 쉼터·헬스케어센터(문화, 힐링공간 조성)</li> </ul>
3	전남 진도군 800백만원 (특 400, 지 400)	<p>&lt; 진도 임신·출산·육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인구감소지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육아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공간 조성</li> </ul> <p><b>(1층) 생애초기 건강관리실 재활치료사와 ‘임산부 운동교실’ 연계</b>  <b>(2층) 놀이교육실, 맘쉼터, 수유·수면실</b>  <b>(3층) 모자보건사무실, 영양플러스실, 어린이 급식센터</b>  <b>(4층) 프로그램실, 소통·상담실</b></p>
4	경북 구미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	<p>&lt; 웨딩테마 북카페 「결혼스토리 문화공간」 조성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미역 2층 공실을 임대하여 결혼을 소재로한 북카페 청년문화공간조성, 임신·출산·보육 등 각종 지원 시책 종합 안내 공간조성</li> </ul> <p><b>(임신·출산·보육 등 기관별 각종 지원시책 종합 안내)</b>  <b>(청춘 북카페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 청춘 북카페, 청춘감성 테마존, 청춘남녀 만남 이벤트 및 열린공간</b>  <b>(스몰웨딩 관련 공공시설 대여 및 서비스 지원)</b>  <b>(결혼 비용 부담 경감과 함께 신혼주택마련 자금형성 지원)</b>  <b>(지역대학과 연계한 청년 취·창업 발굴 지원)</b></p>
5	경남 사천시 800백만원 (특 400, 지 400)	<p>&lt; 사천시 동(洞) 지역 장난감은행 조성관심지역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출산용품 및 장난감·도서 대여, 놀이공간, 육아 정보 나눔 공간조성</li> </ul>

구분	지 자 체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놀이체험실</li> <li>- 부모교육, 영유아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 부모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아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li> </ul> <p>○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천시 가족센터,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등)</p>

## [부록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가구 지원 조례(안) 및 사업(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통한 청년 세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가구”란 19세에서 39세로 구성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년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 가구의 주거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울주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
2.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울주군 내 단독세대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
3. 그 밖에 청년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울주군 청년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가구의 주거지원 및 삶의 질 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가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년 가구의 주거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청년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주군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사업(안)

### □ 개요

####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은 각 분기별로 진행 가능(울주군 예산집행 등 상황 고려 결정)

#### ○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의 청년 가구

####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취·창업자 : 원가구 소득 미반영(근로, 사업소득자-건강보험료부담금)
  - 취업준비생, 학생 등 무직자 : 원 가구 소득 반영(건강보험료 부양자부담금)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부모·형제 또는 친구 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울주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 계약서 상 용도 구분이 ‘주택’으로 명시되어야 함
-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 또는 취업준비생, 학생도 가능

####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대주가 울주군 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또는 타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등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1가구당 최대 4년, 생애 1회)\_울주군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집행
    -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 지원
- 지원인원
  - 울주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정